



Basic Income Magazine Issue No.6



CONTENTS

머리글	04	다시 기본소득에 질문을 던진다 _ 백승호
이 계절의 이슈 1: 너머의 사상가 김종철	07 14 18 27	민주주의가 유일한 대안이다 _ 김종철 문명의 파수꾼 김종철 _ 나희덕 문제는 공생공락이다 _ 류보선 김종철, 『녹색평론』, 기본소득 _ 금민
이 계절의 이슈 2: 쟁점토론회	32 43	기본소득과 젠더정의 _ 이지은, 김수연 부동산 투기를 막는 기본소득형 토지세 정책 _ 강남훈
화제의 인물	49 62	[조한혜정 명예교수] 사냥꾼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자 _ 인터뷰어 조문영 [김훈 소설가] 인간의 야만성과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뜻밖의 선물 _ 인터뷰어 류보선
문학	71 72 77	[시] 꽃밭의 경계 _ 안도현 [단편소설] 씨드머니 _ 편혜영 [연재소설] 봉인된 시간. 2 _ 신경숙
동향	83 90 95 103	[학술 동향] 지금 바로 기본소득의 형태로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_ 이견민 [학술 동향] 스코틀랜드 기본소득 실험 계획의 주요 내용 _ 이견민 [현장스케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_ 이관형 [해외 동향] 유럽시민 이니셔티브의 기본소득 서명운동 _ 이지은
기본소득과 나	108 113	나만의 해방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들'의 해방을 위해 _ 양다혜 기본소득 함께 요구할 동료 시민을 찾아서 _ 신지혜
친절한 교성 씨의 기본소득QnA	115	기본소득과 사회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_ 김교성
류보선의 종횡무진 기본소득 6	117	목시록과 대안의 변증법, 혹은 재난 극복의 길 _ 류보선

다시 기본소득에 질문을 던진다

백승호

계간《기본소득》

편집위원장

‘압축적 근대화’. 한국 사회의 발전을 설명하는 용어다. 경제도, 복지도 압축적으로 성장해왔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 리스트에 기본소득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 2009년 6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창립 이후 10여 년의 기본소득 운동. 소리 없는 아우성은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이어졌다, 전주 화평교회의 기본소득 실험, 충북 보은 판동초등학교의 기본소득 실험 등 민간영역에서의 의미 있는 작은 실험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서초구 청년기본 소득 실험들. 그리고 2020년 5월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과 실험 소식들은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기본소득 정당이 출범했고, 국민의 힘조차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한계는 많지만 국회에서 발의된 기본소득 법안. 10년. 다시 갈 길도 멀고 넘어야 할 산도 높지만. 상전벽해라 해도 과장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다시. 기본소득에 질문을 던진다.

기본소득이 왜 정의로운가?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 모두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시점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기본소득은 무엇인가? 1500도 쫓물이 끓는 용광로에 스러져 가는 산재노동자들의 삶에 기본소득은 어떤 의미인가? 총알 배송이라는 구호 아래 야간노동, 새벽노동에 스러져간 청년 택배 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은 어떤 의미인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돌봄의 공백 영역을 조용히 채우고 있는 여성들의 삶에 기본소득은 어떤 의미인가? 사회봉쇄 상황에서도 삶의 최일선 현장에서 필수적인 일들을 해내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은 어떤 의미인가? 임계장(임시 계약직 노인장) 어르신께 기본소득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기본소득은 이런 수많은 질문들에 충분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실질적 자유, 공화주의적 자유, 공유부 배당의 권리, 젠더평등, 협상력은 기본소득을 통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가?

이제 저 멀리 상상 속 동화애나 존재할 것 같은 ‘기본소득’이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다시, 어떤 기본소득을 우리가 실현해야 할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호 ‘기본소득과 나’에 글을 실어 주신 양다혜 선생님의 제목이 가슴에 와 닿는다. ‘나만의 해방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들의 해방’을 위한 기본소득. 어느 누구의 지배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기본소득. 원래 모두의 것을 모두의 몫으로 돌리는 기본소득. 올해 겨울, 이러한 기본소득들을 놓고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를 실현해보길 기대한다.

그리고 이번 호에는 늦었지만 김종철 선생님을 추모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고인의 큰 뜻을 기리기에 한 없이 부족하지만 고인이 만들고 싶어했던 세상을 깊이 되새기기 위함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몫은 고인이 꿈꾸어왔던 생태 - 기본소득 세상을 한발 더 앞당기는 것이다.



이번 2020년 가을호의 ‘이 계절의 이슈 1’은 ‘너머의 사상가 김종철’이다. 지난 6월 25일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시어 우리에게 큰 슬픔을 안긴 김종철 선생은 오늘날 근대문명이 처해 있는 파국적 상황을 넘어 ‘너머의 세상’에 도달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한 진정한 ‘시적 인간’이자 사상가이었다. 선생이 평생을 외롭게 일궈내어 우리 앞에 제시한 ‘생태 문명’이라는 좌표와 그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기본소득 방안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명체 전체가 공생공락할 수 있는 가장 견실한 참조점이라 할 만하다. 그러므로 선생의 삶의 흔적과 사상의 파동을 돌아보는 일은, 당연하게도 단순히 김종철 선생을 추억하는 일을 넘어서서 위기에 처한 인류가 나아가야 할 일을 탐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해서 계간 《기본소득》 2020년 가을호는 인간 김종철을 추억하는 한편 우리가 김종철이라는 거인의 어깨 어떤 곳을 딛고서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자리를 빌어 김종철 선생 원고의 재수록을 허락해준 선생의 유족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더불어 김종철 선생의 인간적, 사상적 궤적을 그리는 데 큰 힘을 보태준 나희덕, 류보선, 금민 씨에게도.

민주주의가 유일한 대안이다*

* 출처 김종철 생태사상론집,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녹색평론사, 2019년, 207~217쪽

김종철

《녹색평론》

전 발행인

기후변화와 자본주의

나오미 클라인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2014)는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한 저술로서 근년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온 책이다. 그 책의 한국어 번역본이 최근 발간되어 나왔기에 조금 들여다보다가 다음 구절에서 시선이 멈췄다.

약 7년 전, 나는 우리 사회가 끔찍한 생태계 파괴를 향해 치달아 간다는 절망감 때문에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내 능력마저 점점 쇠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사랑을 하면 언젠가는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되리라는 불안감 때문에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나는 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멋진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 아름다운 경험의 상실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비탄에 잠기곤 했다.

책을 읽다가 여기서 멈춘 것은 다른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줄곧 내 자신이 품어온 ‘비탄’의 감정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대목으로 읽혔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점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이 책의 저자가 느끼는 절박한 심정에 완전히 공감하는 독자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책에는 나와 같은 독자의 심금을 건드리는 대목이 많다. 예를 들어, 소위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세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행 열풍’을 언급할 때에도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작별을 고하려는 듯이 허무주의적 태도로 야생의 자연을 소비하

고” 있다, 라고 저자는 매우 신랄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의 절망적인 세계 현실에 진정으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이 책에 대해서,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나로서는 중요한 불만을 토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것은 우선 이 책의 분량 때문이다. 저자는 기후변화라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데에 근 800페이지(한국어 역본)에 달하는 지면을 소모하고 있다. 이미 세상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수많은 자료와 문헌이 넘치고 넘치는데 왜 이토록 방대한 지면이 새삼 필요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급적 종이와 나무를 아끼고, 소중한 자연자원을 최대한 아껴야 한다는 생각 때문만이 아니다. 오늘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특히 미국식 대학원 교육을 받은 지식인·학자들 중에는 어떠한 이슈, 어떠한 논제에 관한 저술에 있어서든 시시콜콜 관련된 온갖 이야기를 끌어다가 늘어놓는 것을 대단한 지적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에 젖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대작’을 집필하여 두각을 드러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경쟁적 연구환경에서 길러진 습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그 습관은 본질적으로 뿌리 깊은 자본주의적 욕망에 의식·무의식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오미 클라인은 기후변화의 원인은 ‘탄소’에 있지 않고, ‘자본주의’에 있다고 강조한다. 요컨대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인류사회가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여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석탄, 석유 따위 화석연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화석연료의 대규모 채취, 가공, 유통, 소비를 강요하는 구조, 즉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지당한 논리이다. 그리고 환경기술의 개발이나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혁신으로 환경위기와 기후변화가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근본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무책임한 자세인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도 그것은 우리가 되풀이해서 강조해야 할 논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회변혁운동가·환경운동가들이 보여주는 혼한 행동양태이지만, 나오미 클라인 역시 ‘자본주의’가 주범임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책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바쁘게 돌아다닌다. 불가피하게 그들은 그 과정에서 대기를 더럽히고 지구온난화 유발 가스를 끊임없이 내뿜는 비행기를 포함한 온갖 반환경적 교통수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근본적인 자기모순은 당분간은 용인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딜레마 자체에 대해서 별다른 자기성찰 혹은 적어도 불편한 ‘자의식’을 드러내는 표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자면, 어차피 우리에게도 타락한 수단에 의지하는 길 밖에 없는지 모른다. 그게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숙명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도 좋은 것일까?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할 난제 중의 난제, 즉 우리가 긴장된 정신으로 항시 주시하고 있어야 할 ‘문젯거리’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클라인의 이 책은 많은 미덕을 가진 역작이다. 그중 가장 값진 것은 기후변화라는 엄청난 위기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인류사회가 이 위기를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어 놓을 가

능성이 있다는 저자의 메시지이다. 클라인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그것은 단지 기후변화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세계가 안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난제들을 거의 모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가 질적으로 보다 높은 단계로 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믿음을 표명한다. 요컨대 저주를 축복으로, 번뇌(煩惱)를 보리(菩提)로 바꿔 놓을 가능성을 기후변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을 근거 없는 순전한 원망(願望)의 표출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기후변화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문제라면, 기후변화를 극복하려는 세계의 모든 개인적·집단적 노력들은 자본주의시스템 그 자체의 극복을 겨냥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오늘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시스템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온갖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난제들이 그 과정에서 동시에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자본주의시스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로 클라인 자신도 다양한 방법, 대안들을 열거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 새로운 세계관으로 무장한 다수 풀뿌리 활동가, 시민, 지식인에 의해서 시도되어온 온갖 다양한 사회실험들과 숭한 정치적 저항의 사례들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갈수록 패권을 강화하는 억압적인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것의 중요성이다. 그 점에서 클라인이 기대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다. 동시에 그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능동적인 정치참여와 사회적 혁신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역설한다. 그리하여 저자는 ‘시민의식’ 혹은 ‘공민의식’의 회복이 시급하다는 원칙론을 되풀이한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정치·사회 변혁의 필요성이나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거의 모든 저술이 흔히 그렇듯이, 이 책도 기후변화라는 위기적 사태를 진단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는 매우 치밀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만,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는 그다지 큰 설득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아쉬운 것은, 이 책 속에 ‘기본소득’을 비롯한 실질적인 해법들에 대한 깊고 자상한 관심이 표명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기본소득이라는 해법

거두절미하고 말한다면, 나는 ‘기본소득’은 비단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온갖 사회적·실존적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려 할 때 가장 쓸모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흔히 기본소득은 종래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비교되어 그 장단점이 거론되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기본소득의 의미는 그 정도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수급자의 자격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하는 일반적인 복지프로그램과 달리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회 구성원 전원에게 일정액의 생계비 내지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아이디어는 기존의 상식으로는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돈을 받는다는 게 합당하냐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이런 의구심은 비단 자본주의 시대를 통과하는 동안 굳어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종교적(특히 기독교) 윤리의식에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무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2016년 6월 5일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둘러싼 스위스의 국민투표에서도 독일어 사용 지역에서 반대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왔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그 지역들이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를 중시하는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는 점과 관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모처럼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부상한 것을 계기로, 이제 우리는 ‘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아니 우리가 무엇을 ‘일’이라고 불러왔는지 차분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종래에 우리가 ‘일’이라고 불러왔던 것은 모두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받는 일이었음에 반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도 돈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예컨대 아기와 노인, 환자나 장애자를 돌보는 일, 가사노동 혹은 ‘그림자 노동’으로 불리는 모든 일, 비상업적인 다양한 문예활동 등등)은 ‘일’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왔다는 사실이다. 만약에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이처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중요한 일들이 떳떳한 지위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종전과는 달리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의 건강, 자연을 돌보고 보살피는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보다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보다 인간적인 사회로 바뀌게 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노동윤리’의 허구성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그것은 이른바 ‘노동윤리’라는 게 과연 만고불변의 진리인가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하는 데 가장 좋은 길잡이는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쓴 『게으름의 찬양』(1932)이라는 기념비적인 에세이이다. 러셀은 이 글에서 ‘노동윤리’라는 게 원래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지적한다. 즉, 고대 이래 전통적으로 사회의 지배계급 혹은 귀족계층이 누려온 ‘여가’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억압적인 지배하에 있었던 하층민의 노동이 만들어낸 산물이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배세력이 꾸며낸 허구적인 아이디어가 ‘노동의 신성함’ 혹은 ‘노동의 존엄성’이었고, 그것을 기초로 ‘노동윤리’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물론 모든 노동이 고역스럽기만 한 것도 아니고, 괴로운 노동에도 즐거움이 수반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근대 이전의 하층민, 특히 농민들에게는 부역과 공납이라는 엄중한 의무가 부과되었고, 따라서 아무리 근면하게 일을 하더라도 궁핍을 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노동의 신성함이나

존엄성을 강조하는 노동윤리는 하층민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의 테두리를 넘어 대안적인 삶을 내다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념적 장치로 기능해왔던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러셀은 서구 세계에서 수천 년간 강조되어온 ‘노동윤리’란 결국 ‘노예의 윤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말할 것도 없이, 근대 이후라고 해도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산업혁명 이후는 괄목할 만한 기술의 발달로 엄청나게 생산력이 증가하고, 그 결과 잉여 노동자가 넘쳐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었고, 반면에 많은 하층민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결과로 굶어 죽거나 비인간적인 구빈(救貧)제도 속에서 갖가지 모욕을 당하면서 겨우 목숨을 이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러셀은 해묵은 노동윤리가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예나 지금이나 지배계급이 가장 달가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가난한 자들도 여가를 누려야 한다’는 아이디어이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언제나 ‘충격적’인 생각이라고 러셀은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여가’라는 것이 더 이상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상황이란, 경악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인간이 수행해왔던 수많은 일이 급격히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것을 예견해왔던 사람들이 ‘노동의 종말’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노동의 종말’

일부 전문가·지식인들은 산업혁명기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로봇이나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도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하고 있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즉, 종래의 혁신적 기술은 어떤 것이든 인간을 돕는 보조적인 기술이었음에 반해 로봇이나 인공지능 등은 아예 인간 존재 자체를 대체해버리는 초(超)기술이라는 점이다. 지난 2016년 3월 서울에서 인간 기사(棋士)와 바둑 두는 기계 ‘알파고’ 사이에 벌어진 바둑대결 소동을 통해서 우리는 비단 바둑뿐만 아니라, 신문기사나 영화 시나리오의 작성도, 의료행위도, 외국 문헌을 번역하는 일도 기계가 대신할 날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율을 느끼며 확인한 바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현실적으로 다가온 ‘노동의 종말’ 현상을 회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사회의 존속을 바란다면, 이 전대미문의 상황에 대비하여 시급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실제로, 2016년 정초에 열린 다보스 회의에서 다루어진 주 의제가 바로 이 문제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상하원 합동 경제위원회가 ‘로봇,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개최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소수 지식인들의 관심사를 넘어서서 주류 사회의 긴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이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노동윤리’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는 전통적인 노동윤리의 근저에는 ‘돈이 생기는 일’이 곧 ‘좋은 일’이며, ‘돈이 생기지 않는 일’은 ‘나쁜 일’이라는 고정관념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삶이나 사회적 삶에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이 늘 홀대를 당하고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던 근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적 논리로 볼 때도 실은 이 고정관념은 허점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돈이 생기는 일이 좋은 것이고, 돈이 생기지 않으면 나쁜 일이라고 보는 것은 결국 ‘생산’ 측면을 일방적으로 중시하면서, ‘소비’ 측면은 경시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경제가 순조롭게 돌아가자면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망각한 관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흔히 자본가가 새로운 투자를 함으로써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진실은 그 반대이다. 즉,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소비행위이다.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 가난한 시민들이 물건과 서비스를 ‘소비’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자본가나 기업가들이 계속적으로 생산시설을 확장하기는커녕 기존 생산시설의 유지조차 어려워지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건강한 경제가 유지되자면 몇 가지 필수적인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력의 크기나 경제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 따위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다. 그리하여 생산—유통—소비 과정이 사이클을 그리면서 원활하게 돌아갈 때 경제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는 평화로워질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돈을 쓰자면 수중에 돈이 있어야 하고, 또한 돈을 쓸 시간(여가)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주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 —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기계화·자동화가 이미 깊숙이 생산 현장 속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장시간 노동에 얽매어 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도 자본과 국가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해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정규직 직원들의 비정규직화를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은 노동자들은 예전보다 더 긴 노동시간, 더 힘든 노동조건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내몰려 있다.

기본소득의 재원 — 나누면 된다

지금 세계경제는 기본적으로 생산과잉, 과소소비로 인한 심각한 디플레이션 상황(즉, 경제공황)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도 큰 문제이지만, 경제상황이 이

렇다는 것은 실로 불길한 조짐이다. 이대로 간다면 전쟁 혹은 상상하기 어려운 큰 파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20~30년대의 대공황은 전쟁을 거쳐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안정을 되찾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전쟁을 해 봤자 잿더미가 된 땅에서 다시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때는 경제를 뒷받침할 자연자원이 거의 고갈돼버렸거나 지구 자체가 이미 생태적으로 거의 완전히 죽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사고의 전환’만 이루어진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은 금세 종식될 수 있다. 즉, 노동시간의 대폭적인 단축을 통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생산노동을 분담하면서 보다 많은 여가를 누릴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기본소득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전면적으로, 초기에는 부분적,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면, 우리의 삶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의 도입은 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다. 생산력이 매우 낮았던 시대라면 모를까, 지금은 과학기술 덕분에 오히려 생산력의 지나친 증대를 우려해야 할 시대이다. 실제로 지금은 온갖 생활 물자가 — 오염되거나 날림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 남아돌고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인간이 더는 괴로운 노역에 시달리고 있어야 할 이유도, 수많은 민중이 ‘풍요 속의 가난’을 견뎌야 할 이유도 없다. 하물며 예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노예생활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더욱 없다. 다수의 가난한 사람,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인간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이 시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윤리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노동시간 단축이나 기본소득 보장과 같은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우둔한 질문은 없다. 왜냐하면, 알래스카영구기금(1982년 이후 알래스카의 석유자원에서 얻어진 이익을 알래스카 주민 전체에게 배당금 형태로 매년 분배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정치철학자 와이더퀴스트(카타르대학 교수)가 명료하게 말했듯이, 사회 구성원들끼리 고르게 나눌 수 있는 재화가 없는, 그 정도로 빈곤한 사회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관건은, 우리 사회가 고르게 나눌 의사가 있느냐, 그리고 고르게 나눈다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합의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치’라는 결론을 여기서 다시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의 어리석은 탐욕에 맞서고, 기후변화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다수 민중의 삶을 보호하고, 자연세계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합리적인 정치’이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합리적인 정치란 온전한 의미의 민주정치뿐이다. 민주주의야말로 유일한 대안이다.

(이 글은 원래 《녹색평론》 제149호(2016년 7-8월) 권두 에세이로 발표된 원고에 가필한 것이다.)

문명의 파수꾼 김종철

나희덕

시인,
서울과기대 교수

김종철 선생님을 처음 뵈는 것은 1990년대 중반 대구에 있던 녹색평론사 사무실에서였다. 《작가》라는 문예지 편집회의에서 김종철 선생님 대담을 기획했는데, 막상 대담자로 나서는 이가 없었다. 《녹색평론》을 창간하신 뒤로 문단에서 대면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데다, 간간한 원칙주의자에 직설가로 소문이 나 있어서였다. 그런데 갑자기 선배들이 나더러 얘기가 잘 통할 거라며 등을 떠밀었다. 서른 살 무렵의 신인 작가로서 두렵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녹색평론》의 애독자였던 터라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대학시절 김종철 평론집 『시와 역사적 상상력』을 읽으며 몇 구절을 책상머리에 붙여놓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1980년대 역사적 실천과 시 쓰기 사이에서 고민하던 시절, “시인은 성자가 아니고, 타락되고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타락의 힘에 의지하여 진실에 이르려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되새기곤 했다.

사람의 역사적인 삶이 언제나 왜곡 속에서 영위되고 있고, 진정하게 자유로운 언어 공간이 하나의 이상적 목표인 한에서 시인의 언어가 일체의 왜곡에서 해방되어 있기를 바랄 수는 없다. 시인은 성자가 아니고, 타락되고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타락의 힘에 의지하여 진실에 이르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왜곡을 인정하고 왜곡 앞에 용기있게 맞서는 것이다. 개인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정직함이 바로 위대함일 것이다.

그런데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찾아보니 너무 소탈하고 격의 없이 대해

주셔서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부족한 질문에도 넉넉한 답을 주신 덕분에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대담을 마칠 수 있었다. 얼마 후 선생님이 산문 한 편을 청탁하셨고, 나는 「속도, 그 수레바퀴 밑에서」를 시작으로 《녹색평론》에 글을 자주 발표하는 필자가 되었다. 나중에는 편집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선생님 강연을 찾아가 듣기도 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부터 배는 격려와 가르침을 받았지만, 다른 어떤 지면보다 《녹색평론》에 글을 쓰는 일은 매번 부담스럽고 힘들었다. 예리하고 엄정한 잣대를 지닌 선생님의 시선이 늘 느껴졌기 때문이다. 안이한 생각과 정직하지 않은 말이 그분의 눈에는 여지없이 드러나 보일 것이기에, 거창한 담론이나 문학적 수사에 의지하지 않고 내 삶과 생각을 투명하게 내보일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자니, 내 좁은 시야와 둔한 감각으로는 그 치열한 삶과 드넓은 정신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또한 비평가, 영문학자, 대학교수, 생태사상가, 《녹색평론》 발행인 등의 직함이나 호칭만으로 선생님의 핵심적인 면모를 제대로 아우르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 선생님은 내가 만나본 지식인 중에서 가장 사심 없고 정확한 분이셨고, 강자에게는 비타협적 태도로 저항하면서도 약자에게는 너그러운 연민을 지닌 어른이셨다. 후배나 제자를 대하실 때도 대접을 받거나 권위의식을 내세우신 적이 없고, 당신이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면서 경청하셨다. 십여 년 전 우리 아이가 입원했을 때 두 번이나 병문안을 오셨는데, 그 후에도 아이의 안부를 묻는 일을 늘 잊지 않으셨다. 이처럼 우정과 환대를 몸소 보여주신 선생님을 통해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서로 돕고 마음을 나누는 것임을 배울 수 있었다. 이제 마음의 스승을 다시 뵈 수 없다니 그 빈 자리가 유난히 크고 허전하다. 부족하나마 선생님의 뜻을 이은 공부와 글쓰기를 다짐해 볼 뿐이다.

“이 세계라는 기계 속의 기름이 되지 말고, 모래가 되라!” 독일의 작가 귄터 아이히는 「꿈」이라는 시에서 세계의 불행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썼다. 무서운 일이 닥쳐오고 있으니 잠들지 말라고, “네 비록 피 흘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너에게도 그것은 닥쳐오고 있다”고 말이다. 이 비관주의는 염세적 종말론과는 달리 현실을 직시한 결과이며, 세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를 담고 있다. 이처럼 잠들지 않는 정신으로 세계를 지켜내려는 문명의 파수꾼들이 있어 세상은 그나마 유지되어온 게 아닌가 싶다. 김종철 선생님 역시 문명의 한계와 위험에 대해 경고의 신호를 끊임없이 타전해온 파수꾼이셨다. 자본주의 문명이라는 거대한 장치를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동조하지 않고, 모래처럼 작지만 어떤 불순물이 되어 기계에 자꾸 제동을 거는 존재. 선생은 그 모래의 역할을 오랫동안 온몸으로 해내셨다.

발행인으로서 30년 동안 한 호도 빠지지 않고 격월간으로 세상에 내보낸 《녹색평론》에는 선생님의 현실에 대한 고민과 절박한 호소가 늘 실려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호소와 경고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들 먹고 살기에 급급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당장 큰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여겼다. 정부나 국회, 심지어 환경단체들에서도 《녹색평론》이 제기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하거나 힘을 실어준 기억이 없고, 지식인사회나 문단 역시 김종철이라는 지식인을 지나친 이상주의자나 근본주의자 정도로 치부해버리며 대화나 경청을 소홀

히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자본주의라는 기계는 그렇게 의심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겨울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언제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알 수 없는 불안이 엄습해 오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문명의 파국을 조금씩 실감하고 있는 것 같다.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 전체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니 말이다. 당장 원활한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관계가 어려워지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가 머지 않은 미래의 일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세계가 잠시 멈춘 것 같은 이 시기에 왜 선생님은 떠나신 것일까. 이제야말로 파수꾼의 경고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무렵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녹색평론》 창간사를 다시 읽어본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지금부터 이십 년이나 삼십 년쯤 후에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중략)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이 생태학적 재난은 결국 인간이 진보와 발전의 이름 밑에서 이룩해온 이른바 문명, 그중에서도 특히 서구적 산업문명에 내재한 논리의 필연적인 결과로서의 사회적, 인간적, 자연적 위기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글에서 진단했듯이, 서구의 근대문명과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은 생태적 재앙을 불러왔으며, 그 폐해는 자연환경의 파괴뿐 아니라 인간 심성의 타락과 공동체적 기반의 약화로까지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적이고 부분적인 처방으로는 문명의 큰 흐름을 돌이킬 수 없고, 인간 내면에 깃든 자기초월의 능력에 바탕을 둔 생명 윤리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선생님은 역설하셨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은 물론 가장 최근 저서인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와 『대지의 상상력』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녹색평론》 초기에 시애틀 추장의 연설을 비롯해 인디언 토착문화나 농본사회에 대한 글이 자주 실렸던 것은 근대문명이 잃어버린 원형적 사유와 심성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반 일리치, 마하트마 간디, 웬델 베리,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제레미 리프킨 등의 사상도 이 지면을 통해 만날 수 있었다. 《녹색평론》은 그런 대안적 사유나 상상력을 제시하는 한편, 한국사회의 가장 민감하고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수돗물 불소화, 사대강 개발, 광우병과 구제역, 탈핵운동 등 중요한 환경 이슈들 외에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 문제 제기를 해오며 전 방위적인 의제를 다루었다. 대안교육의 중요성이나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가장 선구적으로 제안한 것도 《녹색평론》이었다. 그리고 선생님은 생명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을 ‘시’와 ‘농업’에 두셨다. “모든 시인은 생태주의자다”라는 생각으로 한 호도 빠짐없이 시에 지면을 내어주셨고, 시적 감수성의 회복이 생태문명의 핵심이라고 늘 강조하셨다.

마지막으로, 앞에 인용한 쿤터 아이히의 말에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한 대목을 나란히 놓아본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선생님이 일찍이 근대문명에 대한 급진적 사유와 민중적 상상력을 발견했던 시인

이다. 블레이크는 『밀턴』에서 17세기 혁명적 시인이었던 밀턴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예술적 지향을 모색했다. 고대사회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향수나 고대적 질서의 복원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산업혁명기에 이미 근대의 부정적 징후를 예민하고 느끼고 근대문명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한 예언자적 시선에 가깝다.

잉글랜드의 푸르고 즐거운 땅 위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세울 때까지
나는 정신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나의 칼을 내 손에 잠들어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블레이크에게 예술적 싸움의 목표가 ‘예루살렘’이라는 유토피아적 기억과 예언자적 비전에 있었다면, 현대인들에게 그 싸움의 목표는 문명의 파국을 조금 늦추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김종철 선생님은 『대지의 상상력』에서 블레이크의 ‘예루살렘’이 특정한 시대나 사회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블레이크의 이러한 반체제적 관점이 근본적으로 민중적 상상력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 주목했다.

최근 세계적 팬데믹을 겪으며 드러난 미국과 유럽의 실태를 보면, 앵글로색슨 문명이 근본적 한계 지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명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지표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시기에 선생님의 혜안을 접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설정하든 “정신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 “나의 칼을 내 손에 잠들어 있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블레이크의 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듯하다. 그러고 보니, 남은 우리의 손에 쥐어진 모래 몇 알이, 또는 씨앗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다.

문제는 공생공락이다

- ‘자연의 아들’ 김종철의 지적 여정에 대한 단상

류보선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

군산대 교수

아, 김종철!

너무 일찍 태어나 외로운 이들이 있다. 시대를 앞질러 진리를 찾았건만, 아니 시대를 너무 앞질러 진리를 찾았기에 소수만이 그 참가치를 알아봐 주는, 그래서 홀로 많은 곤경을 헤쳐가다 결국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 우리는 이런 이들을 혁명적 비극의 주인공이라 부른다. 그런가 하면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엄마’처럼 부재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진리의 빛’으로 현현하는 경우도 있다. 살아 있는 내내 진리였건만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진리성을 알아볼 수 없었던 존재, 그러나 그녀가 부재하는 순간이 되자마자 그녀의 실재적 윤리성을 감지하는 경우이다. 이를 우리는 진리적 존재들의 유령성이라 이름할 수 있으리라. 살아 있을 땐 존재감이 미약하나 죽는 순간 상징적으로 부활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실제적인 죽음과 상징적인 죽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유령적 존재라고 한다면, 부재할 때라야 그 존재성이 감지되는 이들의 존재 형식을 ‘진리적 존재들의 유령성’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대체로 세계사적 개인들의 획시기적 가치를 뒤늦게 발견한다. 그리고 그의 귀환을 바란다. 간절하게. 여기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황이 닥쳐온다. 그 상황이 닥치고 나서야 우리는 이미 이러한 ‘시계 제로’의 상황을 오래전 예측하고 경고하던 이가 있었음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 묻고자 서둘러 그를 찾는다. 한데, 아뿔싸, 그의 부재를 확인하게 된다. 아쉬운 마음에 그가 흩뿌려 놓은 흔적 하나하나를 좇아 보지만 그럴수록 더욱 그의 육성과 혜안이 그리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아, 모든 깨달음은 왜 이리

뒤늦게 오는지! 하지만 특별한 일은 아니다. 흔한 일이다.

아마도 이 순간 우리가 김종철 선생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이와 같을 터이다. 선생은 거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진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단독자였다. 아니면 니체의 경우처럼 한평생 ‘반시대적 고찰’을 해온 사상가였다. 그것도 아니면 기존의 상징질서를 거부하고 전혀 새로운 자유의 길을 찾고자 했던 세 명의 사상가 맑스, 프로이트, 니체에게 알튀세가 붙여준 이름인 ‘자연의 아들’ *enfant nature*에 가까울 지도 모르겠다. 하여간 선생은 단독자, 반시대적 사상가, ‘자연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주 일찍부터 근대문명 그 자체의 폭력성과 근대의 발전사관 안에 담긴 악마적 성격을 갈파하고 근대문명 너머의 비근대적 생태문명을 꿈꾸어 왔다. 하지만 이 꿈은 곧 근대화 과정에서 고착된 존재자들의 본성과 그 본성에 의해 추동되는 역사적 필연성을 거스르는 일 이어서, 그러니까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것과 버금가는 일이어서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에 가까운 몽상으로 받아들여졌음은 물론이다. 차츰차츰 ‘김종철들’(이문재의 표현)이 나타나 선생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동행이 시작되었지만 그것 정도로 역사의 방향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지칠 법도 하련만 하지만 선생의 결단은 단호했고 거대한 적을 무너뜨리려는 선생의 지혜는 갈수록 정교해졌다. 선생은 그렇게 현재의 상징질서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실재들을 거듭 길어 올리는 한편 대타자 언어와의 지속적인 상징투쟁을 벌인 바 있다. 선생이 그 과정을 통해 외삽시킨 실재의 언어들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상징질서가 얼마나 많은 하위주체들의 고통을 원초적으로 억압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다양한 실재적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급기야 ‘녹색 세상’은 우리가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 모두의 목적지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경과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로 많은 이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몰아넣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조금은 선명해진 것도 사실이다. 지금 같이 지구시대를 빙자한 약탈경제, 범죄경제여서는 안 된다는 것,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아도취적이고 자기기만적인 휴머니즘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 전지구의 생명과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 신화를 버리고 조금은 게으르고 조금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국가 나아가 미래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게으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할 일이 분명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 역시 약탈경제에 익숙해진 현존재의 실존형식을 바꿔야 하는 일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해서 이를 가능케 할 구체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중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함은 물론이며 이를 제도화하고 입법화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도 요구된다. 다시 말해 시대를 거스름, 아니면 적어도 시대의 방향을 바꿀 큰 지혜가 절실한 시점인 셈이다. 아마도 우리가 선생을 그리워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선생이야말로 이미 오래 전에 이런 재난적 상황을 끊임없이 경고했고 그 재난적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씬 없이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선생이 계시다면 아름다우면서도 단단하고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선생은 우리 곁에 없다. 선생이 계셔 우리의 갈 길을 지목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쩌겠는가.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어갈 수밖에.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암울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에게 선생이 남겨놓은 좌표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김종철들’이 되어 선생이 남겨놓은 좌표를 이어가며 큰 지도를 그려가면 된다. 그러면 선생이 가고자 했던 길, 그러니까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가는 길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위해 할 일이 먼저 있다. 선생이 전 생애를 걸고 찍어놓은 좌표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 글은 이 작업을 위한 밑그림으로 씌어진다.

시와 역사적 상상력 ·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 · 이용악 · 신동엽

《녹색평론》 탓에 생태사상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선생은 문학평론가였다. 그것도 70년대 이후 한국문학을 이끌었던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그리고 《세계의 문학》이 서로 끌어가려 할 정도로 각광받는 문학평론가. 그것이 선생의 출발점이었다. 선생의 초기 비평은 분석은 날카로웠고 지향점에 대한 열의는 뜨거웠다. 하지만 그 지향점이 명확하지는 않았다. 선생은 그 짧은 시 안에서, 아니면 그 짧은 시들을 모은 시집 속에서 잘 짜여진 시와 투철한 역사적 상상력 모두를 읽기를 원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투철한 역사적 상상력으로 무엇을 보아내야 하는지 혹은 무엇을 시대의 중핵으로 설정할 때 역사적 상상력에 투철한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구체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서 선생의 초기 비평에서 거의 모든 한국문학 작품이 결여형으로 자리매겨진다. 육사도, 백석도, 이상도, 김현승도, 김관식도, 서정주도, 이문구도 결여형 작가라는 매서운 평가를 비껴갈 수 없었다.

그렇다고 선생의 비평이 늘 한국문학에서 어떤 결여를 찾아내고 결여형 작가라는 이름을 붙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한 차례 전신을 행한다. 그런데 뜻밖에는 그것은 《녹색평론》을 발간한 이후부터이다. 선생은 《녹색평론》을 간행한 이후 문학평론가라기보다는 사상가의 길로 접어드는데, 그렇다고 문학에 대한 관심을 접은 것은 아니다. 간혹 문학작품을 매개로 자신의 사상을 펼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문학 작품 속에 깃든 진리내용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하기도 한다. 아마도 ‘생태적 인간-되기’라는 분명한 지향점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기 선생의 비평은 어떤 문학작품은 시적 결여나 역사적 상상력의 과소를 추궁하는 대신 ‘생태적 인간-되기’라는 전망의 구현을 찾아내고 그것을 한국문학의 한 계보로 정립하는 방향으로 전신한다. 그렇게 선생은 이용악을, 신동엽을, 심호택을, 이선관을, 그리고 죽기 직전의 김수영을, 김용택과 송기원을 한국문학의 중핵으로 하는 문학사적 지도를 그려나가 거니와, 이는 한국문학비평사에서는 희귀종에 가까운 계보학적 비평이라 할 만하다.

블레이크 · 제3세계문학 · 라블레 · 리처드 라이트 · 이시무레 미치코

선생은 영문학자이기도 하다. 엄청난 독서가이기도 하고 탁월한 번역가이기도 하다. 종합하면 독

자의 세계문학 지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세계문학에 대한 광범위한 독서와 그를 통해 만들어진 세계문학의 역사철학적 지도가 선생을 생태사상가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으리라. 선생이 그린 세계문학 지도의 큰 윤곽은 대체로 이렇다. 선생은 영문학의 성과 중 블레이크, 디킨스, 매슈 아놀드, 리비스 등에 주목한다. 선생은 그들 문학의 근대문명의 파괴성에 대한 냉철한 응시를 높이 사는 한편 그들 문학에 내재한 제국 엘리트들의 대안 없음과 식민지 민중에 대한 무감과 무정을 직시한다. 세계문학의 정전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인 시선은 블레이크나 라블레 등 서양문학의 돌연변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거니와, 그 시선은 최종적으로는 제3세계 문학이나 이시무레 미치코에 가 닿는다. 그곳에서 선생은 파괴적인 근대문명을 넘어서 수 있는 제3세계 민중들의 활력과 지혜, 그러니까 전지구의 생명체가 공존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찾아낸다.

이시무레는 타고난 무당입니다. 이 작가가 미나마타의 비극 가운데서 포착해낸 것은 이 살아 있는 생명 감각이 빚어내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극한적인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는 환자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고해정토(苦海淨土)의 원리를 발견한 거죠. 즉 지독한 절망과 고통이 도리어 축복이 되는 상황 말입니다. 이시무레는 치유 불가능한 병고의 고통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환자들이 여태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지극히 순결한 영혼의 정화를 경험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누려온 토착적 삶이야말로 어디에도 비할 바 없이 지복(至福)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 좋은 문학은 결국 삶에 대한 근본적인 긍정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악마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더라도 끝끝내 꺾이지 않는 인간정신이 있고, 아무리 할퀴고 짓밟아도 끝끝내 소멸될 수 없는 근원적인 기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문학과 예술의 몫입니다. …… 이시무레는 근대라는 것 자체를 ‘원죄’라고 규정합니다. …… 근대의 논리를 넘어가는 진정으로 새로운 문학을 꿈꾸는 시인, 작가라면 결국 이러한 진화생물로서의 인간의 위상, 즉 만물이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면적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김종철, 「대지로 회귀하는 문학-미나타의 작가 이시무레 미치코」, 『대지의 상상력』, 녹색평론사, 2019, 여기저기).

위의 글은 선생이 세계문학의 한 정점으로 위치시킨 이시무레 미치코에 대한 분석이다. 위에서 볼 수 있듯 선생은 근대문명을 인간 역사의 정점으로 설정하고 근대문명적 삶 이외의 모든 실존형식을 야만의 그것으로 억압하는 오늘날의 역사철학 자체가 사실은 현대의 비극의 기원이며 그러므로 지금의 근대문명이 촉발하는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인간을 동물의 영장으로 위치시키는 근대적 역사철학으로부터 벗어나 ‘만물이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면적 감각’을 되살려야 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선생은 이 관점으로 독자의 세계문학사를 계보화하는 바, 이 역시 우리 비평사에서는 보기 힘든 통 큰 시도이다.

흙의 문화 · 땅의 옹호 · 간디의 물레 · 농적 순환주의 · 지역화폐 · 마을공동체 · 소
농공동체, 혹은 생태문명

선생이 한국사에 있어서 한 명의 사건적 존재라면, 그것은 《녹색평론》의 지속적인 발간과 관련이 있을 터이다. 1991년 11월 ‘환경-생태학에 관련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내의 유일한 인문 교양 잡지로 출발’한 《녹색평론》은 그 이후 지금까지 쉽 없이 발간되며 한국의 담론의 장에 새 역사를 쓰고 있다. 《녹색평론》이 매호 한국 역사에 작지 않은 파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창간 이후 바뀌지 않는 《녹색평론》지만의 역사철학에 있다.

오늘날 생태학적 위기로 요약되는 이 어처구니없기도 하고 끔찍스럽기도 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결국 우리들 각자가 자기 개인보다 더 큰 존재를 습관적으로 의식할 수 있게 하는 문화를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가 생명의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문화의 재건은 우리 각자의 인간적인 자기색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이 분명하다.

따지고 보면, 현대 기술문명의 기저에는 정복적 인간의 교만심이 완강하게 버티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도를 따르는 순리의 생활을 우습게 여기면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통제와 조종 속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야만적인 폭력이 끝없이 창궐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연적 환경이든 인문적 환경이든 나날이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남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협동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상부상조의 사회관계를 회복하고, 하늘과 땅의 이치에 따르는 농업중심의 경제 생활을 창조적으로 복구하는 것과 같은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조직하는 일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생활의 창조적 재조직이 가능하려면,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겸손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정신적 자질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김종철, 「생명의 문화를 위하여 ; 녹색평론 창간사」, 김종철 편, 『녹색평론선집 1』, 녹색평론사, 1993).

《녹색평론》지의 이 기조는 이후 구체화되었을 뿐 일관되게 유지되거나, 이 잡지를 창간하고 주도한 선생의 사상 역시 이 출발점을 고수한다. 출발점을 고수했다고 해서 현실의 변화에 상관없이 선생이 사유가 고착되었다는 말이 아님은 물론이다. 초발심을 잃지 않으려면 적어도 세상의 변화만큼 변해야 하는 터, 선생은 현실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현대 기술문명이라는 상징질서가 인류의 역사가 불러온, 그러나 상징질서의 용어로는 발전이라 불리는 재난적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선생은 무엇보다 근대화, 경제성장, 개발, 산업화, 세계화로 집약되는 오늘날의 상징질서가, 비록 그것이 ‘문명된 삶을 위한 역사적 진보’로 불리어 오고 있

지만, 얼마나 인류에게 치명적인 고통과 재난을 안기고 있는가를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선생에게 ‘자본주의적 근대란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의 역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호혜적 관계와 자연세계와의 공서(共棲)에 토대를 둔 풀뿌리 민중의 자립, 자치, 자급적 삶을 일관되게 파괴해온 역사’일 뿐이다. 다시말해 자본주의적 근대란 인간 사회 전체를 ‘빈곤의 근대화’ 혹은 ‘근대화된 빈곤의 상태’,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한경쟁의 시장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적 주술에 사로잡혀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인 사나운 짐승이 되어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의 삶은 유례없이 남루하고 비참한 것이 되고, 우리 자신의 인간성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 악몽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선생은 우리의 왜곡되고 전도된 상징질서에 의해 우리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정복인간적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성실한 삶으로 오인하며 살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척결해야 할 것은 세계의 ’낙후된‘ 사회의 가난이 아니라, 세계의 ’선진‘ 사회의 풍요로움’이라고 말한다.

《녹색평론》 발간 이후 현실 사회의 변화를 때론 예측하고 또 때론 충격적으로 전유해가며 선생이 지속적으로 해온 또 하나의 대응은 풍요로운 선진 사회가 야만의 그것으로 폐기처분하고 원초적으로 폐쇄해버린 ‘잃어버린 인간의 땅’을 귀환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선생은 인류 역사를 오르내리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살살이 탐문한다. 그래야 했을 것이다. 그것은 상징질서 전반이 집요한 상징투쟁을 통해 상징질서 바깥으로 밀어낸 것들이고 그렇게 쓸모없는 실존으로 격하된 것들은 좀처럼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우므로. 하지만 선생은 상징질서가 투여한 집요함보다 더한 집요함으로 그 흔적들을 찾아내고 다시 명명하여 귀환시킨다. 흙의 문화, 땅의 옹호, ‘간디의 물레’로 상징되는 ‘농촌마을 중심의 자치, 자급, 자립적 민주주의’, 소농 중심의 농촌공동체, 풀뿌리 마을공동체, 사면적 공동체, 인디언 사회, ‘고르게 가난한 사회’ ‘농農의 세계’ 혹은 농적 순환사회 등등은 그런 과정을 통해 선생이 귀환시킨 바로 그것들이다. “농農의 세계는 인간으로 하여금 늘 자신보다도 더 큰 생존의 근원과 테두리를 의식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지상에서 살 수 있게 하는 터전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모든 건강한 지적, 윤리적, 심미적 사고와 행동의 뿌리를 이루는 종교적 감수성과 덕성이 함양되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비롯한 생태적 위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오늘날 문명사회가 끝없는 생산-유통-소비-폐기라는 지속불가능한 산업적 방식을 벗어나서 농農적 순환사회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급박해지고 있다는 것은 길게 말할 것이 없다.”

탈성장 · 공생공락의 가난 · 우정과 환대 · 게으름 권리, 그리고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하지만 선생이 가자고 한 세계는, 앞서 말했듯, 근대문명에 의해 더욱 강화된 정복인간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거역하는 일이자 그러한 현존재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역사적 필연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러니 가졌다는 의지와 가자는 선언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근대문명의 그늘에서 벗어나자면 따라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발판, 그러니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 혹은 윤리적 행

동 강령이 필요하다. 그것이 있어야만 각 개인의 윤리적 행동 혹은 소선(小善)의 실천이 모여져 ‘농적 순환 사회’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위기적 상황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오늘날 문명사회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 각 개인들이 갖추어야 할 윤리적 좌표들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터, 당연 선생은 그 좌표들을 분명하게 설정한다. 예컨대 탈성장, 공생공락의 가난, 교환이 아닌 증여의 경제시스템, 나눔과 베품의 삶, 우정과 환대, 게으름 권리 혹은 게으름 의무 같은 것들이다. 자본주의의 시스템에 의한 성장은 곧 광범위한 하위주체들과 자연의 약탈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러므로 공생공락의 지구를 위해서 이제 풍요와 성장, 그리고 그에 따른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경쟁의 강박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량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불균등한 분배 탓에 주리는 것이므로 생산, 성장보다는 오히려 분배 정의의 구현과 탈성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까닭이다. 그럴 때만 무한경쟁 끝에 대다수가 빈곤해지는 ‘빈곤의 근대화’ 혹은 ‘근대화된 빈곤의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공생공락의 가난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부유하자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서 조금만 가난해지자 마음만 먹으면 우리 사회는 공생공락의 사회로의 전회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각 개인의 게으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게으름 것을 의무화하여 과잉 경쟁에 따른 지구생태계의 근원적 파괴를 막아야 한다. 자본주의적 근대문명이 난숙한 이 시점, 그런데다 기술 상에 있어서 또 한 차례의 혁명적 변화를 경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탈성장의 의지와 자발적 가난, 그리고 게으르고자 하는 결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처럼 오늘날에 있어 게으르고자 하는 결단은 중요하지만 모두가 다 게으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살아야 하고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존재자들이 게으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선생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찾아내고 있어 주목된다. 바로 기본소득이고 지역화폐다. 선생은 아주 일찍부터 현재 지구사회의 난맥상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제도의 현실화와 입법화를 제안한 바 있다.

지금 세계경제는 기본적으로 생산과잉, 과잉소비로 인한 심각한 디플레이션 상황(즉, 경제공황)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도 큰 문제지만, 경제상황이 이렇다는 것은 실로 불길한 조짐이다. 이대로 간다면 전쟁 혹은 상상하기 어려운 큰 파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나 지금이라도 ‘사고의 전환’만 이루어진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은 금세 종식될 수 있다. 즉, 노동시간의 대폭적인 단축을 통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생산노동을 분담하면서 보다 많은 여가를 누릴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기본소득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그것을(궁극적으로는 전면적으로, 초기에는 부분적,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면, 우리의 삶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김종철, 『민주주의가 유일한 대안이다』,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녹색평론사, 2019).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상황과 ‘김종철들-되기’

이처럼 선생은 아주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주류 담론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실재의 용어들, 다시 말해 지구의 생명체 전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혼신의 힘을 다해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진실을 먼저 안 이들의 운명이 그러했듯 선생이 제시한 길은 소수집단의 그것이었고, 그 결과 지금 지구 전체는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적 상황을 경과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위기적 상황에 처한 것은 우선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된 탓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오늘날 근대문명의 악한 고리들을 모두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미 파멸 전야인 오늘날의 근대문명이 그나마 유지되었던 것은 하위주체들의 혹사에 가까운 부지런함 혹은 노동착취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한데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잠시 동안 그들의 이동이 금지되고 가혹한 노동이 중단되자 그야말로 지구 전체가 혼란에 빠져버린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근대문명이 얼마나 허약하면서도 고약한 뼈대 위에 서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파국적 상황에 근접해 있는지를 말해주는 기에 충분하다. 만약 이에 동의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책이 아니다. 대안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전회이다.

우리가 자주 선생을 떠올리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런 파국을 오래전부터 홀로 외롭게 예고하고 경고했던 이가 바로 선생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 곁을 떠나기 전 오늘날의 위기적 상황에 대해 다음과 화두를 던져놓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진보’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존 · 생활’이다. 우리는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구제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스크도 손씻기도 아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고립 생활은 면역력 약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도 빠뜨릴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의 정신적 · 육체적 건강의 첫째 조건은 타자들 - 사람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 - 과의 평화로운 공생의 삶이다. 그리고 공생의 필수적인 덕목은 단순한 소박한 형태의 삶을 적극 껴안으려는 의지(혹은 급진적 욕망)이다. 내 목소리부터 낮춰야 새들의 노래도, 벌레들의 소리도 들린다. 그래야만 풀들의 웃음과 울음도 들리고, 세상이 진실로 풍요로워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바이러스는, 공생의 윤리를 부정한,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면역력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다(김종철, 「코로나 환란, 공생의 윤리」, 《녹색평론》 172호, 2020년 5 · 6월).

이렇게 엄중한 시대인데, 살아 계시다면 우리의 길잡이 역할을 기꺼이 해주었을 선생이 우리 곁에 없다. 안타까운 일이고 속상한 일이다. 하지만 어쩔 것인가. 선생이 그려준 좌표를 따라가며 이 위기를 벗어나는 수밖에. 아니 이런 위기가 다시 오지 않을 사회를 만들어가는 수밖에.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먼저 ‘김종철들’이 되는 일이 필요할지 모른다. 선생을 좇아 우선 ‘목소리부터 낮추고, 새들의 노래도 듣고, 벌레들의 소리도 듣고, 풀들의 웃음과 울음도 들어보자.’ 그렇게 탐욕을 버리고 타자들과

의 공생의 삶을 의욕해 보자. 이렇게 ‘소선^{小善}의 길’을 여유 있게 걷다 보면 선생이 그토록 바라던 세상,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공생공락할 수 있는 대동세상이 오지 않을까.

자, 이제, 시작이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모든 출발은 첫걸음을 떼는 순간 시작되며, 때늦은 출발이란 있을 수 없는 법이니까.

김종철, 『녹색평론』, 기본소득

금민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지난 6월 25일, 김종철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 선생님은 1991년 11월 창간 이후 29년 동안 단 한 번의 결호도 없이 수행자처럼 묵묵하게 《녹색평론》을 펴냈다.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2019)의 책머리에 쓰셨듯이, “당장에 희망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수행”한 것이다. 2020년 7-8월호인 173호는 선생님의 손을 거친 마지막 호가 되었고, 이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오로지 남은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 이미 임계점을 지나 기후재앙이 시작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숨 가쁘고 버겁다. 그럼에도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포기하지 않고 일념으로 물을 길어 부으면 죽은 나무에도 꽃이 피는 기적이 가능하다는 희망, 재앙을 넘어 새로운 생태문명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격려의 메시지이리라.

김종철 선생님은 《녹색평론》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생태주의의 지평을 열고 녹색사상의 씨앗을 뿌렸다. 선생님은 생태주의의 불모지였던 한국에 생태주의 담론과 실천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먹거리 위기, 산업주의와 성장주의의 위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에너지와 식량 위기 등 현실의 문제에 대해 발언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창적인 생태사상을 가다듬어 갔다.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1999), 『간디의 물레』(1999), 『비판적 상상력을 위하여』(2008), 『땅의 옹호』(2008), 『발언 14』(2016), 『대지의 상상력』(2019),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2019) 등 선생님이 남긴 저작들은 심층생태학에서 출발하여 사회생태학을 거쳐 정치생태학으로 전개되어온 사상의 궤적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생태주의의 사회사상가로서 김종철 선생님을 전체적으로 돌이켜 보는 일은 이 지면의 범

위를 넘어선다. 대신에 여기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선생님의 발언들을 간추려보면서 기본소득론은 김종철 선생님의 생태사상을 이루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임을 확인하고자 한다.¹⁾

무엇보다 김종철 선생님은 농민기본소득 운동의 제창자이다. 소농 중심의 생태적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²⁾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김종철 선생님의 관심은 농민 기본소득과 같은 특정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다. 선생님은 농민기본소득만이 아니라 모든 개별적인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부여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의하여 생태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기본소득이 성장주의의 압박을 완화하고 사람들에게 생각의 힘을 부여한다고 말한다. “제가 기본소득 이야기를 시작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처럼 경제성장에 매달려서는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인간 파괴를 막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생존경쟁의 절박감이 줄어들게 하면, 사람들은 과연 경제성장만이 해법인가,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³⁾ 생태적 전환은 김종철 선생님의 기본소득론을 관통하는 가장 중심적인 문제의식이었다. 선생님은 특히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가져올 주체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였다. “기본소득은 최저 생계 보장은 물론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에도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⁴⁾ 이러한 관점은 기본소득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직결된다는 인식,⁵⁾ 기본소득의 재원은 공유부라는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된다.⁶⁾

김종철 선생님에게 생태적 전환이란 동시에 사회적 전환, 곧 자본주의 넘어서기였고, 그는 기본소득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발견했다. “구조적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황폐케 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임이 확실하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넘어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자본주의 문명과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느냐? 참으로 난감한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발견한 것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처음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는 이거야말로 매우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상당히 흥분했습니다.”⁷⁾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들 중 일부 좌파들은 그것이 ‘죽어가는 자본주의를 연명시키는 것 아니냐’고도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혁파가 급진적인 사회주의 혁명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가

1) 실천적으로도, 김종철 선생님은 2012년 녹색당 창당에 참여함으로써 녹색당이 기본소득 운동을 펼쳐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2014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기본소득공동행동’을 조직하기도 했다.

2)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김종철 선생님의 발언은 《녹색평론》 122호(2012), 169호(2019), 170호(2020)에 실려 있다.

3) 김종철, 「2020년은 결정적 10년. 기본소득은 민주주의와 직결」, 『피렌체의 식탁』, 2019년 12월 6일 대담: <https://firenzedt.com/?p=4225>

4) 같은 곳.

5) 《녹색평론》 144호에는 2015년 5월 7일 마포성미산마을극장에서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 주최로 행한 강연의 내용을 정리한 글 「기본소득과 민주주의」가 실려 있다.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에콜로지와 민주주의에 관한 에세이』(2019)의 3장은 “성장시대의 종언과 기본소득”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다. 3장에 실린 글 「민주주의가 유일한 대안이다」(207-217쪽)에서도 기본소득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김종철 선생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6) 2014년 3월 5일 《경향신문》에 실은 칼럼, 「김종철의 수하한화. ‘기본소득’이라는 희망」은 페인의 공유부 개념에서 기본소득을 끌어낸다.

7) 김종철,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녹색평론》 144호, 2015.

난한 사람들을 ‘임금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면 지금과 같은 약탈적 자본주의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⁸⁾ 유형적으로 볼 때, 김종철 선생님의 전환 전략은 에릭 올린 라이트 E. O. Wright가 말했던 ‘자본주의 침식’ eroding capitalism 전략과 비슷하다.⁹⁾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단번에 자본주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무력화시키고 더 나은 사회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고, 자본가들에게 매이지도 않고, 떳떳하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서로 돕고 살게 될 겁니다.”¹⁰⁾ 혁명적 사회주의의 ‘자본주의 파열’ 전략이나 사회민주주의의 ‘자본주의 길들이기’ 전략과 구별되는 ‘자본주의 침식’ 전략의 핵심은 대안적 경제조직과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새로운 주체성의 등장이다. 이처럼 기본소득과 새로운 주체성의 형성, 민주주의 문제를 핵심적 구성부분으로 한다는 점에서 김종철 선생님의 생태사상은 앙드레 고르 André Gorz의 정치생태학에 접근한다. 선생님과 개인의 대화에서 어떤 경로로 기본소득에 대하여 알게 되셨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녹색평론》의 많은 독자들은 자신이 사회신용론이나 주권화폐론을 통하여 기본소득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기본소득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그 이전이고 계기는 앙드레 고르였다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다 하더라도, 기본소득에 관한 김종철 선생님의 관점은 임금노동과 활동의 구분, 노동시간단축과 기본소득의 연동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앙드레 고르의 문제지 평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 훨씬 더 멀리 보는 시야에서 제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김종철 선생님은 은행의 부분지급준비금 제도와 신용창조에서 성장강박을 읽어냈고 일찍이 2009년부터 사회신용론 및 주권화폐제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론을 펼쳐왔다는 점 때문이다.¹¹⁾ “우리가 물어 봐야 할 것은 국가가 돈이 필요하면 그냥 화폐를 발행하면 될 것이지 굳이 왜 국채라는 것을 발행해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그것도 이자를 물어야 하는 돈을 마련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국가가 발행한 것인지 누가 발행한 것이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의 대부분은 국가가 발행한 게 아니고, 은행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만큼 빚이 많아지고, 그것은 결국 경제규모가 커진다는 뜻이지만, 이 경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꾸만 더 확대되고 팽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경제개발이죠.”¹²⁾ 2008년 이후 주요국 정부의 양적 완화로 균형재정 이데올로기에 파열이 생기고 최근에는 현대화폐이론MMT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은 기본소득과 연동된 주권화폐론도 조만간 큰 관심을 받게

8) 김종철, 「2020년은 결정적 10년. 기본소득은 민주주의와 직결」, <https://firenzdt.com/?p=4225>.

9) Wright, E. O. (2015). Eroding Capitalism: a comment on Stuart White's 'Basic Capital in the Egalitarian Toolkit'. 433-444,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32(4), 432-439

10) 김종철, 「2020년은 결정적 10년. 기본소득은 민주주의와 직결」, <https://firenzdt.com/?p=4225>.

11) 그렇다고 조세형 기본소득에 대해 김종철 선생님이 반대 입장을 가졌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녹색평론》 131호에 실린 강남훈, 박노완, 김종철 좌담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 —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를 보라.

12) 김종철, 「돈과 자유 — ‘배당경제학’에 대하여」, 《녹색평론》 115호. 이 글의 내용은 다시 정리되어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에콜로지화과 민주주의에 관한 에세이』(2019) 제3장에 수록된다. 2009년 9월, 《녹색평론》 108호에는 세키 히로노의 글 「삶을 위한 경제 — 왜 기본소득 보장과 신용의 사회화가 필요한가」를 번역하여 게재하였고, 이러한 작업은 2010년 《녹색평론》 111호, 세키 히로노 「사회신용론과 기본소득」으로 이어진다. 부분지급준비금 제도와 신용창조에 대한 대중적 계몽서로서 빌 토튼의 책 「100% 돈이 세상을 살린다」(녹색평론사, 2013)를 직접 번역 출판하기도 했다.

될 것임을 시사한다. 2009년 이후로 김종철 선생님이 꾸준히 제기해 왔던 화폐신용의 근본적 개혁에 의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앞으로 보다 풍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김종철 선생님을 추도한다.

BasicIncome Issue 2.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기본소득의 한국형 로드맵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한국형 기본소득 실현 로드맵은 기본소득을 하나의 제도로서 위치짓는 일에 머무르는 작업이 아니다. 이는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사회개혁 전략으로서 기본소득을 중심에 둔 한국 사회 개혁 전략의 모색이 될 것이다.

2020년 2월부터 한 달에 한 가지 주제로 발제자가 발표를 하고, 유튜브 채널과 텔레그램 토론방에서 회원들과 함께 논쟁을 펼친다.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제기에 대해 발표자는 수정 후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다.

계간 《기본소득》 5호(2020 여름)부터 ‘이 계절의 이슈 2’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쟁점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제를 수정 및 정리하여 소개한다. 이번 호에 소개할 글은 제4차 쟁점토론회 주제였던 “기본소득과 젠더”, 제5차 쟁점토론회 주제였던 “부동산 불평등과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과 젠더정의

이지은, 김수연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본 글은 현대의 가부장적인 복지체제와 젠더불평등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기존 페미니스트들의 기본소득 논쟁에서의 비판/반비판의 내용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프레이저의 두 가지 모델(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과 돌봄제공자 동등 모델)에 따라 이 논쟁을 정리하고, 프레이저(2013)의 ‘복합적 젠더정의 gender justice’와 이에 따른 7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프레이저의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을 지향점으로 두고, 기본소득이 각 7가지 원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의 젠더평등 효과를 피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을 함께 논의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논의를 개선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에 미칠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며, 어떤 사회상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기본소득의 젠더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가부장적 복지체제의 태생적 한계와 젠더불평등

한국은 해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국가로 도약하였다. 어떠한 성격의 복지국가로 발전하였는지는 학계의 논의가 다양하지만, 객관적인 지표 상으로 보았을 때,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크게 확대되면서, 명백히 복지국가에 진입하였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그렇다면, 젠더 관점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다양한 노력들은 어떠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한국의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여러 사회지표들은 젠더불평등 현상을 가리키고 있다. 대표적

으로 2006년부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젠더격차지수(Gender Gap Index)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9년 기준 153위 중 108위를 차지하며, 경제참여 및 기회(127위), 교육적 성취(101위), 정치적 권한(79위)에서 상당히 낮은 순위를 차지하며 높은 젠더격차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복지국가가 젠더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적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인 하이디 하트만(1979)은 근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강력한 상호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해 왔음을 설명한 바 있다. 노동시장에서 남성노동자의 질 좋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가족임금체계를 통해, 여성을 가사노동자 및 양육자로서의 역할로 안착시키는 ‘노동의 성별분업’을 확립하였다. 가정에서의 여성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다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열악한 지위를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동시적 이익을 주었다. 또한, 복지국가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시민권’ 담론에는 ‘노동자=시민’ 결합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였으며, 따라서 노동시장에 주로 참여하는 남성노동자가 시민으로 인정받았다(김교성·이나영, 2018: 11-12). 이렇게 시민권의 물젠더성, 노동의 성별분업을 토대로 현대 복지국가는 발전해왔다.

이러한 결과로, 복지급여의 기본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로 한정되었으며, 여성은 (남성)가구주에 의존하는 ‘간접적’ 시민권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남성중심의 사회보험과 여성중심의 사회부조로 구분된 ‘이중 복지체계’를 형성하며, 태생적으로 젠더차별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김교성·이나영, 2018: 13). 이러한 경로 속에서 20세기에 형성된 한국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노동의 성별분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성차별적 요소를 다수 포함하게 된다(이다혜, 2019).

이러한 남성1인 생계부양자 중심의 모델은 후기 산업사회 들어, 1.5인 생계부양자 모델로 나아간다. 구체적으로 충분히 (가족)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의 감소, 불안정 노동의 확산으로 인해, 가부장적 남성1인 생계부양자 모델의 가정이 균열되고, 여성들이 불안정 임금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2차 소득자’ secondary earner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열악한 노동조건과 여전히 여성에게 부여된 가족 내 돌봄노동 책임으로 인해, 여성은 이중부담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남녀 간 소득격차,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격차, 여가시간 격차의 형태로 중첩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보다는 개인을 더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기조와 조응하며, 젠더불평등을 확대하거나 방관해왔다.

구체적으로 젠더불평등 현상은 ‘빈곤의 여성화’, ‘불안정노동의 여성화’, ‘시간빈곤’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홍백의·김혜연(2007)은 1998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내 차별을 막는 제도적 장치와 시민권적 개념에 기초한 소득보장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불안정노동의 여성화’이다. 스페인의 페미니스트 활동가 그룹인 표류하는 위험한 여성들 Precarias a la Deriva은 유럽사회에서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를 꼽았다. 이는 단순히 여성이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과 취약성, 높은 수준의 적응성, 임기응변 능력, 다중역할 수행과 같은 여성의 일과 삶의 특징적 요소들이 노동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왔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요인은 여성의 파트타임 노동의 증가이다(신경아, 2019: 187). 셋째, 여전히 가사돌봄노동을 강요받

는 상황에서 여성의 시간빈곤 문제는 더욱 두드러졌다. 맞벌이 부부 중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183분)이 남편(41분)의 4.7배에 달해,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의 책임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 2015).

2. 페미니스트들의 기본소득 비판/반비판

판 파레이스 등은 기본소득을 무급노동에 대한 ‘인정’으로 지급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며, ‘권리’로서의 급여라고 확인했다(Van Parijs, Jacquet and Salinas, 2000: 25).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누구이며 과연 ‘보편적 기본소득이 젠더평등(Gender Equality)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다. 젠더불평등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모든 시민에게 권리로써 급여를 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어떠한 젠더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제도적 배경에 놓여있는지에 따라 기본소득이 여성에게 미칠 효과는 달라진다. 이번 장에서는 기본소득이 젠더불평등, 특히 남성은 공적영역/임금노동, 여성은 사적영역/돌봄노동이라는 ‘노동의 성별분업’을 강화 또는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분배정의에 대한 현대 이론가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의해 파생된 불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재분배의 이론적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롤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자유평등주의적 전통(liberal egalitarian tradition)의 논의들은 ‘돌봄노동’의 지위가 명시적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이론들이 ‘여가’와 동일하게 ‘가사영역의 일’을 간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평등에 대한 이상과 노동의 성별분업 사이의 긴장을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들의 광범위가 동의가 존재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Miller, Yamamori, & Zelleke, 2019: 134).

1) 프레이저의 세 가지 모델

미국의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2013)는 1970년대~80년대에 지배적이었던 페미니즘의 이론적 경향을 두 가지 ① 보편적 생계부양자(universal breadwinner), ② 돌봄제공자 동등(caregiver parity) 모델로 구분하였다. 먼저,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은 주로 여성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젠더 평등을 성취하고자 목표하며, 풀타임 고용을 막는 여성의 돌봄 책임을 벗어나게 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정책을 설계한다. 스칸디나비아 사민주의 복지국가 모델이 대표적인 예이며, 국가 주도의 아동 및 노인돌봄, 건강 보호, 교육 및 직업훈련, 광범위한 공공일자리 영역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의 완전고용 규범이 지탱되고 있다. 둘째, 돌봄제공자 동등모델은 이와 반대로, 주로 비공식 돌봄노동을 지원함으로써 젠더 평등을 꾀하며, 돌봄노동은 다른 유급고용과 동등하게 보상되거나 간주될 것을 요구한다. 이 모델은 아직 현실 복지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참여소득 제안과 유사하다(Miller, Yamamori, & Zelleke, 2019:

134-135).

그러나 프레이저는 이 두 가지 모델을 비판한다. 근거는 근본적으로 여성이 시민으로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로 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모델 모두 가구의 돌봄 책임들을 완전히 상품화할 수 없으며, 고용에 준하는 (가사영역의 노동)시간과 업무들의 경계들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두 모델은 단지 돌봄노동을 가치화하는 데 있어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약간의 향상만을 꾀하며, 여성과 남성의 진정한 평등^{true equality}을 부정한다(Miller, Yamamori, & Zelleke, 2019: 135).

프레이저는 유급고용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일(돌봄노동) 또한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③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universal caregiver model}이라 명명했다. 모든 시민들은 두 가지 조율의 일에 참여하고, 두 가지 일 모두에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한다. 프레이저와 일부 학자들은 모든 젠더를 위한 유급고용과 돌봄노동의 더 평등한 분배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면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을 지지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어떤 것^{something like a Basic Income}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Miller, Yamamori, & Zelleke, 2019: 136).

2) 기본소득 비판과 반비판

결국, 어떠한 젠더 평등한 사회상을 그리는가(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의 분담구조 및 정도)에 따라 기본소득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조점이 다르다. 프레이저가 분류한 두 가지 모델에 따라 기본소득이 젠더 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점이 달라진다(McLean, 2015).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첫 번째 모델인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을 지향하는 맥락에서, 기본소득을 주었을 때 기대·우려하는 바는 여성의 유급노동에 대한 유인과 ‘선택’과 관련된다. 이 경우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며,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줄어, 상당한 임금 격차와 빈곤 위험 등 정치·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Robeyns, 2001). 기본소득은 특히 저임금/저숙련의 여성이 양육을 위해 집안에 머무르게 하여, 노동의 성별 분업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Gheaus, 2008).

그러나 이러한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비판은, 이러한 논의가 남성이 여성의 재생산노동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측면, 즉 노동을 구성하는 ‘남성중심적 젠더규범’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유급고용’ 자체에만 관심을 둔다는 점을 지적한다(McKay, 2001). 오히려 기본소득은 유급고용시간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독립을 촉진시키고, 무급가사노동의 개인·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재비판한다(Robeyns, 2001; Pateman, 2004).

둘째, 일부 학자들은 ‘동등 돌봄제공자 모델’에서 “기본소득이 너무 중립적이어서” 돌봄을 보상하거나 가치화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이유로 Ackerman & Alstott(2004)은 어린 아동이 있는 돌봄제공자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옹호자들은 기본소득의 중립성을 젠더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특성으로 꼽았다. 중립성은 프레이저의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의 평등과 차이의 정책을 통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Fitzpatrick, 1999; Zelleke, 2008). 또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어느 누구도 노동자 혹은 돌봄제공자로 구획하지 않고 시민으로서 대하여, 남성중심적 젠더편향을 가정하는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의 단점을 피하는 동시에(McKay, 2001) 국가와 시장에서 보상하지 않는 돌봄노동의 일정 부분을 가치화할 수 있다(Robeyns, 2001; Baker, 2008).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 대한 재비판은 무급가사노동 중에서도 ‘돌봄 노동’의 특성이 간과되었음을 비판하면서, ‘돌봄 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해 사회·경제적 책임논의가 기본소득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윤자영, 2018).

이러한 두 입장의 대립은 근본적으로 ‘젠더(불)평등’이 무엇이며, 여성에게 어떠한 사회적 규범을 부여할지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일각에서는 집단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의 여성을 가정한 가운데 ‘젠더중립적인’ 남녀평등 정책을 지향하는 접근(separate spheres)도 있으며, 혹은 남성과 다른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여 돌봄을 보상하는 전략(the Recognition of Difference)도 있다(Zelleke, 2011). 그러나 전자의 ‘동등 정치’는 기존의 남성중심주의적 젠더 위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후자의 ‘차이의 정치’는 젠더차이가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다는 젠더 근본주의에 매몰될 위험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젠더평등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였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노동의 성별분업’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¹⁾

<표1> 기본소득 비판과 반비판

모델	주요 내용	BI 반대	BI 찬성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	(문제) 여성의 풀타임고용을 막는 돌봄책임 (해결) 여성의 풀타임고용을 촉진함으로써, 풀타임고용을 막는 여성의 돌봄책임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젠더평등을 성취할 수 있음 (예) 스웨덴 복지국가모델	여성의 유급노동참여가 줄어들 것임 특히 아동이 있는 저숙련/저임금 여성의 경우, 가정에 머물게 하므로, 성별 노동분업을 강화시킬 것임(마미트랙).	남성이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적이며, ‘유급노동 유인’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적합하지 않음 기본소득은 유급노동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임
돌봄제공자 동등모델	(문제) 돌봄노동의 저평가 (해결) 주로 비공식 돌봄노동을 지원함으로써 젠더평등을 꾀하며, 돌봄노동은 다른 유급고용과 동등하게 보상되거나 간주될 것을 요구함	“기본소득이 너무 중립적이어서” 돌봄을 보상하거나 가치화하는데 충분하지 않음 무급가사노동에서도 ‘돌봄 노동’에 대한 특성이 간과되었으며, 별도의 정책이 필요함	기본소득의 중립성은 젠더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특성임 중립성은 평등과 차이의 정책을 통합함

출처: 저자 정리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현금지급 실험들에서 젠더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나미비아에서의 파일럿 프로젝트의 경우, 통제집단이 부재로 실험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만,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더 많은 선택을 통해 역량이 강화되었다. 그들은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성적 서비스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신부의 영양이 개선되었다(Miller, 2017: 118-119).’ 또한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 주에서 실시한 기본소득 파일럿 실험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부채에서 벗어났으며, 가족 내 여성의 목소리가 커짐을 확인하였다(Davala et al. 2015).

3. 복합적 젠더정의와 정책적 조건들

1) 젠더정의(gender justice) : 복합적 개념

프레이저는 젠더 평등을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복잡한 아이디어로 재개념화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는 기존의 평등/분배만을 강조하는 정치, 혹은 차이/정체성/인정만을 강조하는 정치로는 진정한 젠더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또한 젠더정의를 단일한 가치나 규범으로 가정하는 것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에 근거한다. 따라서 젠더정의는 평등과 차이와 관련된 개념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 양자와 여전히 일치하지 않는 다른 규범적 아이디어도 포함한다. 젠더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로 제각기 구별되는 여러 가지 규범적 원칙을 동시에 그리고 다 같이 존중해야 한다(Fraser, 2013: 116).

첫 번째 원칙은 빈곤을 예방하는 것이다. 반빈곤 원칙(The Anti-Poverty Principle)은 다른 원칙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둘째, 반착취 원칙(The Anti-Exploitation Principle)은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급여는 착취에 대한 의존을 줄여줘야 한다. 이때, 착취에 대한 의존이라 함은 개별 가족구성원, 고용주, 국가공무원으로부터의 착취 의존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복지급여는 불평등한 관계에서 종속적 입장에 처한 사람들의 협상력(voice)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세 가지 평등원칙이다. 여기에는 소득평등(Income Equality), 여가시간 평등(Leisure-Time Equality), 존중의 평등(Equality of Respect)이 포함된다. 소득평등은 일인당 실질소득에 대한 분배를 말한다. 이때,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성이 가족 내 불평등한 분배에 의해 감춰진 빈곤(hidden poverty)에 고통받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성별 임금격차 완화 노력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여가시간 평등은 젠더 정의의 핵심으로, 무급가사/돌봄노동의 젠더 간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정될 수 없다. 존중 평등은 여성의 지위와 일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반주변화 원칙(The Anti-Marginalization Principle)이다. 사회정책은 고용, 정치, 시민사회에서의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같이 여성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남성중심주의 원칙(The Anti-Androcentrism Principle)으로, 남성중심주의 규범을 탈중심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관행을 재평가함으로써 탈중심화가 가능하다(Fraser, 2013: 116-121). 동시에 7가지 규범적 원칙은 재분배-인정-대표의 삼원적 정의에 속한다. 분배와 인정의 정치는 비교적 독립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추구되지 않으면 여성의 종속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²⁾

2) 젠더정의와 기본소득

젠더정의의 7가지 규범적 원칙들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완전한 의미의 젠더정의

2) 가령, 빈곤완화를 위한 분배정책의 경우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여성의 지위(status)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미국의 피부양 아동이 있는 가족지원정책(AFDC)이 여성을 복지맘(welfare mother)으로 구획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표2> 젠더정의의 7가지 규범적 원칙들

no	원칙	내용
1	반빈곤원칙	빈곤 방지
2	반착취원칙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적 의존'을 완화
	평등원칙	
3	소득평등	성별 소득 격차의 완화
4	여가시간평등	남녀 간 여가시간평등
5	존중평등	여성의 지위와 일에 대한 인정
6	반주변화원칙	고용, 정치, 시민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 증진
7	반남성중심주의원칙	제도에 배태되어 있는 남성중심적 요소들의 재구성

출처: 저자 정리

를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 프레이저는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을 수용할 때만 젠더정의의 7가지 원칙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갈등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Fraser, 2013: 135). (여기서 충분성을 만족하는 완전 기본소득이 도입되었다고 반사실적 가정을 해보았을 때) 기본소득의 도입은 젠더정의의 7가지 규범적 원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직관적으로 충분한 기본소득은 '반빈곤 원칙'을 즉각 충족한다. 다음으로, (남성)가구주에 대한 경제적 의존, 고용주나 국가 관료의 착취로부터 탈출^{exit}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반착취 원칙'에도 잘 부합한다. 페이트먼은 기존의 사회정책은 양도 불가능한 '자기통치권'을 '고용'이나 '결혼'을 기초로 양도한다고 비판하면서, 기본소득이 종속^{subordination} 관계를 단절하여 자유를 확장하고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물질적 기초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Pateman, 2004: 9).

한편 기본소득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소득최저선^{income floor}이 형성될지라도, 기존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불평등 양상에 따라 기본소득이 '소득 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임금격차 완화뿐만 아니라 가구 내 '감춰진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구 내 '감춰진 빈곤'은 소득 뿐 아니라 여성의 '시간빈곤/시간결핍'과도 연계된다.³⁾ 시간빈곤의 경우 소득빈곤의 완화뿐 아니라, 무급가사/돌봄노동 영역 책임의 젠더 간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지만 해소될 수 있다. 즉, '여가 시간 평등'의 경우, 젠더 간 유급노동시간 및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평등한 시간재분배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때,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이고 정기적으로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개인의 시간에 대한 통제^{control over time}를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가구 내 더 가난한 파트너의 경우, 그래서 대부분 소득과 시간의 이중빈곤을 겪고 있는 여성의 경우, 유급노동시간, 돌봄책임,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더 많은 시간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

'존중 평등'은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 남성의 그것과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 '존중평등'은 '반착취원칙'보다 적극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여성이 생

3) 남성들이 여성의 무임금 가사노동에 무임승차하고 있기 때문이다(Fraser, 2013: 122)

계부양자(노동자)의 지위를 성취해야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다양한 혜택과 인정을 획득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균열시킨다. 나아가 결혼·가구·성적지향 등의 특성과 관계없이 개인 단위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인정하고, 쉽게 상품화될 수 없는 결속노동(affiliative work)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 (Miller, Yamamori, & Zelleke, 2019: 149).⁴⁾

‘반주변화 원칙’의 경우, 기본소득은 고용, 정치, 시민사회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와 발언을 확대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남성과 동등한 시민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 이나, 돌봄노동과 여성성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돌봄제공자 동등 모델’과 달리, 시민권 원칙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모든 정치·사회 영역에서 발언할 수 있는 물적 토대와 역량을 부여한다. 이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특징으로 인해, 여성을 피부양자나 돌봄자로 구획하지 않고 ‘사회에서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지위(status)를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반남성중심주의 원칙’의 경우, 기존의 정책에서 ‘남성중심주의’를 탈피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장정책의 욕구기반(need-based)과 보상기반(desert-based) 원칙이 아닌 시민권에 기반한 급여이다. 젠더로 구획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조건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된다는 특징으로 인해, 유급노동과 돌봄노동 사이에 젠더화된 구획을 해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해체하며, 시민사회라는 새로운 장에 대한 발견, 모든 영역에서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시키고 사회적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정리하면, 기본소득은 젠더정의의 모든 규범적 원칙들의 내용을 부분적 혹은 완전히 실현시킬 수 있으며, 그 효과의 변형성은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을 지향하는 다른 정책적 조건들과 함께 완성된다. 젠더효과는 사람들의 다양한 위치(differently situated people)에 따라 달라질 것임은 물론이다. 7가지 원칙들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으며, 기본소득은 각 원칙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상호작용하면서 분배와 인정 그리고 대표의 영역에 있는 젠더부정의를 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과 기본소득 : 정책적 조건들

금민(2020)은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은 생산과 재생산 전체에 걸친 사회적 시간의 재분배를 통해 젠더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았다. 이때,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서비스 공공화, 그리고 더불어 기본소득이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을 수립하는 전제조건인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기본소득은 개인의 경제적 독립성을 일자리와 무관하게 무조건 보장하여, 저임금 일자리와 임금에 대

4) 페이트먼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이 소득을 고용 혹은 결혼과의 고리로부터 끊어냄으로써 특히, 여성이 남성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본과의 관계에서 이전과는 다른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박이은실 2014:18에서 재인용). 또한 기본소득이 여성과 남성의 관계, 여성과 여성의 관계, 남성과 남성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박이은실, 2013).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케이지 워스(2016)는 시장 노동 바깥에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활동해 온 기본소득청소녀네트워크는 일찍이 기본소득이 “자유와 예측의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소득과 같이 이야기”해 왔다. “생활동반자를 찾는 밤(2019.07.05)”, “1인가구를 위한 독립생활개론”, “우리에게 조금 더 가족이 필요해”(2018.11-2019.04) 등의 행사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소득은 생계부양(임금노동)과 돌봄제공(무급가사/돌봄노동)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여성을 억압해 왔던 노동들에서 자유로운 활동과 관계로의 변화를 추동하는, 인간 본연의 잠재적 능력을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한 협상력을 부여하고, 남성 생계부양자에 대한 경제적 예측성을 타파한다. 둘째, 기본소득이 개별 단위로 지급됨으로써, 다양한 가족 구성의 자유를 부여한다. 셋째, 현행 징벌적/낙인적인 현행 복지제도로부터 벗어나 선별 복지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을 지향점에 두고, 기본소득과 함께 젠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임금수준 대비 기본소득의 지급수준이 높아야 한다. 둘째, 여성의 이중부담을 없애고 여가시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사회적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대안적 근로시간 체제가 필요하다(금민, 2020; 윤자영, 2018). 셋째,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 기회가 평등해야 하며, 이미 여성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성별 임금격차 완화,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원칙, 사회서비스 분야의 근로조건 제고, 이를 통해 돌봄불이익을 완화하여 남성의 돌봄 일자리 진출을 장려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윤자영, 2018). 넷째,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높아야 한다. 특히 남성이 돌봄을 적극 고려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로서,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를 관대하게 제공해야 한다(윤자영, 2018). 뿐만 아니라, 출산 및 육아휴직의 의무화/유급화, 양질의 무상 공공사회서비스 확충(Elgarte, 2008; 권정임, 2013), 일/가정 양립정책 확립되어야 한다(금민, 2020). 다섯째,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에서의 성역할 위계규범을 완화해야 한다.

돌봄의 민주화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다면 지역 사회에 전가되는 돌봄 부담은 여성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 ‘돌봄’을 비롯한 사회재생산 활동을 젠더를 넘나들며 모두가 동등하게 부담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어떤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까? 프레이저는 기본소득이 사회주의적-민주주의적-페미니스트적 통치의 한 요소로서 제도화될 때 그것은 매우 변혁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가령, 기본소득이 양질의 공공 육아와 함께 결합된다면 이성애 가구 내에서의 권력 균형을 질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로써 성별화된 노동분업에 급진적인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기본소득 지지자는 여성의 임금노동 또는 돌봄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폭력적인 가부장제와 부자유한 관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하지만, 특정 사회문화적 조건과 규범틀 안에서 남성보다 여성이(자발적으로) 돌봄/가사노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본소득 본연의 개인의 ‘실질적 자유’ 증진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돌봄의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동등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더불어 젠더 규범의 변화가 요구된다.

4. 나가며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시민권에 기반한 급여인 기본소득은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이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소득은 반빈곤, 반착취, 반주변화, 반남성중심, 소득/존중/여가시간의 평등을 일정정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일곱 가지 원칙들

은 삼원적 정의의 분배, 인정, 대표의 측면을 포괄하면서 젠더정의를 실현한다. 둘째,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의 핵심을 사회적 시간의 재구성이라고 했을 때 수반되어야 하는 정책적 조건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표준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함께 돌봄불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결론하면, 기본소득은 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의 젠더간 평등한 분배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뿐 만 아니라, 가부장적 성체제(system of sexuality: 박이은실, 2014)에 균열을 내고, ‘돌봄민주주의’와 ‘문화사회’로 이행하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다.

참고

- 금민. (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서울: 동아시아.
- 김교성, 이나영. (2018). “젠더협곡을 넘어 젠더정의로.” 《한국사회복지학》, 70(2), 7-33.
- 권정임. (2013). “기본소득과 젠더 정의.” 《마르크스주의연구》, 10(4), 105-141.
- 신경아. (2019). “노동의 불안정성과 젠더: 이론적 접근.” 《페미니즘 연구》, 19(1), 173-206.
- 박이은실. (2013). “성체제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연구》, 10(2), 43-65.
- 박이은실. (2014). “기본소득, 성해방으로 가는 기본 열쇠.” 《여/성이론》. 31. 28-76.
- 윤자영. (2018). “돌봄불이익과 기본소득.” 《한국사회정책》, 25(2), 31-55.
- 이다혜. (2019). “기본소득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근로권의 재구성을 위한 이론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60(1), 99-140.
- 웁스, 케이시. (2016).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반노동의 정치, 그리고 탈노동의 상상 (제현주 역). 파주: 동녘.
- 홍백익, 김혜연. (2007).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경향 및 원인.” 《한국사회복지학》, 59(3), 125-146.
- 통계청. (2015). “맞벌이 가구·외벌이(남편, 아내) 가구별 평균시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TM1A81Y
- Ackerman, B., & Alstott, A. (2004). Why stakeholding?. *Politics & Society*, 32(1), 41-60.
- Baker, J. (2008). All things considered, should feminists embrace Basic Income? *Basic Income Studies*, 3(3).
- Davala, S., Jhabvala, R., Kapoor Mehta, S., & Standing, G. (2015). *Basic Income: A transformative policy for India*. London, New Delhi and New York: Bloomsbury.
- Elgarte, J. M. (2008). Basic income and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Basic Income Studies*, 3(3), 1-7.
- Fitzpatrick, T. (1999). *Freedom and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London: Palgrave Macmillan.
- Fraser, N. (2013). After the Family Wage: A Postindustrial Thought Experiment. In *Fortunes of feminism: From state-managed capitalism to neoliberal crisis*. (pp. 111-135). London: Verso Books.
- Gheaus, A. (2008). Basic Income, Gender Justice and the Costs of Gender-Symmetrical Lifestyles. *Basic Income Studies*, 3(3), 1-8.
- Hartmann, H. (1979). "The Unhappy Marriage of Marxism and Feminism: Towards a More Progressive Union", *Capital & Class*, 3(2).
- McKay, A. (2001). Rethinking Work and Income Maintenance Policy: Promoting Gender Equality Through a Citizens' Basic Income. *Feminist Economics*, 7(1), 97-118.
- McLean, C. (2015) Beyond care: Expanding the feminist debate on universal basic income. WISE Working Paper No. 1. Glasgow: WISE Research Centre.

- Miller, A. (2017). *A Basic Income Handbook*. Edinburgh: Luath Press.
- Miller, A., Yamamori, T., & Zelleke, A. (2019). The Gender Effects of a Basic Income. In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 (pp. 133-153). Cham: Palgrave Macmillan.
- Pateman, C. (2004). Democratizing Citizenship: Some Advantages of a Basic Income. *Politics & society*, 32(1), 89-105.
- Robeyns, I. (2001). Will a basic income do justice to women? *Analyse*, 23(1), 88-105.
- Van Parijs, P., Jacquet, L., & Salinas, C. C. (2000). Basic income and its cognates. *Basic Income on the Agenda. Policy Objectives and Political Chances*.
- Zelleke, A. (2008). Institutionalizing the Universal Caretaker through a Basic Income? *Basic Income Studies*, 3(3), 1-9.
- Zelleke, A. (2011). Feminist Political Theory and the Argument for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 *Policy & Politics*, 39(1), 27-42.

부동산 투자를 막는 기본소득형 토지세 정책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이사장,

한신대 교수

1. 부동산 불평등과 투기의 현실

소유 불평등

<표 1>은 2018년 총 22,042,947세대 중 토지를 소유한 13,513,676세대의 백분위별 평균토지보유액(공시지가)이다. 여기서 토지 소유액이란 주택이 놓인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당연히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

<표 1> 토지소유세대 백분위별 평균토지보유액(2018년, 공시지가,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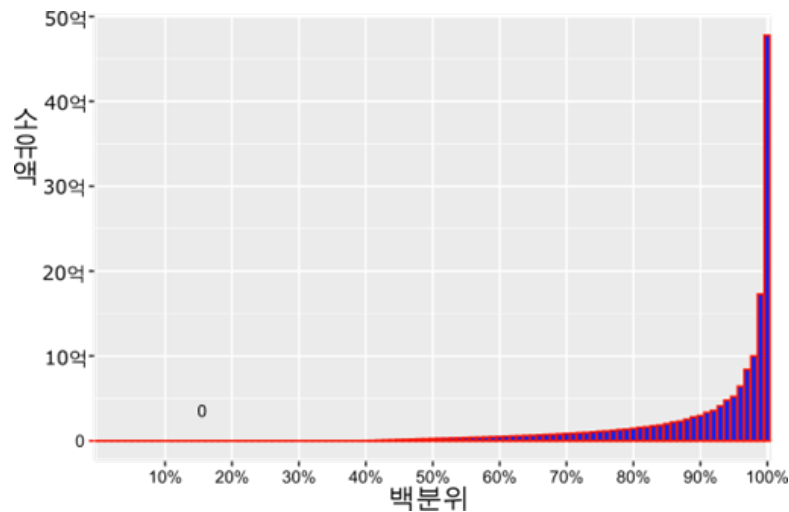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0	0.4	1.5	2.8	4.3	5.8	7.4	9	10.6	12.2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9.8	61.8	63.9	66	68.2	70.5	72.7	75	77.4	80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477.9	522	575.8	642.5	727.9	841	998.8	1,247.4	1,727.6	4,776.3

자료: 통계청

2018년 50% 분위는 평균 8천만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100%분위는 평균 47억7650만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8,529,268세대를 포함하여 전체 세대에 대하여 백분위별 평균보유액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체 세대 백분위별 토지소유액 (2018, 공시지가)



천정 모르고 오르는 집값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2016년 상반기(1월~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 5만3,865건과 2019년 하반기(7월~12월) 매매계약 건수 5만5,050건을 내려 받아 동일 아파트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 상승액을 구해 보았다.

<표 2>는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들이다. 반포대로 래미안퍼스티지 단지가 18억 1,550만원으로 1위이다. 중위 근로소득이 2,000만원 정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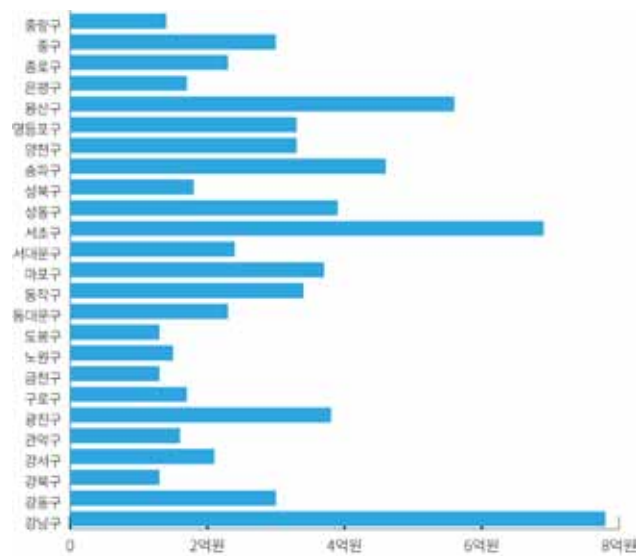
<표 2> 가격이 많이 상승한 서울 아파트(2016~2019)

아파트	주소	면적(m ²)	상승액(만원)
래미안퍼스티지	반포대로	222.76	181,550.0
현대1차	압구정로29길	196.21	176,600.0
반포	주공1단지	106.25	174,900.0
한신3차	신반포로19길	132.94	168,062.5
반포	주공1단지	106.26	167,312.5
반포	주공1단지	107.47	166,757.1
현대2차	압구정로29길	196.84	166,600.0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올림픽로4길	178.325	164,500.0
신반포17	나루터로4길	143.77	164,250.0
반포	주공1단지	108.33	163,833.3

자료: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로부터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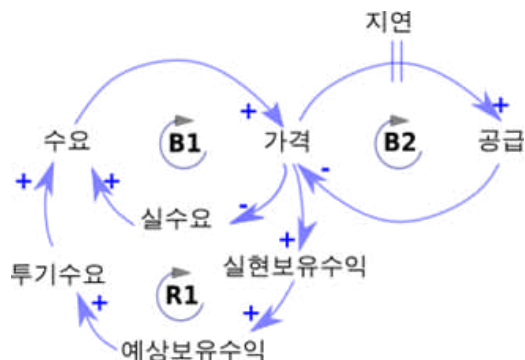
3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자치구별 상승액은 <그림 2>와 같다. 강남구의 상승액은 7.8억원으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서초구는 6.9억원, 용산구는 5.6억원, 송파구는 4.6억원 순서이다. 상승액이 가장 작은 구는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로서 1.3억원이다.

<그림 2> 서울 아파트 자치구별 평균 상승액(2016~2019, 억원)



2. 투기의 근본 원인은 불로소득

<그림 3> 불로소득이 생기는 과정



<그림 3>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 수요가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오르면 실수요가 감소해서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게 된다(B1 고리).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몇 년의 시차를 두고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감소하게 된다(B2 고리).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다.

다른 한편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수익이 생긴다. 다른 사람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을 보면 나도 집을 사면 돈을 벌 것이라는 예상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기대는 투기수요를 낳는다. 투기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기대가 실현된다. 다시 예상수익이 높아지고, 투기수요는 더욱 증가한다(R1 고리). B1, B2의 과정보다 R1의 과정이 압도적으로 힘이 세지면 부동산 투기가 활활 타오르게 된다.

3. 부동산 불패의 비밀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2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는 꺼지지 않고 있다. 투기가 지속되는 이유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규제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불로소득을 그대로 둔 채, 금융 규제, 거래규제를 통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아둔 채로 먹지 못하게 하겠다는 꼴이다. 투기가 극성일 때 발표하는 신도시 개발은 오히려 투자를 부추긴다. 공급이 늘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개발 지역 주변 땅값이 오르고 막대한 보상금이 풀려서 투기자금 원천이 된다. 여기에 투기하세요라고 가르쳐 주면서 투기자금까지 제공하는 꼴이다.

중부세 인상은 보유 수익을 직접적으로 줄여서 부동산 투자를 막는 유력한 방법이다. 그러나 핀셋 인상이 문제이다. 임대사업자 등 예외도 너무 많다. 30%의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1%의 사람들에게만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문제이다. 30마리의 고양이들이 생선을 노리고 있는데 가장 살찐 한 마리만 못 먹게 하는 셈이다.

최근 발표한 공시지가 인상 정책은 강력한 투기 대책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은 오히려 보유세를 감면하겠다는 정책을 함께 발표함으로써 효과를 무력화시켰다. 1주택만 가지고도 사고 팔면서 얼마든지 투기할 수 있다. 전문 용어로 '똥똥한 한 채'라고 한다.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잠잠하던 지방에서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투기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면 부동산 불패의 비밀은 한손으로 벌을 주면서 다른 손으로 상을 주는 정부의 이중적인 행동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유세를 높이려면 보편적으로 높여야 한다. 냉수와 온수를 함께 틀면서 목욕물을 데울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왜 이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

4. 기본소득형 토지세 정책

정책의 내용과 재분배 효과

정부의 이중적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관료들이 부동산 투자를 바라기 때문일 수

도 있다. 아니면 관료들을 통솔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원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나는 금전적 이익 극대화 가설보다 득표 극대화 가설이 더 많은 정치인들에게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이중적 행동을 하는 것은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정치적 저항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는 1주택 소유자를 생각해 보자. 안 그래도 영끌이 한 사람들이 돈을 번 것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데, 세금까지 더 내게 되면 울화가 치솟을 것이다. 이들의 울분을 달래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다 보면, 1주택 소유자 재산세를 깎아 주자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 1주택자 재산세를 조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돈을 주면 어떨까?. 바로 기본소득형 토지세 정책이 그런 정책이다. 정책의 내용은 간단하다. 보편적으로 예외 없이 토지가격의 0.5%(공시지가의 0.8%) 수준으로 토지보유세를 부과한다. 기존의 재산세 토지분은 없앤다. 늘어난 조세 수입 30조원을 모든 국민들에게 60만원씩 토지배당으로 분배한다.

기본소득형 토지세 정책으로 대략 85%의 가구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게 된다. 만약 비례세가 아니라 누진세로 설계하였다면 순수혜가구의 비율을 95%까지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조세의 자본화

기본소득형 토지세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첫번째 경로는 보유세의 자본화 현상이다. 이것은 예금과 이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1만원의 배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 주식은 얼마에 거래되어야 할까? 예금 이자율이 2%일 때, 예금 50만원이 있으면 매년 이자 1만원이 생긴다. 그러니까 매년 1만원의 배당을 낚는 주식은 예금 50만원과 동일한 가치가 된다. 이 주식은 50만원에 거래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배당의 자본화 과정이다.

같은 과정으로, 토지로 인해서 매년 30만원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1,5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30만원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1,500만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는 셈이므로 균형 상태에서 토지 가격은 1,500만원만큼 낮아지게 된다. 이것이 보유세의 자본화 현상이다.

경제 전체로 보아서 연간 30조원의 보유세를 부과하면 부동산 가격은 1,500조원 하락하게 된다. 민간 보유 부동산 가격이 1경원쯤 되니까 부동산 가격은 약 15% 하락하게 된다. 이것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1,500조원의 주택 보조금을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다.

상대적 수익률의 변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두 번째 경로는 상대가격의 변화이다. 연간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2.5%,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5%, 재산세율이 0.1%일 때, 부동산에 대하여 0.3%(토지의 0.5%가 부동산 가격의 0.3%가 된다고 가정)의 기본소득형 토지세가 부과되고 3인 가족 180만원의 토지배당이 지급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러한 전제 위에서 4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소유한 경우와 2억원의 전세를 끼고 2억원의 부채를 얻어 4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더 소유한 경우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자.

<표 3> 토지세로 인한 상대적 수익률의 변화 (단위: 만원)

기본소득형 토지세 부과 전							
2주택				1주택			
아파트	80000	가격상승	1200	아파트	40000	가치상승	600
부채	20000	이자	500	부채	0	이자	0
		재산세	80			재산세	40
		토지배당	0			토지배당	0
		토지보유세	0			토지보유세	0
		순이익	620			순이익	560
기본소득형 토지세 부과 후							
2주택				1주택			
아파트	80000	가격상승	1200	아파트	40000	가격상승	600
부채	20000	이자	500	부채	0	이자	0
		재산세	80			재산세	40
		토지배당	180			토지배당	180
		토지보유세	240			토지보유세	120
		순이익	560			순이익	620

보유세 부과 전에는 부채 2억원을 얻어서 아파트 2채를 소유할 때에는 매년 620만원의 순이익(가격상승 - 이자 - 재산세)이 발생하지만, 1채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56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50% 깎아 주면 순이익은 580이 되므로 여전히 2채를 소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보유세 0.3%를 부과하고 배당 18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부과한 후에는 1채를 소유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이와 같이 기본소득형 토지세는 상대적 수익률을 변화시켜 부동산 가격을 안정 시킨다.

<표 3>에서 2주택의 경우에는 토지보유세를 240만원 내고 토지배당을 180만원 받게 되므로 순부담자가 된다. 1주택의 경우는 토지배당 180만원, 보유세 120만원으로 순수혜자가 된다. 대다수 1가구 1주택에게 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돈을 주면서도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도록 만든다.

다른 자산 투자의 수익률보다 부동산 투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다. 기본소득형 토지세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도 부동산 투기의 상대적 수익률을 낮추어서 스스로 투자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현명한 정책이다.



사냥꾼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자

조한혜정

-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인터뷰어

조문영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

계간 《기본소득》 편집인인 백승호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얼마 전에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에 조한혜정 선생님이 출연하셨는데 기본소득을 언급하셨어요. 이 참에 기본소득에 대한 선생님의 얘기를 더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최근 몇 년간 ‘기본소득’이라는 화두가 조한 선생님의 글과 말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기본소득 컨퍼런스 자리에서도 종종 만났고, 시민배당이나 기초자산 얘기도 가끔 꺼내셨는데 낯설게 질문을 던질 생각을 못했다. 은퇴 후에 제주에서 가끔 뵈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과 장소로 나를 안내했다. 오랜 만에 인터뷰를 하겠다고 학교에서 가진 만남도 다르지 않았다. 선생님의 이야기 주머니에서 새롭게 벌인 일과 실험, 새 판을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했다. 김초엽의 소설에서 지구로 떠난 순례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까닭을 주인공이 털어 놓는 대목을 더듬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김초엽, 2019.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54쪽). 선생님의 이야기 속 인물들이, 그들이 연결해낸 만물이 지구에서 행복하려면 기본소득은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선생님, 바쁘실 텐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 생활은 어떠신가요?

- 팬데믹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지만 제주는 그런대로 살 만하죠. 일단 자연과 아주 가깝게 지낼 수 있고 동네에 살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실은 ‘방콕’하지도 않아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여전히 자주 만나죠. 일가친척 만나 뜻이요. 반찬도 서로 갖다 주고 아이들도 서로 왔다 갔다 하고요. 육지나 제주시 나가는 것을 삼가고 지역 안에서 ‘마을 콕’하는 거죠. 앞으로는 이것이 요즘 유행어로 표현하면 ‘뉴노멀’이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사태에 혼자 있는 것 좋아하거나 ‘소시오패스’ 성향인 사람들은 한결 편해졌다고도 하던데 그것이 해결책은 아닐 것이고요. 최근, 2.5 단계 들어가기 전 손자 방학 때도 초등학교 2학년 일곱 명과 품이 넓은 아빠, 동네 형과 삼촌 들이 모여서 2박 3일 ‘소년 캠프’를 했어요. 기획은 나와 엄마들이 했지만 캠프 운영은 오로지 남자들이 했고요 ‘삼시 세 끼 캠프’라고도 불렀는데 아이들이 각자 요리를 하나씩 연습해와야 했죠. 모이자마자 다락방에 가서 베개 싸움만 하더라고요. 실컷 하고 나서 요리도 하고 책도 보고 자전거도 타고 물놀이도 하고 바다 쓰레기도 줍고 넷플릭스 <플라스틱 오션> 다큐도 보고…… 실은 어른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더군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상당히 눌러 자신을 포기하고 살고 있었던 듯.

선생님 마을에서요? 표선이었나요?

네, 삼달 다방이라고 ‘장애인 프랜들리’ 게스트하우스이자 동네 극장이기도 한 내 단골 카페인데요. 주인장 부부가 사람들을 워낙 좋아하는 데다가 재미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모이는 게스트하우스예요.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청년, 이웃에 사는 요리 잘 하는 무용수, 텃밭과 닭 키우며 유유자적 하시는 은퇴한 부부까지 쉽게 연결해서 재미난 캠프를 꾸려갈 수 있었어요. ‘푸드 마일리지’가 무엇인지, 자급자족적 삶이 어떤 것인지, 동네에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서로서로의 지지자라는 것도 알게 되는 그런 시공간이었죠. 팬데믹이 지속된다면 이렇게 마을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장에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단골 가게, 단골 카페, 공부방과 작은 도서관, 노인들과 청년들이 어우러지는 마을 회관과 동네 병원을 오가는 삶. 개인이나 핵가족 단위 자가 격리보다는 좀 큰 단위의 방역 단위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보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가 생각나네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예,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왜 소년 캠프예요?

- 제주에서 손자 네 근처에서 살면서 나를 돌봐주고 있는데 인류학자의 버릇은 그대로 있는지라 관찰과 분석을 멈추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고요. 동

네 소녀들도 열심히 관찰하고는 있는데 조금 벅차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취욕구가 넘치는 소녀들이 많은데 선뜻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예요. 틱톡 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좀 더 관찰을 하면 좋은 그림이 나오겠지만 아직은 아니고요, 실은 n번방, 웰컴 투 비디오 사건, 청소년들의 일베화 현상을 보면서 남자아이들을 잘 키우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초등학교 1,2학년 되면 친구가 생기고 자기들만의 또래집단 문화를 형성하는데 스마트폰에 술술 취미를 붙이면서 엄마와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협상을 벌이더라고요, 엄마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존재니까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라는 존재 -남자가 아닌, 자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가 귀찮고 낯설어지는 거죠. 딸도 엄마와 갈등이 많은데 그 갈등의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인류학 연구에서 보면 부족사회에서 8세 정도 나이가 되면 성년식을 치르잖아요? 무서운 가면을 쓴 동네 남자 어른들이 나타나 안 가겠다고 울부짖는 소년들을 여자들로부터 떼어내서 숲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곳에서 남자가 되는 입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간의 익숙한, 어쩌면 매우 따뜻한 여자들을 세상에서 분리를 시킨 후 고된 신체적 훈련과 정신적 단련을 거치게 하죠. 그리고는 각자 수호신을 찾으라고 험한 수풀 속으로 보낸다거나 남자들만의 비밀스런 의례를 익히게 되죠. 이런 의례를 통해 여자들에게 기대지 않고 남자 인간으로서, 자기 공동체에서 해야 할 역할을 익히고 제 몫을 제대로 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이런 의례를 상당히 모계적인 사회에서 하는 것이네요.

지금 우리사회는 매우 강한 모 중심 사회이니 아들 성년식을 해야 할 사회죠. 갈수록 자신의 문제나 사회 문제를 여자 탓으로 돌리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도 정신 분석학적으로 사회화 과정에서 제대로 ‘모자 분리’를 하지 못해서, 이런 분리 과정을 거쳐야 할 때 거치지 못해서 일 거예요. 후기 근대에 접어들어 많은 병리적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현상적으로 보면 파악이 안 되고 구조적이고 정신 분석학적으로 살펴봐야 답이 나오죠. 최근 여성가족부 없애라고 또 난리가 났는데 여가부가 동네북이 된 것도, 예산이 적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힘든 부처이다 보니 그렇게 된 면도 있지만 좀 더 사회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신의 불안과

불행을 설명할 화풀이 대상, 곧 희생양을 찾는 남자들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일고 있는 차원을 인지해야 이해가 되죠. 여성가족부는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상생적 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사회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 태어난 부처로 알고 있는데 1980, 90년대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핵심 사업이었다면 지금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때고요. 지금 성폭력 문제를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치고 풀어가지 않으면 남자와 여자는 화해불가능한 갈등 관계를 맺게 되겠죠. 미국에서 흑백 문제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청년 세대의 성별 갈등이 그런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처럼 사회진출을 했고 그 과정에서 도구적 합리성을 익혔죠. 그러면 그들의 파트너인 남자들은 이해와 돌봄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랬을까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남자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사회가 급격히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여가부의 행보는 점점 어려워지고 사태를 맞아 근본적 성찰의 시기를 맞은 것 같은데 막상 다른 부처들을 보면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고 지나는 공무원들 중에 자신들이 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 회의가 든다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성과를 위한 성과주의의 병폐를 자신들도 알고 있는 거죠. 시민들이 그간의 경험으로부터 관을 재평가하고 대대적인 부처 조정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대부분 한국 사회가 급성장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부서들이라,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맥락하고 지금 비교하면 너무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 지난 몇 십년 간 각 부처로 가는 기획 재정부 예산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들었어요. 지금까지 경제성장과 성과 지표에 급급한 발전국가의 그림에서 부처들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국가 운영을 사유해야 할 때죠. 소유적/소비적 세계관을 바꾸어 내면서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몇 년 전에 청년들과 기본소득이 얼마면 적절하냐는 주제를 두고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료에 교통비 주거비와 최소한의 문화생활비까지 하면 최저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폐순환체계에

서 조금 벗어나와 상호부조 관계를 맺고 있는 청년들이 말하는 액수는 70만원이었어요. 70만원으로 최소한의 안정적 조건을 확보하면서 원하는 알바를 하고 그 외 시간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쓰는 형태의 삶을 실제로 실험하고 있었어요. 후자처럼 기본소득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상상, 자유훈과 공생의 감각을 키워가는 흐름과 연동해서 사유해야 해요. 전국민이 참여하는 삶 전환 프로젝트라는 큰 그림 아래 심층적 현장 연구와 실험, 그리고 여론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돈줄을 국가가 쥐고 있으니 국가의 성격과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요. 마침 이번 재난 지원금 배분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운용되는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었을 테니 좀 더 실현 가능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겠죠?

현재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도 경제학, 사회복지학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작업하시는 걸로 알아요. 기본소득 사상의 역사야 오래됐지만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운동이 형성됐기 때문에 한국 기본소득운동도 그 영향을 받았고, 당장 실행될 제도라기보다 도래할 세계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많기도 했어요. 한편에선 《녹색평론》처럼 생태 운동 진영도 참여했고. 그러다 알파고-이세돌 대국을 거치면서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소멸 논의가 급성장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재난 수당 지급 과정에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면서 이제는 전 국민의 언어가 되가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의 일이에요. 기존의 운동 조직인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이나 LAB2050 같은 민간 싱크탱크도 본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으로 압니다.

- 안전망이 없는 사회일수록 재난 지원금과 기본소득 이슈는 본격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빨리 기본소득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테죠. K 방역이 정말 성공한 것이라면 이어서 K 보편 복지가 이루어질테죠.

근데 이렇게 만인의 이슈가 되고 나니 상당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1990년대 대학에서 성 소수자 권리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는 반대도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혐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도 않았죠. 당시에는. 하지만 최근에 보듯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법과 정책의 영

역 안으로 이슈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반대 움직임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어요. 기본소득 이슈의 경우, 20세기 유럽의 사회보장체제와 복지국가 이념을 보편적 규범으로 가정하는 학자들, 임금 노동 중심의 생계를 '정상적' 삶이라 믿는 사람들의 반대가 유독 심해요. 기본소득 찬반론자들의 설전을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기본소득'이 모두의 이슈로 혹 들어오고 나니 새로운 고민이 생겨요.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얘기하게 되니 다들 액수와 예산을 갖고 공방을 펼치죠. 30만원이다, 월 50까지 가능하다…… 물론 기본소득당은 60만원도 주장하지만. 근데 월 50 준다고 세상이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기본소득에 '미래'의 시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그 정당성을 계속 설득을 하는 작업이 주였잖아요. 기본소득이라는 화두가 노동, 일, 젠더, 가족, 생태 등 우리가 씨름해온 주제들을 어떻게 달리 생각할 수 있게 하는지? 어떤 새로운 상상을 열어젖히는지? 그런데 미래의 시간을 염두에 두었던 기본소득이 정책의 언어로 현실화 단계를 밟게 되니 스스로 준비가 안 되었던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 된다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즐거운 공상을 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이 '요만큼' 주어졌을 때 어떤 다른 보장이나 활동과 결합이 되어야 할지, 그러면서 '운동'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어떻게 계속 가져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 기본소득 논의하는 자리에 나뉘지 않거나 부지런히 가보는 편인데 늘 좀 어중간하다는 느낌을 받아왔어요. 당위성을 말하는 '전문가'들은 많은데 국민을 설득해낼 수준의 명쾌한 글은 찾지 못했고 발을 땅에 붙인 설득력 있는 경험적 연구도 잘 안 보여요.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며 얼마나 어떻게 필요하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하죠. 그런 언어와 논리를 찾아내는 시도로 저는 우동사(우리동네 사람들) 사례를 자주 드는데, 집을 공유할 경우 70만원 정도면 알바 한두 가지 하면서 나뉘어 잘 살 수 있다는 계산이죠. 집도 20년 돈을 빌려 공동 구매한 집이라 쫓겨날 위험이 없고요. 한 집에 4-5명이 살고 한 방에 두 명이 같이 지내는데 룸메이트가 있는 것을 힘들어 하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동사

사람들은 급하게 기본소득 운동할 생각은 없고 각자의 삶의 속도를 존중하며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어요. 나는 무슨 정책 이든 다른 시민들을 설득시킬 언어가 삶의 실험 한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인데 한국에서는 너무 ‘석학’들 책만 읽고 실험의 장을 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경험의 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모여져 이론이 되는 것인데 외부에서 빌려온 이론 따로, 사례 따로 놀기도 하고요. 나는 그것을 ‘식민성’이라고 불려왔는데 이번 팬데믹 사태 지나면서 K 방역으로 자존감 회복도 좀 된 듯 하니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 해봅니다. 불편하면 좀 다른 삶의 실험을 해보고 좋은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나누는 공론 자리도 만들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알리고 자체 언론도 만들면서 국가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때가 왔어요. 정치권은 싸우느라 너무 바빠서 앞으로 점점 더 낙후 될 것 같으니 시민들은 정치권을 일정하게 포기하고 우리들 안에서 활발하게 지식 생산을 하면서 정치권을 가르치고 구체적 대안을 실행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러기 위해 다양한 국민들이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나는 기회만 있으면 택시 기사 건 목욕탕에서 만난 분이건 인터뷰를 해요. 기본소득 이야기 꺼내면 대부분의 택시 기사는 “왜 부자에게 돈을 주냐?” 그 한 마디로 끝이 예요. 그런데 관료제 비용과 경기 회복의 차원에서 —부자가 하루 밤에 70만원을 돈을 써도 경기 부양이 된다는 식— 설명을 하면 금방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목욕탕에서 만난 60대 아주머니는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못 사는데 빚까지 물린다는 거야?”라며 재난 지원금에 대해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빚’이라는 단어에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장 인터뷰를 해보면 세대별, 성별로 얼마나 다른 전제로 사유를 하는지 알게 되어요. 여기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고 있으니 화로 가득 찬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민심을 파악해야 하니 이런 저런 이런 이야기들이 다 꺼내 져야 하죠. 대대적인 대국민 학습이 아주 섬세하게 이루어지는 판들이 만들어져야 하죠. 모두가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방향으로 가면서 혁신적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그야말로 재난일 온갖 비난과 원망 속에서 재난을 낳을 뿐일 거예요. 모두가 만물은 서로 적대한다고 여기게 된 상황이라 국가 정

치라는 것은 무엇을 해도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울리히 벡의 표현대로 통제하려 들면 할수록 더욱 문제가 생기는 ‘위험사회(Risk Society)’로 치달을 뿐이죠. 시민들이 좀 더 길고 큰 삶의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고민을 나눌 학습의 시공간이 절실해요.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해요. 이 시대에 ‘학습’이란 게 무엇인지, 무엇이어서 하는지…….

- 기본소득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각자 선 자리에서 생각을 풀어내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좁혀갈 수 있어야겠죠. 학자와 현장 연구자, 시민이 제대로 제도를 마련할 언어를 만들어가야 하죠. 유튜브 채널을 잘 활용해도 좋는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는 ‘미스터 트롯’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쟁적인 구조-경쟁오디션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동을 시키고 있죠. <사랑의 콜센터> 같은 후속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고요. 서로의 상황에 공감하면서 감동시키려는 연출이 너무 뻔히 보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주목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정당성의 언어로 기본소득을 말해왔다면 이제는 동기 상의 위기 상황에서 공감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버마스의 소통 이론에 따르면 ‘도구적 합리성’의 언어를 넘어서 ‘의사소통적 합리성’로 말하게 되는 것, 제가 즐겨하는 표현으로는 ‘사냥꾼의 세계’를 넘어서 ‘채집과 돌보는 자들의 상호부조하는 세계’를 상상하면서 기본소득 논의의 장을 펼쳐야 한다는 거죠.

지난 십여 년 동안 한국은 ‘복지국가’라는 이름 아래 주먹구구식 선택적 복지로 돈을 뿌려왔어요. 가난을 입증해야 하는 복지제도는 많은 국민들을 국가 돈을 타내는 사냥꾼으로 만들어버렸고요. 난개발식 복지 제도는 이미 많은 국민들을 ‘돈 타내는 꾀’으로 만들어버려서 기본소득제도 실현에도 걸림돌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세상’에 관해 단순히 화두만 던지는 게 아니라 직접 판을 만들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선생님은 평생 하셨

쥬. 청년 정책, 청년 활동에 계속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 배경이기도 하고요. 청년거버넌스 장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면서 페미니즘을 비롯해 새로운 실험과 시도를 장려했던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라서 더 충격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장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실험이었다고 생각하시는 사례는 어떤 건가요?

-서울시와의 인연은 역사가 길쥬. 1997년 IMF 경제 위기에 서울시 실업대책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청소년 정책에 깊이 개입했어요. 내가 몰두해온 사업은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일명 하자센터 프로젝트인데 고건 시장 때 만들어졌어요. 청소년들이 서태지처럼 학교가 몸에 맞지 않는다고 튀어나오던 시점, 1997년 IMF 경제 위기, 그리고 본격적으로 문화산업 시대가 열리던 시점에 태어났쥬. 하고 싶은 것이 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먹고 살게 하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청소년 센터로 문을 열었쥬. 작업하러 오는 청소년들은 ‘죽치고 있다’고 죽돌, 그들과 함께 작업하기 위해 ‘판을 깔고 돌린다’는 면에서 교사와 작업자들은 판돌이라고 불렀어요. 모두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자율적 작업장으로 그 때 그곳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지금 문화산업을 비롯한 창의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쥬. 2004년 중반에 하자 작업장 학교 담임이었던 김종휘씨가 [노리단]이라는 공공문화예술 기업을 만들었어요. 노리단은 건축자재를 재활용해서 갖가지 창의적 악기를 제작하고 연주하는 창작 예술가, 청소년, 기획가 11명으로 시작했어요. 종휘씨와 그 ‘일당’이 아주 열정적으로 뛰었쥬. 2007년에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인증을 받았고요.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다세대가 함께 하는 공연, 워크숍, 악기 제작회사로 사업을 키워갔쥬. 김종휘 대표가 호주의 예술가를 만나면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어린이 서커스단 ‘벤 포스타’와 가난한 마을의 사람들에게 재활용 주택을 지어준 ‘루럴 스튜디오’에서 영감을 받으며 공동체적 지향을 강하게 갖고 가게 되었쥬. 예술을 통해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난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서울시와 행정 부처를 설득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 영역이 생기기 시작한 거쥬. 그런데 정부의 지원 방식은 여전히 토건 사업 방식이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지원을 받은 예술가들은 대부분



관리 업무 하다가 나가 떨어졌쥬. 예술적인 사람들이 실은 그런 일을 가장 못 하잖아요. 사회적 기업은 충분히 의견 조율하고 숙고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새 사실을 발견하면서 차분하게 키워 가야하는 나무와 같은 것인데 그런 시간과 비용을 주지 못한 채 채근만 하니까 돈 끊기면 그만인 거쥬. 그 즈음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어 사회적 기업을 지속적으로 밀어주었어요. 또 한편 당시 당사자 이슈를 정치 아젠다로 만들어내려는 청년들과 자율적 행위자성 중심으로 새로운 판을 만들고 싶어한 청년들이 서울시 지원을 받으며 활약했어요.

선생님이 꽤 깊숙이 청년 정책에 개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사회적 기업이나 청년 정책 쪽으로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인류학자로서 관찰은 계속 하고 있지만요. 내 관찰에 의하면 그 즈음 청년들은 신자유주의화로 인해서인지 공공적인 것에서 멀어지고 있었쥬. 열심히 공부해서 뉴욕에서 간호사로 살겠다는 모범생 고등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뉴욕의 간호사가 되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한국계 간호사의 글을 보고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쥬. 어머니가 교사였는데 그 분도 한국에 미래가 없어 보인다

면서 그 아이디어를 적극 밀고 있었고요. 삼포 세대, ‘노 답 사회’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던 때잖아요. 주변에 독일이나 캐나다로 이민 가서 살겠다는 IT 분야 청년 엔지니어들도 많았고요. 각자 자신의 삶을 국가와는 무관한 글로벌한 상황에서 설계하는 것이 신기하고 한편 신통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했어요. 서울시와 연계해서 활동하려는 청년들은 그런 면에서 너무 분화된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들은 아니었죠. 박원순 시장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관료적 지원 행태를 바꾸어 내지 못해서 그나마 열심히 참여한 청년들이 충분한 성과를 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나는 청년 정책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세대간 소통이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박 시장이 ‘대청마루’라는 세대간 대화 기구를 만들었을 때는 같이 했었어요. 2016년이었네요. 그 때 <7분 마이크>라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도왔어요. 서울시에 사는 다양한 청년들을 대변한다는 것은 어렵고 제대로 소통하고 작당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성을 확인하며 세대안팎으로 상호이해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을 했죠. 온라인 플랫폼에 이야기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훌륭한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했어요. 세 차례 정도 한 후 막을 내렸어요. 하자 센터를 만들기 전 1998년도에 <사이버 유스> 라는, 십대 목소리를 모아내는 비슷한 플랫폼을 운영해봤어요. 문화관광부 지원으로 만들었는데 십대들의 호응이 대단했었어요. ‘두발 자율화 운동’과 ‘선거권 나이 낮추자’ 운동이 그 때 그 곳에서 시작된 운동이 예요. 청소년들의 지지에 힘을 받아 하자 센터를 만들게 되었지요. 그런데 20년이 지나 시도한 청년 플랫폼은 잘 안 된 거죠. 이미 청년들은 국가 지원과 무관하게 각자의 아젠다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금은 국회의원인 장혜영씨의 “생각 많은 둘째 언니” 유튜브 채널이나 텀블벅과 같이 창조적인 사람들을 위한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브런치와 같이 좋은 글과 작가 지망생들이 많이 가는 블로그 플랫폼 등에서 개별작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서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죠. 자율적 시민들의 의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commons}가 생겨나는 것인데 나는 이런 시도를 재활력화 운동이라고 불러요. 내게 기

본소득은 바로 이런 재활력화 운동을 활성화해서 사회를 살리는 방법이죠.

성과주의는 한국 사회에 계속 있어왔지만 현재 교육 자본, 문화자본을 지닌 청년들의 삶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모든 걸 지식화 해내려는 충동 말이죠. 긴 시간 작업하면서 논문 하나를 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 말, 어디서 본 영상,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자기 지식화 해서 블로그에 트위터에 올리면서 스스로 1인 기업이 되죠. 자기 학습의 경로들이 굉장히 촘촘해졌다 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 과잉이죠. 계속 토해내기 바쁜 상태. 소처럼 자기의 모든 부위를 다 발라내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 되어 모든 걸 다 가치화 하는 방식…… 이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관료주의와 결합되어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모든 게 속도전이 되어 버려요.

- 그러니까 어디 심사를 가면 기발한 아이디어는 실은 십여 년 전에, 또 유럽 같은 데서 벤치마킹해서 얻은 것이고 그걸 프로포절^{proposal}로 그럴 듯 하게 만들면서 돈을 받죠. 요즘 청년 쪽을 보면 ‘디자인 싱킹’부터 시작해서 ‘해커 톤’, ‘컴퓨테이셔널 싱킹’ 등 거의 외국어를 사용해요. 그런 단어를 쓰면서 마치 새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 하죠. 입시 교육에 찌든 경우일수록 흉내는 잘 내지만 디자인 싱킹은 매뉴얼로 배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입시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시도는 어려울 거예요. 입시 교육을 거부하고 다른 곳에 가서 학습을 한 경우면 몰라도 모범생들은 다 똑같은 답안을 쓰는 귀재들이죠. 자꾸 중복되는 말이지만 지원 방식이 경직되다 보니 창의적인 청년들도 3, 4년 지원을 받다가 지쳐 떨어져나가게 되죠. 아니면 중간지원조직화 해서 공무원 일을 대신 해주는 팀들만 남아요. 요즘은 공무원들도 일이 너무 많으니 아예 민간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시민단체장들이 자산화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을 후배 청년들이 하고 있던데 같은 맥락일 겁니다. 내용에 관심이 없거나 내용을 만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흘러온 거죠. 아예 국가지원금을 안 받겠다고 선언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비극이죠.

툭다운 방식의 지원이 청년들을 ‘꾼’으로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들도 갑갑해 하고, 소셜 벤처의 청년들을 만났을 때도 그 고충이 보이더라고요. 나라에서 국가의 미래가 창업에 있다면 갑자기 지원책을 풀어 놓으니 다들 창업을 하든 사회적 기업을 하든 프로포절 쓴다고 너무 바빠요. 하지만 서울시가 만든 청년거버넌스 장부터 소셜 벤처까지, 어느 정도의 교육·문화자본을 가진 청년들을 ‘청년’ 일반으로 얘기하는 것도 위험하죠. 우리가 ‘청년’ 담론으로 별반 주목하지 않는 청년 바깥의 청년들, 예를 들어 청년 플랫폼 노동자, 택배 노동자…… 이런 청년들은 코로나 시국에 ‘비인간’이나 다름 없죠. 초인종 눌러서 문 열면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택배 상자만 보이고. 이런 청년들이 한쪽에선 넘쳐 나고, 다른 한편에선 지구상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했고 비판 역량도 뛰어난 청년들이 당사자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제 자신을 소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한국 사회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고.

- 계속 만나고 있는 하자센터 출신 청년들이 몇 있는데 자율과 공생의 감각을 갖게 되어서 그런지 이 친구들은 분노하기보다 자기들 삶의 영역을 차분하게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몇 일 전에도 하자 작업장 학교 졸업한 친구와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를 봤는데, 아 그 영화는 복의 개념도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 아주 좋은 영화였어요. 이 친구는 영상 작업자로 일하다가 요즘은 주로 NGO, NPO에서 기획 일을 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실적 상태에서 너무 불안했다고 해요. 그래도 하자 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같은 동네에 가깝게 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자기가 원하는 건, 그냥 70만원 정도 고정비가 나오면 생활비를 줄이고 하고 싶은 작업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일도 꾸밀 거라고 해요. 지금은 월급이 좀 나오지만 미래가 없는 삶이라면서 한 친구는 이미 숲 관련한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아이들 캠프도 하고 숲 관련 일을 평생 하겠다고 한 대요. 내가 소년 캠프 열면 아주 잘 될 거라고 귀뜸을 했죠. 자기들은 모이면 각자 잘하는 일이 달라서 쉽게 좋은 캠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남자애들 전문 캠프는 잘하면 돈 잘 버는 사업도 될 수 있을테죠. 기후변화를 전공한 친구라 기후변화 청소년 학교도 할 수 있을 테고요. 남아 미술연구소라고, 남자 아이들만 받는 미술 학원이 있는데 그

것을 차린 최민준씨라는 분은 남자아이는 그림을 잘 못 그린다는 식의 통념을 깨고 싶어서 시작했대요. 남자아이들이 주눅들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미술 학원을 만들어서 완전 대박을 쳤죠. 나는 이렇게 자기의 경험에서 시작하는 사업들이 성공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 생각해요. 실패해도 시도한 사람의 밑천으로 남은 것이고요. 국가가 하는 재분배는 이런 욕구를 가진 이들에게 마중물을 제공하는 형태여야 하죠. 70만원만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고, 자기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며 살려는 청년들이 많이 생길 거라 믿어요. 그런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9-6 직장을 구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주변을 보면 중산층 청년들은 다수가 부모로부터 기본소득을 받고 있죠. 그렇게 대 놓고 요구하는 자식들도 있더라고요. 이들도 기생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활동의 판이나 성격이 완전 달라지겠죠. 지금 우리가 만나는 신자유주의 세대는 대단한 능력과 의지를 키운 개인이에요. 착해서 사회를 구하려 하지는 않을 테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더 먼저 간파할 영리함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한편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닥치기 전에 해외로 떠나 글로벌 경험을 쌓고 그곳에 정착한 이들도 팬데믹 닥치고 세상이 허망해지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한다고 해요. 지금 AI(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나 생물학 분야에 많은 이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템을 가진 이들을 대거 초대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1970년대 산업발전을 위해 과학자들 유치했듯이 지금 다시 해외에서 건 숨어사는 은둔지에서건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이들을 적극 환영하고 일하게 하는 생태계를 만들면 해요. 첨단 영역에서 일하는 친구들 중에 해외에 가버리거나 숨어 있는 청년들도 많은데 이들을 포섭하는 판을 짜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요?

- 천문학 공부한 부부가 생각이 나네요. 유학 가서 첨단 교육을 받고 남편은 대학에서 가르치고, 아내는 박물관에서 큐레이터 일을 해요. 어린이를 위한 참신한 프로그램들을 하더라고요. 이 부부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부모가 계시는 한국에 부쩍 오고 싶어 하죠. BTS를 지금의 BTS로 만

든 ‘아미’활동을 하는 청년들, 봉준호 감독의 통역사였던 사론 최, 아프리카와 인도, 베를린 등 온갖 곳을 여행하고 재난 지역을 다니면서 봉사한 경험을 가진 청년, 주식투자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는 동학 개미 청년, 생태적 삶을 살려고 심심 산골로 내려간 숲 청년, 이런 이들이 떠오르네요. 우리가 AI 시대라고 떠들어대지만 입시 교육이 길러낸 인재는 이 판에서 낙후될 존재들이죠. 대만의 해커 출신 오드리 탕 디지털 특임장관 같은 분의 활약을 보면서 기존 체제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별종들이 나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어요. 우리 주변에도 판을 잘 만들어 일을 맡기면 오드리 탕 같은 이들이 분명 나와서 활약할 거라 생각해요. 기후변화 분야든 유전공학 분야든 새 영역에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일할 신인류 청년들을 국내외 어디에 있든 대거 초대 하자는 거죠. 다음 세대를 믿어주고 일을 맡기는 길 밖에 없는데 그들은 입시체제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아닐 테니 판을 달리 펼쳐보자는 거지요.

저는 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었던 게, 아까도 저희가 청년 바깥의 청년 얘기를 했잖아요. ‘청년’ 당사자로 부상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적 약자로만 재현되는 청년들 말이죠. 중국에서 폭스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청년들 만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에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줬을 때 상상력이 불가피하게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만나온 녹색당이나 청년허브, 소셜 벤처, 하자센터 같은 조직의 친구들은 확실히 자율적 개인으로서의 감수성을 체화하고 있어요. 자율적인 삶을 선호하고 꿈꾸는데, 저는 이것도 생득적인 게 아니라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기본소득 얘기를 했을 때 왜 노동하지 않는 사람한테 돈 줘야 하냐고 적나라하게 반문하는 집단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든 청년들, 플랫폼 노동자들 중에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자수성이 판타지도 강하게 작동하고, 능력주의와 각자도생, 젠더 이슈에 대한 보수적 편향성도 있고. 여러 대안 활동의 장, 가령 하자 센터나 크리킨디 센터, 우동사가 만들어가는 실험들 중 좋은 게 참 많은데 이게 어떻게 다른 청년들에게 가 닿을 수 있을까요? 그냥 채널이 안 가 닿는 것도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가난 속

에서 버텨 오면서 자기 스스로 체화한 마음이라는 게 한편에선 이미 달혀 있기도 하다는 거죠. 폐쇄적이기도 하고, 노동 중심적 사고도 더 뿌리 깊고. 이런 친구들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마주하고, 새로운 상상과 학습의 장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 나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질문을 하지 않을까?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고 적대할 대상만 찾으려 할까? 입시교육을 통해 익힌 타율과 권위주의, 남을 이기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자아관을 너무 일찍 내면화 한 때문일까? 전면전만 알고 국지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더 분노하고 자포자기 하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일이란 것이 과정이 있고 만사는 일단 선각한 사람들 소수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 같이 안 하냐고 분노하면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못하죠.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고 욕하기 전에 가만히 살펴볼 여유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은 여유가 없기 때문일거지요. 만사를 성과로 생각하고 승자 패자로 나누고 사람도 도구화 시키는 사냥꾼들이 되어버린 사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일단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긴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면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거고, 합의에 이르는 어떤 과정 자체가 중요한 학습이자 성과를 낼 확률을 높이는 것인데 그 과정이 생략되고 있죠. 너무 여유 없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된 것 같고 반대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받아들이며 극단적 판단을 하다 보니 숨쉴 여유도 못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더더욱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시행되어야 하죠.

이삼 년 전에 한 학생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친구가 광화문에 차린 세월호 희생자 부모들의 천막을 지나다가 그 부모들에게 가서 마구 화를 내더라요. 그는 최근 부모님의 빚을 갚아주고 계속 힘들게 살아야 했는데 아무도 자신을 도와준 적이 없다면서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을 거리로 나와서 징징거리는 꼴을 봐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측은지심이 사라진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사회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요새 나는 『만물은 서로 돕는다』를 주문처럼 말하고 다녀요.

맞아요. 선생님 요새 크로포트킨Kropotkin 얘기 많이 하시더

라고요.

- 예, 관점 내지 삶의 태도가 승자독식적일 때 아무리 좋은 복지 제도를 시도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예요.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호혜의 감각을 키우는 과정으로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기본소득 이야기 해봐도 성과가 날 리 없어요. 그냥 국가보조를 받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돈 타내려고 악하게 머리 굴리는 국민들만 늘어나겠죠. 사회적 기업이건 기본소득 제도는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호혜의 원리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고 소통합리성의 감각을 가진 이들이 만들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죠. 지구를 망치지 않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 우범지대를 아름답게 꾸미는 예술가들, 이런 이들 먼저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관점을 공유해야 한다고 봐요. 최근 청년들에게 아주 많은 지원이 가고 있는데 그들이 다른 세대와 만나 서로 돕는 일에 지원이 가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시장에서 잘 할 청년들도 망치고 돌봄 영역에서 잘 한 청년들도 역할을 못하게 되죠. 한국 초·중고 학생 일인당에 드는 비용이 연 1천3백만원 정도라고 해요. 교육부 예산만. 복지부 예산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을 테지요. 아동 국민 한 명당 엄청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 지원이 제대로 가는 방향도 찾아야 하고요. 제대로 분배가 되어서 사회가 되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고 이를 기본소득과 연결해서 생각하자는 거죠. 기본소득은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안전망이자 마중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 국가는 그간의 ‘톱다운’ 방식의 부작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일을 진행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 놓아야 하죠. 국가 자체의 성질/성격을 바꾸어 내면서요. 최근에 가구당 1300만원 주민 배당을 주는 섬마을 장고도 사례로 새로운 교훈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례를 제대로 분석하면서 국가 재건 사업을 하자는 거죠 (강제윤 “가구당 1300만원 배당.. 섬마을 장고도의 기막힌 기본소득”, 《오마이뉴스》, 2020년 9월 16일 <https://news.v.daum.net/v/20200916201200380>).

그래서 정책적으로 단계적으로 갈 기본소득과 같이 갈 수 있

는 여러 작업과 활동이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적인 범주의 기본소득, 그러니까 무조건성과 보편성, 충분성, 정기성, 이런 걸 완벽하게 충족하는 기본소득은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작업들과 병행해야 하는 거죠.

- 예, 그래서 사례가 중요하고요. 사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것을 믿는 자율적 친구들이 새로운 장을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앞이 캄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제 전염병 걸릴지 모르고, 고립되고 우울해 죽을 것 같은 시간을 거치고 있는데, 서로 돌볼 줄 아는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씩 모여 아이들을 키우고 노인을 돌보기 시작하면 해요.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기본 자산 얘기를 했잖아요. 가령 제주 같은 곳에 자율적이고 공생적이고 또 창의적인 이들이 많이 내려갔죠. 그런 친구들한테 20년을 보장해서 빈 땅을 주면 이 친구들은 거기 집을 짓고 자율과 공생의 삶을 살아내는 장을 만들어내겠죠.

이번 여름부터 기본소득네트워크에 계신 분들과 함께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을 수련한 젊은이들 만나 인터뷰 하고 있어요. 1인 가구, 기혼자, 고졸자, 대졸자, 플랫폼 노동자, 공시생, 스타트업 종사자, 비영리단체 종사자, 공공부조 수급자 등 다양한 범주를 정해서 만나는 중인데 인터뷰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청년들 중 공시생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선불리 단언할 순 없지만, 이 청년들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제주도의 목수들과 상당히 다른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제주도에서 땅 줄 테니 새로운 뭘 해 보라 하면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감각은 성인이 되어 배워서 익히기는 힘들다고 봐요. 기후변화에 대한 감각을 어른들에게 줄기차게 가르친다고 바뀌지는 않거든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땅에 대해서, 지구라는 행성에 대해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 감각이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생길 수 있게 하는, 나의 자유와 이 지구에 있는 내가 져야 할 책임감, 이런 걸 키울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선생님이 인터뷰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이런 삶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부나 교육기관을 재편하지 않으



면 안되겠죠.

- 나는 '나'를 중심으로 한 상부상조관계,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타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들이 만물이 적대하는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돕는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작일 텐데 그것은 동네의 작은 카페와 도서관, 마을주민회관, 키움 센터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하겠죠. 나는 동네의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때의 역할을 교육이 아니라 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봐요. 요즘 손자를 보면 친구들과 놀고 축구하고 점심 먹으러 신나게 학교를 다니거든요. 선생님들도 친절 하고요. 교육을 시키지 말고 전 국민 아동들을 잘 돌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부처 조정이 필요하죠. 교육부와 보건 복지부가 합치고 환경부와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면서 기후 변화나 적대 사회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해야 하겠죠.

아이 교육과 부모 교육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금 중산층 사회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돈 있는 부모는 자식들한테 건물 하

나씩 만들어주지 못하면 불안해 하고, 근데 정말 가난한 집은 그야말로 일찌감치 관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가족이 정말 어떤 '가족'이어야 하는지 되물게 돼요.

- 나는 아빠 혼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동네를 만들면 된다고 이야기 해요. 부부중심 배타적 핵가족의 실패는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고 독박육아하는 엄마들의 불안이 신자유주의와 결합하면서 아이들이 불모가 되어가고 있죠. 탈출을 하고 싶을 때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출구가 필요하죠. 기본소득을 가지고 시골 가서 고시공부를 하든, 텃밭을 가꾸든, 취미생활을 하든, 알바를 하든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 현 정부가 내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에요요. 정규직화가 불가능한 '탈노동시대'에 왜 그런 것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을까? 공공영역에서 정규직화를 하면 시장영역에서도 그럴 것이라 계산하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탈노동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아닌가요?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이 정규직 직원 뽑으라 한다고 뽑을 수는 없죠. 위에서는 일자리 늘리라고 뉘아 대니 편법을 쓰는 사태에 이

르렸고요.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선택의 문제이고 어느 것을 선택하든 보호가 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치 정규직만 살길인 것처럼 캠페인을 하니 청년들은 죽어라 고시에 매달리고 부모들은 고시 준비생 비용 대느라 죽을 판이고. 교사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시위 하는 것과 인천 공항 사태를 보면서 이는 만물은 서로 적대하는 사회의 결정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IMF 외환위기 지나 근 20년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게 계약의 차이가 아니라 신분이 됐잖아요. 경쟁사회에서 나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패배라고 판정 받은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호명 자체가 비정규직이 된 거예요.

- 공시생만 늘이고 신분제를 만드는 사회에 대해 청년들은 왜 침묵하는지, 난 이 침묵이 불길 해요. 청년들을 죄다 공시생이 되라 명하는 사회, 사표를 쓸 날을 상상하며 회사생활을 버티는 청년들, 관료적 정부를 바꾸기보다 적응하기에 급급한 청년 사업가들, 지원할 가치와 자격이 있는 청년과 아닌 청년을 가려내느라 숨쉴 겨를이 없는 공무원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지.

그 사업의 수행과 평가에 소요되는 돈을 끌어 모아 기본소득 재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재정부 건 행정안전부 건 문화관광부 건 각 부처에서 현실에 대해 잘 모르면서 아이템 만들어서 지원하고 성과 내라고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청년기본소득제도 제대로 실험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을 늘려가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경계가 의미 없게 되는 것, 청년이 청년답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요.

그야말로 기본소득 받으면서 각자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나를 살리든 지구를 살리든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줘야 하죠. 하지만 저는 지금 (비정규직 논쟁에서) ‘공정성’에 매몰된 청년들의 마음, 능력주의와 각자 도생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단단하고, 이 과정을 부추긴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봐요. 학생들과 인터뷰 하다 보면 부모에

대한 죄책감을 곧잘 토로해요. 부모가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내가 이만큼의 성과 밖에 못 올려서, 이만큼의 꿈 밖에 못 가져서 너무 미안하다고.

- 신자유주의화의 끝물에서 지금은 모두가 적이고 오로지 가족밖에 안 남아 있죠. 그것도 얼마만.

도대체 어떤 사회이길래 이십 대에게 이렇게 죄책감을 갖게 하나 화가 나요. 인천공항공사 사태를 보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정규직 노조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비난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이들이 정규직 넘보지 말라는 정도의 주장 밖에 못할 만큼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는 건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 지금 아파트도 마찬가지로잖아요. 아파트 공화국이든 정규직 공무원 공화국이든 가족 이기주의로 뚫뚫 뭉쳐서 그것만 보루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불안이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중이죠.

코로나 이후의 논쟁을 보면 올해 2~3월에 생태 얘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인류세’ 같은 낯선 단어들도 신문에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인천공항사태에서 n번방 사건, 부동산문제까지 다 터지고 나니 생태 이슈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만큼 성폭력, 자산 불평등 같은 기존의 갈등이 한국 사회에 극심하다는 얘기에요. 너무 심해서 뭔가 다른 얘기, 더 확장된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기후변화 같은 이슈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저는 이게 한국 사회의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그래도 이번 자가 격리 기간을 통해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온라인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생각을 제대로 하려는 분위기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발견과 발상, 관찰과 실험, 인식과 통합의 사유 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시간을 벌었다 고나 할까…… 이 기간이 길어지면 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고 나도 즐겁게 관찰하고 실험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참, 최근에 제주도에서 제주형 재난 긴급 생활 지원금이라고 하면서 5부제로 나눠주더라고요. 보통 은행계좌로 넣어주던데 이번에는 가볼 수 있는 기회라 일

부러 손자를 데리고 갔었어요. 왜 돈을 주냐고 묻더군요. 나라가 주는 선물이고 너는 커서 나라에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었죠. 기후 변화 이런 이야기를 살짝 흘리면서요. 아이가 ‘권리’를 넘어서 ‘선물’의 차원에서 ‘사회’를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요즘 엄기호 박사는 그것을 ‘축복’의 개념으로 풀고 있다고 해요. 잘 될 것이라며 두려움을 없애는 차원에서 물질적 문화적 양성적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야 할 때이겠죠.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듯 기본소득이라는 화두와 함께 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럽의 학설을 떠받들면서 경로가 맞는가를 두고 사변적 공방을 펼치기 보다는 삶에서, 각자의 고민과 경험, 감정을 터 놓고 서로 지지고 묶는 거죠. 그러자면 소년 캠프처럼 만물이 서로 돕는 이치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다른 인간과 생명을 환대하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제주에서의 다양한 실험들 나중에 더 들려주세요. 모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인간의 야만성과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뜻밖의 선물

김훈
- 소설가 ·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인터뷰어

류보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언제부턴가 뵙고 싶었다. 우선은 옛 추억 때문이었다. 《문학동네》를 편집하던 시절 오며가며 김훈 선생을 뵙는 일은 무척 즐겁고 신나는 일이었다. 조용조용 한마디씩 말을 건네받을 때마다 거의 무장해제가 되곤 했다. 아마도 나중에 소설로 만들어져 나온 이순신에 관한 이야기거나 병자호란 당시의 남한산성 안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깜짝 놀랄 때가 많았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일 때가 많았다. 다시 그런 행운과 행복을 느끼고 싶었다. 더더구나 혼돈의 시대가 아닌가. 선생님과 무슨 말이든 말을 섞고 나면, 아니 선생님의 말을 듣고 보면, 이 시계 제로의 상태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궁금한 것이 있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수는 없어도 엿보고는 싶었다. 최근 내가 접한 선생님은 내가 아는 선생님과 달랐다. 내가 아는 선생님은 글을 쓰는 분이셨다. 역사의 현장 어디에나 가지지만 주변을 맴돌며 보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걸로 글을 쓰시는 분이었지, 그 현장의 중심에서 선언을 하는 분이 아니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일을 하고 계셨다. 국회에도 가고 팽목항에도 가고, 가서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무엇을 요구하고 읍소하고 하는 모습이 나에겐 낯설었다. 낯설었지만 고마웠다.

계간 《기본소득》의 인터뷰 형식으로 만나는 게 적당한가 하는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뵙고 싶은 마음이 모든 걸 눌렀다. 게다가 그때쯤 마침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 ‘좀 더 가난한 미래를 받아들이겠다고 할 때, 거기에 따르는 고통과 희생의 총량을 사회 계층 간에 배분하는 문제 안에는 커다란 갈등과 분열의 마그마가 잠복해 있고, 여기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코로나 이후의 한국 사회의 모습은 결정될 것이다.’(김훈, “무서운 역병의 계절을 나며 희망의 싹을 보았다”, 《한겨레신문》, 2020.5.5.)라는 구절이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게 없었다.

인터뷰는 2020년 8월 11일 김훈 선생의 일산 작업실에서 이루어졌다. 계간 《기본소득》을 같이 편집하는 서정희, 이관형 편집위원이 같이 나서준 덕분에 많은 이야기가 되었다. 요즘 내가 미는 말이 있는데, 그 표현을 억지로라도 끌어쓰자면, ‘동행은 힘이 셸다.’

근황, ‘자전거 여행’이 없는

요즘도 자전거 타세요?

- 미세먼지가 많아져서 이제 안 타요.

그러면 자전거 레이서라는 직함은 어떻게?

- 이제 레이서는 못 하고, 라이더 하는 걸로. 그래도 내가 레이스는 몇 번 해봤거든.

예전 어느 책임가의 약력에 ‘자전거 레이서, 내리막길 시속 40 몇 km’라고 적으셨었는데, 그것은 그럼 어떻게…….

- 내리막은 다 가만 있어도 40 몇 km예요.

그래도 그렇게 쓰셨길래 레이서만 이렇게 속도가 나오나 보다, 그랬었어요.

- 40km면 그건, 그건 힘은 하나도 필요 없거든요. 실력과 담력이 필요해요. 비상시에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다시 담배 시작은 안 하셨어요?

- 담배는 끊은 지 한 10년 됐어요. 절에서도 담배를 피다가 중한데 걸렸는데, 늙은 중이야, 80 넘은 분. 손가락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 담배를 피는데. 절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돼 있어요. 담배를 끊으라고 그러더라고. ‘스님, 담배 피워봤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안 피워봤대.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이게 뭘 줄 알고 끊으라고 하시나요?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 말을 하네. 왜 못 끊어?’ 그러더라고요. ‘니가 안 피면 끊는 거 아냐?’ 니가 피면 못 끊는 거고. 더러워서 끊어야겠다 하고 내려왔는데, 그러고 두 달 찢어. 그러고 끊었어요.

재난사회,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

요새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맡으셨더라고요.

- 그게 공동대표가 11명인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에요. 제가 대표라고 그러지만 내가 그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모임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한평생을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밑에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젊은 활동가들이 있거든.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젊은이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글을 써야 된다면 글을 쓰고, 집회 가서 해야 한다면 하고.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더운 날에는 집회 안 나가고 그러고 있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끌려 다니는 사람이지만, 나의 지도로 그 모임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전에는 불려도 잘 안 가셨잖아요.

- 절대 안 갔지.

그런데 요즘은 왜?

- 7~8년 전쯤인가, 공동대표 중에 신부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50대 후반쯤 되는 분이예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있는 데로. 자기가 하는 일을 소개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얘기를 해 봤지. 저 사람이 진실된 얘기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주로 글을 쓰고 취재를 하셨지, 어디 가서 성명서 읽고 의견 내고 그런 적은 없으셨잖아요. 요즘 이전과 달라졌다는 말씀 안 들으셨어요?

- 달라진 게 아니고, 글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최근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세월호 쪽 가족들과도 같이 다니시고, 세월호 합창단 하고도 만나시고, 아, 김용균 가족들도 만나시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다들 측량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라…….

-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도 해결을 못 하나, 쉬운 일을. 그런 일은 쉽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산업재해를 줄이는 일 정도는 얼마나 쉬운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추락사 있잖아요. 건물 외벽에 비계 설치하고 올라가는데 그 비계가 무너져서 몇 백 명이 죽어요. 건물 외벽에 비계를 설치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건 돈이 드는 게 아니고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사를 조이면 돼, 그

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안전하게 하는 거, 그걸 아직도 못해요. 오늘도 못해요. 내일도 또 떨어질 거야.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세미나, 토론회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절망적인 거지. 인간 세상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말로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다. 말로 해서 되는 세상이면 벌써 다 해결이 됐겠지. 그러면 안 해야 되냐? 말을 해야 되잖아. 말로 해서 안 되면 끝장인 세상인데…. 착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고통 당한 사람도 괴롭지만 나 자신도 괴로웠어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말이 모자라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니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 또 하나는 답답한 건 문학인 사이의 오해예요. 갑자기 다 왜 이러냐? 당신 갑자기 왜 이래?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세월호에 대해서 발언하고 글을 쓰니까, 책이 안 팔려서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말이 들려요.

문단 쪽에서요?

- 그럼요. 나는 그런 말들을 들어도 문단을 저주하지는 않아요. 나는 문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하찮게 보는데, 저 따위 얘기는, 그 인간이 너무나 후레하게 보였어요. 문단에 내가 속하지 않으니까. 문단이 원래 그렇게 후진 데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군요.

- 그런 사람 있었어, 대놓고. 지금도 있어요. 책이 안 팔려서 저런다고.

어쨌거나 요즘 국회도 자주 다니셨어요? 국회의원도 만나시고?

- 국회에 생명안전포럼을 만들었죠. 그건 생명안전 시민단체가 이뤄낸 하나의 성과예요. 여야 의원 27명이 거기 참여를 해서 포럼을 만들어서 논의협의기구가 생긴 것이죠. 얼마나 효과를 낼지 알 수 없지만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김용균법을 만든 다음에, 김용균법이라는 것은 분명 유익한 것이고 어쨌든 진전된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국회의원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고 김용균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아들 죽



고 울고 있는 여성을 시민단체가 일으켜서 앞세워서 다니면서 된 거예요. 통곡하고 국회 다니고 청와대도 다녀서 할 수 없이 밀려가면서 했던 거예요. 국회의원이나 정치 지도자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예요. 어머니의 힘으로 한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밀고 다녔지만. 그래서 겨우 됐는데, 김용균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똑같이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요.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예요. 해 놔도 죽고. 며칠 전에도 똑같은, 벨트에 끼어 죽은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때도 2인 1조 근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이런 큰 역할을 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오늘도 그게 고마워서 찾아왔는데…….

- 대표가 됐지만 그래도 지도자는 아니야. 미는 대로 그냥 밀려갈 뿐이지.

플랫폼 노동자의 그들과 빛

요즘 라이더유니온 친구들도 만나시더라구요?

- 플랫폼 근로자들. 이건 정말 이상한 형태의 노동 형태

인데, 인간을 아예 고립시켜서 지배하는 거잖아요. 고립되고 고도로 조직돼 있는 거예요. 조직된 것도 아니고 고립시키는 것도 아니고 양쪽을 다 갖고 있는 거지. 거기 플랫폼의 인간은 끝없이 무력한 거야. 그리고 다들 사장이야. 사장의 지위를 갖고, CEO의 지위를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고립되는 거지. 정말 희한한. 그런데 그것이 점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났어요. 앞으로는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배달라이더들이.

배달노동자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라도?

- 짜장면 들고 가는 사람이 사고 나는 걸 봤어요, 동네에서. 오래 됐어요. 비가 오는 날 아스팔트에 쓰러졌는데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고, 짬뽕 국물이 쏟아져서 피와 섞이고, 단무지가 튀어나오고 양파가 튀어나오고……. 쏟아진 젓가락 짝에 상호가 있는데 그걸 보니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이야. 그 집 배달원이지. 나중에 그 집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그걸 몰라. 개가 누구인지 몰라. 왜냐하면 직접 고용이 안 된 거야. 얘기를 해 봤더니 개가 배달하러 갔는데 배달시킨 사람이 빨리 갖고 오라고 전화 왔다.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 왔다. 다시 갖다 줬다고. 그걸 들으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

오더라고. 집회하는 데도 가고 그랬어요, 젊은이들을 만났는데, 집회할 때 음악 하는 애들이 있어요. 배달하는, 맥도날드 하는 친구들이 기타를 가지고 와서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 그런 밴드 그룹이 있어요. 배달하는 친구 세 명이 기타 치고 노래도 하고 해요. 한 친구는 맥도날드, 하나는 배달의 민족. 자기는 뮤지션이 되는 게 꿈이라. 취직은 안 한대, 왜냐하면 취직을 하면 노예가 돼야 되니까. 노래 만들어 왔어요. 제목이 '조삼모이'야. 조삼모사를 살짝 바꾼 거지. 주눅들어서 있지 않아. 오히려 직장 다니는 놈들을 우습게 봐. 저속한 놈들이라고. 자기네들은 일하는 시간만큼 돈 받아서 쓴대. 그걸로 애인과 같이 커플링도 사고. 그렇게 발랄한 젊은이도 있어요. 그걸 보니까 애들이 참 아름답고 훌륭하구나.

어느 사진을 보니까 그 친구들 집회현장에도 찾아가셨던데.....

- 그 사람들 총회를 하는데 강남역 7번 출구야. 거기까희한한 동네예요. 삼성의 본부잖아. 삼성물산, 삼성화학 있고, 세계 최고의 성형외과 타운 있고. 거기 가서 했어요. 그 사람들이 총회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코로나 시절에 배달을 해서 국민 방역에 최고의 기여를 했다고 자랑을 막,하는 성명서를 냈어. 그런데 우리가 불법운전을 해서 양아치 취급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서럽다는 거야. 자기네들 임금 노동의 구조를 보면 양아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움을 막 토로해요. 그래서 노조 간부들을 만나서 너네들이 할 일은 우선 안전운전을 해라. 자꾸 불가피한 걸 하지 말고, 그것 좀 해야 된다. 실제로 난폭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캠페인을 하는 꼴이라도 좀 보여야 바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얘기를 들을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대표도 만나셨죠?

- 박정훈 대표는 맥도날드예요.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젊은이예요. 이런 일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을 만나고 다니면서 일을 제법 되게 하더라구.

박정훈 대표가 낸 책『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를 봤

더니 이 친구들 중에 자기는 필요한 만큼만 벌고, 나머지 시간은 내 꿈을 실현하는데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런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구절이 있더라구요. 아, 이거, 참, 흥미로운 생각이다 했었어요.

- 음악을 만들고 조삼모이. 조삼모사 패러디, 뒤집어서 조삼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사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아직 안 보냈어요. 조삼모사라고 해서 원숭이를 바보라고 하는데, 원숭이가 조사, 그러니까 아침에 4개를 원한 건 바보가 아니고 그건 똑똑한 거다. 아침에 4개 먹는 게 유리한 거다. 저녁 때 3개 먹는 것보다 이렇게 미리 받는 게 뛰어난 거지. 그러니 원숭이가 맞는 거다, 머리가 좋은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들이 조삼모이라고 하는 건 원숭이한테 불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인데, 가사를 안 보내는 걸 보니까 내 얘길 듣고 새로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간의 아만성과 아만적인 문명에 대한 분노; 『달 너머로 달리는 말』에 대하여

이런 활동하시는 와중에 최근에 소설 내셨어요. 저 멀리로 가셨어요. 선생님 소설 중에 제일 먼 시대로 간 거 아닌가요?

- 아무 시대도 아니예요.

뭐라고 할까, 읽으면서 선생님의 세상에 대한 분노, 아니면 인간성에 대한 분노 같은 것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 그런 느낌이 있으면 나한테 있는 거죠. 저번에 정사『삼국지』를 읽었어요. 다 읽고 났더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본질은 바뀌구나. 그게 거기 다 써져 있어요. 소설『삼국지』 있잖아요. 재미있게 읽은 책인데, 거기 나오는 공명이 저는 그나마 인간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공명도 전쟁에 미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간적인 소양이 있는 것이죠. 전쟁 자체를 돌이켜 볼 수 있는 놈은 아무도 없지 않나. 단 한 놈도 없어요.

예전 작품보다 선생님 작품이 더 어두워졌어요. 그래도 예전



작품에는 긍정적이고 힘 있고 이런 인물들이 보여서 그런 인물들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그래도 인간들과 인간의 역사가 선택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엿보게 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 말이 있잖아요.

말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 말이 자유를 향해서 가는.

코로나 19라는 재난적 상황과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뜻밖의 선물

현재 코로나 19 상황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요새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전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세대의 감각으로 그런 거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 세대는 사실은 한국전쟁 등 파란만장한 사건이 많으셨잖아요? 그렇게 큰 일을 많이 겪었던 선생님 세대의 감각에서 봐도 요즘 상황이 전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 그렇죠. 두 가지가 엄청나요. 코로나는 전쟁 이후 재난이죠. 우리 때 전염병이 많았지만 전염병이 돌아도 어렵지만 출근을 했거든요. 뇌염 그건 일주일 정도 쉬고, 지금 같은 상황은 처음 봤어요. 또 하나 놀란 건 재난소득 나눠주는 거. 이건 정말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싶었어요.

재난소득, 요?

- 충격을 받았죠.

어떤 점에서 충격적이셨어요?

- 처음에 그런 논의가 시작되길래 몽상에 불과하다, 기본소득은 몽상 같은 게 있잖아요. 실제로 나눠주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치세력들이 저항이 별로 없다는 느낌. 수궁하는 자세도 놀라웠어요. 처음에 경남도지사가 먼저 말했죠. 돈 100만원 주자고. 다들 미치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지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재난적 상황이 되어서야 떠밀려 기본소득 논의가 이루어지는구나 했는데.

- 나는 그걸 몰랐어요. 저런 말을, 도지사가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지? 근데 실제로 나눠주니까 좋잖아.

기본소득이 제도화되거나 안착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밝아질 거다, 이런 기대가 있으신 건가요?

- 네.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돈 주는 것 외에 도움이 되는 게 없잖아요. 말로 위로하고 소설책을 써 가지고, 그게 무슨 소용. 돈 주는 게 제일 낫지.

선생님이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 중 하나는 이런 재난적인 상황이 끝나고 나면 극심하게 가난한 자들에게 전가된다, 여태까지 모든 큰 사건 외에 모든 위험은 가난한 자에게 집중됐다. 코로나19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 우리가 고통분담, 그건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인데, 그걸 할 수 있다면 나처럼 인간이 개새끼만도 못하다는 소리가 안 나올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나의 경험칙에 따르면 우리는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본 역사적 경험이 없거나 매우 빈약하죠. 인간이 역사적 경험이 없는 짓거리를 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재난소득을 이번에 처음으로 한 거예요. 경험이 없는 짓을 위태로워지니까 한 거죠. 코로나 문제도 경제를, 경기를 부양해서 옛날처럼 잘살게 해 주겠다, 그런 것은 나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가난하고 더 불편하게 사는 세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훨씬 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불편하게. 덜 신바람 나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말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죠. 앞으로 우리가 더 가난하게 된다, 이걸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예고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코로나 19와 뜻밖의 선물 2, 정은경 본부장

코로나 상황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 최근 어느 컬럼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은경 본부장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정은경 본부장의 어떤 부분이 선생

님의 마음을 끈 건가요?

- 정은경 본부장은 자기 자리에 정확하게 있어요. 자기 자리에 정확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무적인 과학자의 정직함이 있구요. 정치적으로 오염된 언어를 절대 안 쓰잖아요. 정부의 방역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정부의 방역 실패를 감추지 않고, 자기가 어려우면 직접 말을 하고. 정부와 국민에게 이런 불편을 요구할 테니까 따르라는 말을 하잖아요. 성공했어요. 그분의 말은 다 신뢰하잖아요. 정은경 본부장님이 얘기하는데 지난 7개월 통계를 냈더니 70 억은 노인은 코로나로 10분의 1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 모이는 데 가지 말라는 정 본부장님 말 안 들으면 바로 죽는 거구나 했어요. 10분의 1이 죽는대요. 요즘은 안 죽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기본소득 운동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저는 선생님이 기본소득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관한 질문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뜻밖에 기본소득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하고 있어요. 기본소득 관련해서 급조된 질문 한두 가지만 드릴게요. 요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는 전국민 기본소득을 정책화하고 정치화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도 짜고 있는 중이거든요. 혹시 선생님의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나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조언을 들려주신다면?

- 기본소득은 대기업이나 정치권을 설득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부를 향해서 돈 내놓으라는 얘기잖아요.

선생님의 경험칙상 이렇게 하면 정부가 돈을 내놓더라, 이런 걸 해 봐라, 훈수를 두신다면?

- 정부는 표가 나오면 돈을 내놔요. 표가 안 나오면 돈을 안 내놓죠. 우리나라는 재벌이, 이들의 이익이 많아야 백성들이 잘 살고 고용이 안정된다는 신화가 있잖아요. 그걸 강하게 믿는 것 같아. 거기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이 되는 거죠. 견고한 신앙 아니면 미신처럼 돼 있어요. 노동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그런지 어떤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런

통념을 부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잖아요. 물론 재벌이 일이 많아야 노동자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경제이론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노동하는 사람들은 경제의 주체로 보지 않는 것이죠. 하부조직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운영에 딸린 하부구조라는 생각을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미신과 통념이 지배하는데 기본소득 운동을 하기는 장벽이죠. 그나마 정치권을 움직이는 것 못 지않게 그런 통념과 싸우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뜻이 좋고 바람직해도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모양이네요.

- 나는 서울에서 살면서, 서울에 70년 이상 살면서 무허가 주택 강제 철거하는 걸 수없이 봤거든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철학을 지배하고 있는데, 인간은 개새끼에 불과하다는 것도 아마 그런 데서 출발했어요. 무허가 건물 때려부수는 명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유지다. 나라 거다. 공유지를 무단 점거했다, 때려부수고. 또 하나는 사유지다. 사유지는 땅 주인이 거기 재산권을 행사할 때 쫓아내고 때려부수고. 그 시대에는 서울에 집이 없었거든요. 사람은 넘쳐나고 살 집은 없으니까 판자촌이 생기는 것은 자연 현상이야.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인데 때려부수는 거야. 국토는 공유지 아니면 사유지인데, 다 때려부수면 이 사람들은 엉덩이를 붙일 자리가 없어지는 거지.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정책 목표가 될 수 없어. 다 가라. 더 변두리에 나가서 살라. 변두리 땅을 정해 주고 거기 가서 살아라. 아무 기반시설 없는 성남 같은 데. 결국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은 변두리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예요. 도심지 안에서 노동하고 날품팔이하고 등짐 지고 배달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해. 잡일하고 도심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사람이예요. 변두리 가서는 살 수 없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시내 근처 무허가 집을 만들어. 그러면 거기 또 가서 때려부셔. 그걸 너무 많이 봐온 내게 지금 전세방 문제는 이걸 인간 세상에서 빼는 거야, 제외시켜 버리는 거야, 추방시키고, 엉덩이를 땅에 못 붙이게. 전세방, 월세방 문제도 나는 그 본질은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옛날처럼 와서 때려부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돈으로 해요. 시장의 질서로, 가격



으로. 그러면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은 집이 있는, 많이 가진 사람한테 돈을 바치고 거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후배들 물어보니까 월 소득이 7분의 1 정도를 주거비로 낸대, 전세 값 내고 관리비 내고. 근데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다 받잖아요. 전월세 사는 사람 때문에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예요. 부동산 문제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야. 이걸 생존, 생과 사의 문제지, 부동산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전월세 문제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부동산의 문제지만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그게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예요. 요새 그런 문제를 보니까 내가 청소년 시절에 봤던 무허가 주택 때려부수는 것과 기본은 같구나, 생각이 들어요. 다만 시장경제적으로 세련되게 들어와요. 가격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몽둥이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몽둥이, 뻔히 보이잖아.

그렇담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 혹은 보이지 않는 몽둥이와 싸워 이겨야 하는 거네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보자면 선생님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 기본소득에 대해 정돈된 생각이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상당히 몽상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재난소득 주는 걸 보고 그렇게 몽상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재난소득 이번에 준 건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경천동지할 일인데 사람들이 잘 놀라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받아 먹을라고 하지. 그러나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반대한다고 말하는 훌륭한 논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하여튼 이 정도가 지금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 생각하는 것의 전부예요.

이날 공식적인 좌담은 여기서 끝났다. 그런데 이후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아마도 ‘고통과 희생의 총량을 사회 계층 간에 배분하는 문제 안에는 커다란 갈등과 분열의 마그마가 잠복해 있고, 여기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코로나 이후의 한국 사회의 모습은 결정될 것’이라는 선생님의 고민 때문이었을지 않을까 싶다. 아니면 아무리 법을 만들고 토론회를 열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산업재해의 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

판단하셨을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꿈을 가진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공감 때문일 수도 있다. 그날 좌담이 끝난 후 편하게 차를 마시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 보이신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은 좀 남다른 데가 있었다. 그러더니 기본소득한 국네트워크의 회원, 그것도 정회원으로 가입하셨고, 그 이후로 기본소득에 관해 열공을 하고 계신다는 후문이다. 한 여름에 이루어졌던 김훈 선생과의 좌담을 ‘김훈 선생의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의 가입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말로 마치게 되다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라 기쁨이 더 크 모양이다. 하지만 하나 더 기대가 되는 것이 있다. 머지않은 어느 날 김훈 선생에게서 기본소득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조언을 듣는 장면.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세상을 좀 더 희망적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기본소득 세상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문득, 그날이 그리워진다.

꽃밭의 경계

안도현

시인

꽃밭을 일구려고 갱이로 땅의 이마를 때리다가
날 끝에 불꽃이 울던 저녁도 있었어라

꽃밭과 꽃밭 아닌 것의 경계로 삼으려고 돌을 주우러 다닐 때
계곡이 나타나면 차를 세우고 공사장을 지나갈 때면 목 빼고 기웃거리고 쓰러지는 남의 집의
댕박만 한 주춧돌에도 눈독을 들였어라
물 댄 눈에 로터리 치는 트랙터 지나갈 때 그 뒤를 경중경중 쫓는 백로의 눈처럼 눈알을 희번덕
거렸어라
꽃밭에 심을 것들을 궁리하는 일보다 꽃밭의 경계를 먼저 생각하고 돌의 크기와 모양새부터 가
늠하는 내 심사가 한심했어라
하지만 좋았어라 돌을 주워들 때의 행색이야 손바닥 붉은 장갑이지만 이 또한 꽃을 옮기는 일
과도 같아서 나는 한동안 아득하기도 하였어라
그렇다면 한낱 돌덩이가 꽃이라면 돌덩이로 가득한 이 세상은 꽃밭인 것인데 거기에까지 생각
이 다다르자 아무 욕심이 없어졌어라
나와 나 아닌 것들의 경계를 짓고 여기와 여기 아닌 것들의 경계를 가르는 일을 돌로 누를 줄 모
르고 살아왔어라

꽃밭과 꽃밭 아닌 것의 경계는 다 소용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경계를 그은 다음에 꽃밭의 치장에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어라

씨드머니

편혜영

소설가

미조는 자기가 하는 일에 나를 끼워주겠다고 했다.

“믿을만 하다는 말이지?”

머쓱해서 내가 농담하자 미조가 마음 편하게 생각하라고 했다. 오랜만에 만난 것이어서 미조의 성격을 까먹고 있었다. 미조는 말투가 직설적이고 농담을 잘 안 했다. 나 역시 냉담하게 대하면 그만이지만 그러기 쉽지 않았다. 미조는 매번 선생한테 얻어맞는 아이였기 때문이다. 선생은 부모가 찾아오지 않는 아이들을 대놓고 못살게 굴었다. 너는, 응? 부모도 없어? 너한테, 응? 아무 관심도 없어? 네가 이려고 있는 걸, 부모가, 응? 알아?

모욕적인 선생의 말을 들으며 달아오른 얼굴을 숙이고 움츠린 채 서 있는 미조의 모습이 떠올랐다. 살면서 미조가 그런 일을 얼마나 더 겪었을지 생각하면 그 애에게 냉담해지기 어려웠다.

미조와는 일주일 전 경찰서에서 만났다. 나는 주정뱅이나 범죄 의심자가 주로 머무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처량한 기분이었지만 그보다는 겁이 났다. 나는 대학원 박사 과정에 막 입학했는데 교수나 부모님께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웠다.

미조가 나를 알아봤다. 어떻게 알아봤느냐고 나중에 물어보자 미조는 머릿통의 가마를 보고 알았다고 대답했다. 소라처럼 둘둘 말린 가마 때문에 머리가 위로 솟구치는 건 나밖에 못봤다면서. 그게 농담인 줄 나중에야 알았다. 경찰과 CCTV를 검토한 미조는 이미 범인이 나인 걸 알고 있었다.

“흠췌다면서요?”

억울하다고 호소할 때마다 경찰이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흠친 게 아니라 ‘습득’한 거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경찰은 매번 그렇게 고쳐 말했다. 사실 경찰의 말이 맞았다.

나는 췌었다. 잘못을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징역’을 살거나 전과가 생길 정도로 잘못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신고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했다. 감옥에 가게 된다는 말이 아니었다. 합의 금액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뜻이었다. 내가 ‘습득’한 건 겨우 삼만원이었다.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다. 신고자가 말한 피해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서였다.

지갑은 은행 외부에 설치된 세 대의 ATM 기기 중 가장 오른쪽 기기 위에 놓여 있었다. 색이 진하고 도톰해서 눈에 안 띄면 이상한 정도의 빨간색이었다. 누군가 두고 갔지만 지갑이 그대로인 걸 보니 주인이 멀리 가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카드를 넣고 금액과 비밀번호를 누르자 백만 원쯤 출금되는 요란한 소리 끝에 지폐 여섯 장이 툭 튀어나왔다. 개강총회 회비 삼만 원, 비상금 삼만 원, 잔액은 약 십일만 원. 간명한 잔고였다. 카드를 투입구에서 뽑아 지갑에 넣을 때까지

도 지갑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신고자 왔어요.”

경찰의 말에 고개를 더 숙였다. 선처를 안 해준다고 하니 불쌍해 보여야 할 것 같아서 잔뜩 겁먹은 시늉을 했다. 눈물은 안 나는데 우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다.

“아는 사람 같은데?”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미조가 경찰에게 나를 가리키며 동창이라고 말했다.

“친구면 합의 좀 해줘요.”

경찰이 더는 번거로운 일을 벌이지 말라는 듯 말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경찰은 미조의 수법을 뻔히 알고 있었다. 달리 방법이 없어 방관했지만, 게다가 내가 지갑을 ‘습득’함으로써 빌미를 주었지만, 그들은 미조 같은 사람을 여럿 봤다. 미조가 내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친구 덕 좀 보세요.”

경찰이 웃으며 말했다.

카페에 마주 앉아 미조가 중학교 담임 별명을 말해주고 나서야 나는 그애를 알아봤고 움츠린 모습을 덩달아 떠올렸다. 그제야 깊게 숨을 쉴 수 있었다. 겁에 질린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왜 훔쳤어?”

미조가 지갑을 들어보이며 아랑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합의고 뭐고 지갑에는 삼만 원뿐이었다고 큰소리치자 미조가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삼만 원을 훔친 것과 백만 원을 훔친 것은 다른 거야?”

당연하지, 라고 대답하려다 화를 돌을 것 같아서 삼만 원을 당장 주겠다고 대답했다. 미조가 피식 웃으며 백만 원 갚아야지, 하고 차갑게 말했다. 하마터면 미조를 친구로 착각할 뻔했다.

백만 원은 미조의 아르바이트 월급이고, 그 돈이 있었다면 미조는 대학원 등록을 마쳤을 거라고 했다. 중학교 3학년 때 미조는 공부에 아무 관심이 없고 선생에게 혼나는 시간을 버티는 게 유일한 장기처럼 보였는데, 대학을 가긴 갔나보다 싶었다. 나는 미조에게 대학원 따위는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기껏해야 나 같이 어영부영한 꼴이 된다고, 그러니까 삼만 원을 가지려다가 백만 원이나 그 이상을 물어주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는 대신 미조에게 나 말고 지갑에서 백만 원을 빼간 범인을 찾으라고 충고했다. 미조는 “그게 바로 너야”라고 야멸차게 대꾸하고는 내게 요새 뭘 하느냐고 물었다. 나야말로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했더니 미조가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일해서 갚아.”

나는 미조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일을 할 수 있었다면 박사 과정에 입학하지 않았겠지.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미조는 대학에 가지 않았다. 당연히 대학원에 합격했을 리도 없다. 다시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게 되었다. 대학 모집 정원과 입학 가능 정원이 거의 비슷한 지경이지만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 때문에. 미조가 그랬다.

미조는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했다. 지갑을 ATM 위에 놓고 오는 일이었다. 비로소 내가 어떻게 백만 원을 훔친 사람이 되었는지 알아차렸다. 미조는 삼만 원이 든 지갑을 습득한 사람에게 백만 원을 훔쳤다고 우겨왔던 것이다.

“하지 않아도 돼.”

미조가 내게 선택권을 줬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당장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건 당연히 백만 원 이상이었다. 풀죽은 목소리로 내게 왜 이러느냐고 묻자 미조가 피식 웃었다. 삼만 원을 훔쳤기 때문에 나는 잠자코 있었다. 실은 미조가 힘들어보여서였다. 미조는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버는구나 싶었다.

당장 월세도 못 내는 처지에 백만 원을 구하려면 부모님에게 뭔가 둘러대야 했다. 아니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받아 그것을 미조에게 준 후 휴학을 하거나. 그러기 싫었다. 삼만 원을 꿀꺽한 수치심을 그 이상의 합의금으로 메우는 건 너무 불공평했다.

하지만 나는 다음 날 미조와 만나기로 한 은행 앞으로 갔다. 미조는 내게 지갑을 주었다. 내가 주워온 것과 다른 지갑이었다. 맘에 안 들면 다른 것으로 고르라며 쇼핑백을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그런 지갑이 몇 개 더 있었다. 모두 빨간색이었다. 괜찮으니 이것으로 하겠다고 하자 미조는 그건 이만 원짜리라고 했다. 쇼핑백에 든 어떤 지갑에는 만 원, 어떤 지갑에는 삼만 원, 어떤 지갑에는 이만 원이 있었다.

“세상에 돈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미조가 말했다. 돈을 버는 일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이 괜히 자본금, 종잣돈, 시드머니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면서.

미조는 우선 지갑에 돈을 가득 넣어 사진을 찍어두었다. 나중에 증거로 쓸 모양인데 그게 더 이상하다는 내 충고는 묵살했다. 누가 지갑의 돈을 사진으로 찍어둔다고.

미조는 내게 ATM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전화를 받는 척 정신 없이 나오라고, 경찰이 분실 장면을 CCTV로 확인할 테니 연기를 잘 하라 일렀다. 나는 그렇게 했다. 지갑을 두는 일은 쉬웠다. 처음 하는 일이지만 훔치거나 몰래 가져오는 게 아

나라 그냥 두고 오는 것이어서 간단했다. 은행 앞 편의점에 앉아 ATM 앞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봤다. 미조는 너무 티나게 보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누군가를 놓칠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오십 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지갑을 ‘습득’했다. 아주머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서 은행 건물 앞 우체통에 바로 넣었다.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고 습득물을 습득물답게 처리한 것이다.

미조가 있었다면 당장 전화하라고 성화였겠지만 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미조가 잠시 후 전화를 걸어와 아직이냐고 물었다. 사정을 말하자, 한번은 봐주지만 두번은 안 봐준다고 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어디냐고 물어보니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이라고 했다. 알고 보니 미조는 쉴 틈 없이 일했다.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사기를 쳤다. 워낙 성실해서 사기를 친다고 나쁘다고 말하기도 힘들었다. 내가 걸려든 것으로 보아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도 옮기는 눈치였지만 제대로 합의금을 받은 적 있는지는 의문이었다.

다음 지갑은 나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 아이가 집어갔다. 그 아이는 지갑을 곧장 은행 창구로 가지고 갔다. 나는 또 전화하지 못했다. 합의금을 마련하려면 그 아이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것 같았다.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는 대신 창구로 가서 지갑을 찾아가지고 나왔다. 그 다음은 할머니였는데, 할머니도 은행으로 들어가 입구에 서 있는 청원경찰에게 지갑을 주었다. 할 수 없이 나는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 지갑을 찾았다. 물론 같은 지점은 아니었다. 미조가 가장 먼저 당부한 게 그거였다. 경찰 신고는 하루에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른 지점을 이용하라는 것.

이렇게 공치나 싶었는데 다음 지갑은 어떤 아저씨가 가지고 갔다. 양복을 반듯하게 입은 아저씨였는데, 지갑을 보자마자 양복 주머니에 넣었다. 점잖게 생긴 아저씨였고 당연히 창구나 우체통, 경찰서로 갈 줄 알았는데 그대로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타고 가버렸다. 양복을 입어 번듯해 보인다는 점이 신고할 용기를 줬다. 돈이 있어 보였던 것이다. 지갑을 챙겨갔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덜했다. 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백만 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울먹였다. 등록금이라고 말하자 자연스럽게 조금 우는 소리가 났다.

이틀 후 습득자를 확인했다는 전화가 경찰로부터 걸려왔다. 그 과정이 너무 수월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 성공적이라고 여겼다. 아저씨는 오늘도 반듯한 양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내가 취객이나 좀도둑처럼 안절부절하며 앉아 있었던 데 비해 아저씨는 범인을 확인하러 온 사람처럼 당당했다. 경찰이 나를 신고자라고 소개하자, 아저씨는 허리를 반듯하게 숙여 인사했고 정중한 어투로 사과했다. 그러고 나서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경찰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돌렸다. 그는 광화문에 본사가 있는 한 신문사의 기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지갑을 돌려주려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전화를 받고 그대로

가는 바람에 돌려주는 일이 늦어졌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경찰과 나는 그가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 주차비를 내는 걸 보았다.

하지만 아저씨 직업을 확인한 후 경찰은 아저씨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따지는 대신 내게 정말 지갑에 백만 원이 들어 있었느냐고 물었다. 대학원 등록금 이라고 대꾸하자 “등록금 낼 때도 아닌데 왜 목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는 질문도 했다.

나는 의심을 받고 있는 듯했다. 믿을 만한 가해자의 신분 때문에. 그가 점유 이탈물횡령죄를 저질렀음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경찰이 방관하듯 쳐다보다가 “거, 적당히 합의 좀 합시다.” 하고 내게 타이르듯 말했다.

아저씨는 장소를 옮겨 얘기해보자며 경찰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내게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다. 좋은 곳에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근처 곰탕집으로 갔다.

그는 앉자마자 내게 묻지도 않고 설렁탕을 두 개 시켰다. 설렁탕이 나오자 허겁지겁 입에 넣으며 물었다.

“너 혼자 하니? 이 일 말아야.”

“네? 아, 네.”

당당한 말투 때문에 그가 경찰서에서와 달리 반말을 쓴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겁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니.”

“이런 일이라뇨. 돈이나 주세요.”

“이만 원으로 백 만원 버는 거니? 기분이 어떻게?”

“아저씨가 제 지갑 가져갔잖아요. 점유이탈물횡령죄요.”

“그래, 난 점유이탈물 어찌고고 넌 사기죄고.”

아저씨가 상반신을 내게 기울이고는 속삭였다.

“너 큰일 났어. 네 신상정보를 다 까발리고 다시는 얼굴 못 들고 다니게 기사를 써버릴 거야. 너 대학원생이라며?”

그러고는 느긋이 다시 자리에 앉아 설렁탕을 마저 먹었다.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듯이.

“알지?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그는 계속 말했다. 세상 일에는 다 대가가 있다. 이만원으로 백만원을 벌 수는 없는 거다. 어디에도 그렇게 치우치는 산수는 없어. 사실 그는 훨씬 많은 말을 했다. 나는 거의 알아듣지 못했지만 기사에 학교와 전공이 다 소개될 거라는 말은 똑똑히 들었다.

나는 이상할 정도로 뽀얀 설렁탕 국물을 바라보며 아저씨에게 걸린 게 나여서 다행이라고, 미조가 걸리지 않아 다행이라고만 겨우 생각했다. <끝>

봉인된 시간.2

신경숙

소설가

이 집에 도착한 지 닳새가 지났습니다. 이곳은 5년 전과 똑같은 풍경입니다. 유정씨가 작업대로 썼다는 탁자에 그어진 금조차도 그대로입니다. 아직 유정씨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캐리어를 현관에서 안에 들여다 놓지도 않았습니

다. 삼십대의 어느 때인가. 긴 여행을 다녀온 뒤에 이상한 무력감에 빠져 여행 내내 끌고 다닌 캐리어를 그대로 세워둔 채 차가운 침대로 파고 들어가 며칠이고 잠만 잤던 때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선생님.
지금 저는 캐리어를 현관에서 들여와서 지퍼를 열고 안에 들어있는 잠잘 때 입을 옷이나 노트와 책 몇 권을 꺼내서 탁자위에 올려놓는 그 간단한 일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요. 지난 5년 동안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몸이 바닥으로 하염없이 가라앉는 상태. 선생님께 답장을 써야겠다고 이곳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을 구하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닳새 전의 일이 아득한 옛날 일 같습니다. 이 집에 도착한 이후 현관문 바깥을 나가지도 않았습니

다. 마당도 내다보고만 있을 뿐 유리문을 열고 나갈 마음이 일지 않습니다. 문밖을 나가는 일이 지금의 내겐 대단한 모험이나 되는 것처럼 엄두가 나질 않는군요.

다섯 전에 유정씨는 제가 이 집에 도착할 시간에 맞춰 문자를 보냈더군요.
- 비대면 시절이라서 우선 문자를 남깁니다. 현관문 키 번호를 xxxx로 해 놓았습니다. 핸드폰 뒷자리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번호를 써 가면서 주의사항들을 적어봤더군요.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집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이 집에 대한 정보들을 적어주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1. 탁자는 5년 전의 그 자리에 배치해두었습니다.
2. 이 집에 대한 소소한 사항들은 식탁위의 노트에 쓰여 있습니다.(와이파이와 패스워드 번호를 포함하여.....)
3. 우선 식사가 될 만한 것들은 냉장고 안과 식탁 앞쪽 서랍에 얼마간 준비해 두었습니다. 굴이 많아서 한 박스 두었으니 축내 주세요.
4. 식수는 당장 마실 것은 냉장고 안에 두었습니다.
5. 방에 있는 옷장 속에 교체할 침대 시트를 여유 있게 준비해 뒀으

니 교체한 후엔 그냥 접어서 옷장 안에 넣어두세요. 나중에 모아서 세탁할테니까요.

6.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문자를 주세요.

5년 전엔 길가 쪽으로 나 있는 작은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도 비대면 시절을 보내느라 현관문을 번호열쇠로 바꿨더군요. 유정씨가 이렇게 철저하게 비대면을 실천할 줄은 짐작을 못 해서 문자를 받으며 약간 당황했던 건 사실입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 탑승수속을 밟을 때 2미터 간격으로 탑승객이 수속을 밟도록 해서 감염병 시대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했는데 막상 비행기에 오르고 보니 빈 자리 하나 없이 탑승객이 가득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2미터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다면 비행기 안에서는 유지하고 싶어도 그 거리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이륙해 탑승객이 내릴 때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는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는 안내방송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처음엔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뉴스나 방송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는 얘기를 늘 들어왔는데 이게 뭐지? 싶어 불안하더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그 거리를 지키지 않으니 슬그머니 불안이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사회적 거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유정씨처럼 철저하게 지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탑승객들 속에 끼어 사회적 거리를 무너뜨릴 때 슬그머니 사라진 불안은 사실은 나 혼자 지킨들... 싶은 체념이었는데 유정씨가 비대면 시절이라며 보내온 문자를 읽는 동안 체념의 자리에 다시 긴장이 되살아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캐리어를 먼저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아랫집을 건너다 봤습니다. 정확히는 아랫집 후박나무 아래를 봤다고 해야겠지요. 5년 전에 후박나무 아래엔 항상 소주병이 수북하게 쌓여있었던 기억이 나서입니다. 낮은 돌담위에 아랫집 아주머니가 올려놓은 소라나 전복껍질들은 그대로인데 후박나무 아래의 소주병들은 보이지 않더군요. 때로 기억들은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장면들을 불러들입니다. 5년 전 여기에 머물 때 나는 거의 매일 아랫집 남자가 후박나무 아래에 앉아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술을 잔에 따르지도 않고 소줏병 입구를 입에 대고 마시곤 했어요. 술병을 바닥에 내려놓는 법도 없이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새벽부터 마시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새벽부터,라고 한 것은 제 판단이고 어쨌면 그는 밤에 마시기 시작한 술을 새벽까지 마시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지. 그가 술 마시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술을 마시고 있거나 마신 후에 부르는 노래의 리듬은 한결 같았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제주 말로 이어지던 해석이 불가능하던 그 노랫말. 저는 이방인으로 거기 머무는 사람이라 가까이 있는 그를 대체로 두려워했으나 그가 노래를 흥얼거릴 때는 그 뜻을 알아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어 암호 같던 그 노래는 묘하게 마음을 일렁이게 하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해야 할까.... 밤 바다 앞을 걸을 때요. 어두워서 저편의 바다는 보이지 않는데 귓가에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소리가 들릴 때 같다고 할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바닷물이 바로 발치에 와 있는데도 모른 채 걷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술에 취해 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된 노래를 흥얼거리면 가까이 가고 싶진 않는데 조심스럽게 귀 기울여 듣게 되곤 했습니다. 그 뜻을 이해 할 수가 없는데도 술에 취한 목소리인데도 그 목소리가 어느 대목을 굽이져 돌아갈 때 제게 전달되던 고통 때문이에요. 고통 때문이라고 표현해버리

고 나니 허탈해집니다. 그가 노래를 시작하면 침울하게 바닥으로 스며드는 것 같던 그 굵이짐이 발생하는 대목을 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와 비슷한 허탈감입니다. 책상에 앉다가, 마당을 서성이다가, 무선주전자에 물을 채우다가, 그의 노랫소리가 들리면 움직임을 멈추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굵이짐은 대목이 지나가고 나서야 저는 제 할 일을 이어하고 했지요. 그는 술을 끊은 것일까요? 5년 전과는 달리 후박나무 밑은 술병이 한 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낮은 돌담위에 전복이나 소라껍질들만이 소리 없이 놓여있었어요.

유정씨의 말대로 제 핸드폰 뒷자리가 이집 현관문을 여는 비밀번호였습니다. 안으로 캐리어를 들어 놓다가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당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미닫이 유리문 앞에 놓여있는 책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긴 아일랜드 식탁 때문이었을까요. 집 안 풍경이 5년 전에 제가 허둥지둥 이곳을 떠나던 때 같아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산보 나갔다가 좀 먼 길을 도느라 피곤해져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유정씨는 책상이 놓인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책상에서 바라다 보이는 마당 가운데에 검은 흙으로 그림을 그리듯 만들어놓은 제주도의 모습도 그대로였습니다. 마당 안에 제주도가 있는 셈이었어요. 마당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마당 가운데에 제주도를 형상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흙으로 지도처럼 제주도를 만들었다고요. 마당 한가운데에 제주도가 있는 것 같아서 자주 갓길로 빙빙 돌아보며 여기쯤이 표선, 여기쯤이 성산, 여기쯤이 만장굴, 여기쯤이 비자림...이러면서요. 유정씨는 오목하게 파인 가운데가 한라산의 백록담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백록담 아래로 작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하던 유정씨. 잠깐 그렇게 마당을 내다보다가 비어있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쓸어보는데 갑자기 쩡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유리창에 부딪히고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지도 않고 유리문을 밀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새는 바닥에서 푸드덕 거리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지요. 어느 날 아침에 마당을 향해 놓여있는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고 있는데 어디선가 날아든 새가 유리창으로 직진해 날아들더니 쩡 소리가 나도록 부딪히고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져 푸드덕 거리는 새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스물을 다 세기 전에 새는 몸을 추스르고 날아갈거라고 예측하면서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는 순식간에 나타난 새가 유리창에 부딪힌 후 바닥에 떨어지는걸 처음 봐서 상황이 판단이 되질 않아 새를 난감한 마음으로 바라만 보았으나 그저께는 놀라는 마음도 없이 곧 정신을 차리고 날아 갈거야, 생각했습니다. 내가 스물을 세기 전에 새는 정신을 차리고 날아 갈거야, 라고.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유리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진 새는 열여덟을 세기 전에 깃을 세우고 균형을 잡는 것 같더니 한 발짝 내딛어보고는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새는 잠깐 다시 낮아지려는 듯 했더니 힘껏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곤 새의 자태는 곧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그저께 그렇게 새가 제 눈앞에서 사라지고 난 후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몸에서 힘이 쭉 빠져서 저도 모르게 막 들어온 이집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울에서 이곳으로 올 때는 빨리 도착해서 선생님께 답장을 쓰자는 것이었는데, 선생님께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어서 비행기 안에서도 마음이 들썩거렸는데... 그 마음과는 달리 저는 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힌 게 아니라 저의 뇌를 찢고 사라진 것처럼 저는 몸을 가눌 수 없이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아직껏 캐리어조차도 현관에 그대로 놓여있네요. 신발도 사흘 전에 벗어놓은 상태로 한쪽은 캐리어 옆에 한쪽은 거실로 들어오는 입구에 흩어져 있군요. 유정씨가 잘 도착했는지요? 라고 물어오는 문자에 겨우 네, 라고 답하고는 핸드폰을 빈 책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침대가 놓여있는 잠자는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당을 내다볼 수 있게 놓인 책상 옆으로 놓인 소파에 거의 매시간 드러누운 채로 지냈습니다. 허리가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사람처럼 일어 나려고 하면 늘어지고 휘어지는 느낌이라 겨우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드러눕고 갈증이 나서 생수병을 가지러 갔다가 다시 드러눕고...그렇게 드러누운 채 빈 책상과 그 너머의 유리창 바깥의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낮이 지나고 밤이 와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이해 할 수 없겠지만 그 간단한 일조차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다가 깨기를 반복 하며 졸곤 그렇게 누워 있었다고 생각했으나 또 그러기만 한 것도 아니더군요. 제가 자다가 깨다가 했을 뿐이라구요. 날이 밝아와서 주위를 살펴보면 길게 놓여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으로 어지러웠습니다. 뜯긴 라면봉지, 바닥에 떨어진 생라면 부스러기, 남비 바닥에 늘어붙은 국물... 유정씨가 냉장고 안에 넣어둔 우유 한통을 다 마시고 구겨놓은 우유곽과 한꺼번에 네 개를 먹었는지 층층으로 쌓아놓은 요거트 빈통이 옆으로 쓰러져 있기도 했습니다. 사과를 깎아먹고 남긴 껍데기를, 메밀 국수를 삶다가 포기했는지 냄비에 가득 국수가닥이 붙어터져 있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자다가 깨다가 하는 어느 틈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먹어댄 흔적들과 마주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혹여라도 여기에 CC카메라가 달려 있을까봐 저도 모르게 휘~둘러보곤 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길게 놓인 아일랜드 식탁 건너로 비척비척 걸어가서 냉장고를 열고, 가스렌지에 불을 켜고, 라면봉지를 뜯고 있는 제 모습이 영상으로 찍혀있을 것만 같아서요. 오늘 새벽에 정신을 차렸을 때 유정씨가 어젯밤에 일찍 자나 봅니다. 지나가다가 보니 집에 불이 켜 있지 않네요? 라는 문자를 보낸 걸 확인하고 겨우 힘을 내서는 네, 일찍 잠들었어요, 라고 두 번째 답을 쓴 게 지난 닷새 동안 제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오늘 시간이 괜찮으면 고사리 뜯으러 저랑 함께 아끈이 다랑쉬 오름에 갈래요? 요즘 고사리가 한창입니다.

내 문자를 받고 유정씨가 바로 답을 보내왔습니다. 이른 새벽인데 유정씨도 깨어 있었나봅니다. 저는 나중에 가자고 답을 보냈습니다. 그 짧은 답을 하는데도 온 힘이 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닷새째 꿈쩍없이 쓰러져 있었던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밤이면 일어나서 아무거나 닿는 대로 먹어대서 거울을 볼 것도 없이 얼굴이 통통 부어 있을게 뻔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으니까요.

-사실은 고사리보다 걱정이 되어서요. 통 바깥에 나오질 않으니... 어제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볼까? 하는 생각도 했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지요?

유정씨가 다시 보낸 문자를 읽으며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사실은 유정씨에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저 유리문 좀 열어주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걸 눌러 참았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나갈 기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라면을 끓여먹고 굴을 까먹고 메밀국

수를 찾아내고 요거트를 몇 개씩이나 꺼내먹고 그랬을까요? 어젯밤은 저 중의 메밀국수만 빼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먹은 것 같더군요. 굴껍질을 벗겨놓은 것으로 보면 굴은 스무 개는 먹었을 것 같습니다. 소파에 누워 있다가 몸을 뒤집었습니다. 일.어.나.야.한.다, 고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일.어.나.야.한.다,고요. 선생님은 삼, 사년 계획으로 남편을 따라 뉴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17년이 걸렸다고 했었지요. 17년 만에 떠난 고국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어디도 나가지 못하고 호텔에 누워 잠만 주무셨다고 하시더니 지금 제가 그러고 있군요. 그때는 그 말씀을 이해했다기 보다는 그렇기도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선생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고국에 17년 만에 돌아왔는데 줄곧 잠이 쏟아져서 주무시기만 했다고 하셨던거....왜 그렇게만 말씀 하셨을까? 를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그때 주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주무실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 사실 주무신 것도 아니고 그 무엇도 할 수 없이 온 몸에 힘이 쭉 빠져서 누워계신거구나, 그것을 잠만 잤다고 표현하신거구나, 이제야 깨닫습니다. 선생님은 그때 잠에서 깨면 괜.찮.다. 괜.찮.다....를 연신 중얼거리셨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일.어.나.야.한.다. 일.어.나.야.한.다...고요. 말이란 묘한 힘이 있어서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으면 그 말처럼 된다고 한 사람이 선생님이셨던가요? 호텔방에 누워 있다가 조금 기운이 생기면 일어나서 창가 쪽으로 걸어가 휘황한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선생님이 중얼거렸다는 괜.찮.다. 괜.찮.다...라는 말. 의지할 건 그 말 뿐이라 끊임없이 중얼거렸다는 괜.찮.다 라는, 말. 그때는 제가 어려서 괜.찮.다. 중얼거리어서 정말 괜.찮.다.이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싱겁게 받아들이며 토까지 달았지요. 선생님은 물끄러미 저를 보더니 괜.찮.다 라는 말을 하게 되기까지 다른 말들을 많이 중얼거렸지, 라고 하셨지요.

-무슨 말요?

제가 되물을 때 선생님은 그건 말해 줄 수 없어...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말이기에 말해줄 수 없다, 고 하시는 걸까, 잠깐 생각하고 말았는데 수년이 지난 후에야 선생님이 괜.찮.다 라는 말에 이르기 전에 마주했을 말들과 저 스스로 마주했습니다. 제가 일. 어.나.야.한.다, 라는 말에 이를 때까지 마음에 가득 차 있던 그 말은 선생님의 겪은 말이기도 하겠지요.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으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소파에 코를 묻고 엎드린 채 일.어.나.야.한.다,를 수없이 반복하는데 유정씨가 작가님 이거 좀 보세요, 하고는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어지간히 걱정이 되나봅니다. 유정씨가 보낸 사진은 칠레의 산티아고에 퓨마 한 마리가 사람이 없는 보도를 유유자적하게 걸아가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이 집으로 숨어들자 텅텅 빈 대도시들의 풍경이 뉴스화면에 등장했지만 그 텅빈 거리에 퓨마가 걸어다니는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유정씨는 사진과 함께 산티아고에 통행금지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입니다. 인적이 끊긴 거리에 저렇게 퓨마가 나타났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퓨마 사진을 시작으로 콜롬비아 주택가에 출몰한 여우사진을, 스페인 북부 어딘가의 밤 거리에 곰이 어슬렁거리는 사진을 연속해서 보내왔습니다. 일본이 배경인 사진 속에서는 사슴이 지하철역을 어슬렁거리고 있더군요. 사진 속에서 입출향이 금지된 항구에 돌고래가 출현하고, 해변에는 너구리가 활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거나 이동을 못하게 되자 베니스의 물도 맑아졌는데 그 물위에 백조가 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식물원 안에 말 사육장이 있는데 식물원을 빠져나온 말

세 마리가 파리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유정씨의 설명이 저를 웃게도 했습니다. 글썄요, 첫날은 말이 세 마리만 나왔는데 다음날은 다른 말들을 더 데리고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다가 돌아 갔다고 하네요. 사육장을 빠져나와 인간이 사라진 밤거리를 활보하는 말들이라니.... 유정씨가 보내준 사진들을 여러 번 반복해 보다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수도 있구나, 생각하게 했던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파리의 노트르담이, 베니스의 산마르코 광장이 사람이 전혀 없이 텅 비어있는 날이 올 줄이야.

이상한 일이지요. 감염병으로 인해 세계의 대도시가 텅 비고 그 텅 빈 거리에 표마가 여우가 너구리와 돌고래가 출현한 사진들을 보다가 스스로를 밀어내듯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캐리어를 안으로 들여다 놓으면서 팽개쳐진 신발을 모아서 앞부분을 현관문 쪽으로 두었습니다. 잠자는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면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는데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이곳의 날씨는 변화무쌍합니다. 같은 구름이 없고 같은 바람이 없습니다. 매번 짹짹 놀라게 하는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이 섬에 가득이지요. 종종 육지에서 이곳으로 터전을 옮겨오면 이곳 사람들이 그 이방인을 삼년을 두고 본다고 합니다. 그가 삼년을 넘기면 그제서야 그가 여기서 살 모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삼년 안에 다시 육지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변덕스런 이곳의 날씨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비와 바람. 여기서 지내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하지요. 빗소리와 바람소리로 인해 솔하게 잠을 깨게 되니까요. 유리창이 흔들리고 지붕이 날아갈 것 같은 바람이 밤새 불지요. 봄이 올 무렵엔 고사리 장마라고 불리는 비가 연일 내립니다. 그때면 습기가 옷자락에 머리카락에 착착 들러붙지요. 빗소리를 들으며 캐리어에 담아온 옷가지들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거울이 보이면 한사코 피하면서요. 퉁퉁 부어 있을 얼굴과 대면하면 다시 주저앉을까봐서요. 침대시트를 정리하고 세면장 바닥을 샤워기의 물로 씻어내고 거울을 보지 않은 채 며칠 만에 세수를 하고 지난 밤에 기억도 못하는 사이에 어지럽혀 놓은 식탁 위를 치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이 집에 온 후 처음으로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탁자위에 올려두고는 마당을 쳐다보고 있다가 노트북 옆에 노트를 꺼내놓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닷새 전에 제가 이 집에 도착했을 때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히고는 바닥에 나동그라져 있던 새를요. 다 그리고 보니 그때 버둥거리다가 웅케도 다시 몸을 바로 세우고 허공 속으로 사라진 새의 형상이 거기 있더군요.



지금 바로 기본소득의 형태로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이건민

계간《기본소득》

편집위원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본소득과 관련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잇단 발언, 기본소득을 둘러싼 여러 매체에서의 토론 등을 계기로 기본소득 논쟁이 활활 불붙고 있다. 그 사이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의 대안 정책을 다룬 흥미로운 책들도 속속 출판되었다. 다비드 카사사스David Casassas의 『무조건 기본소득: 모두의 자유를 위한 공동의 재산』, 말콤 토리Malcolm Torry의 『왜 우리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관한 최근 도서 중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추천해야 한다면, 필자는 단연코 금민 소장(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지금 바로 기본소득』을 꼽겠다. 이 책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라는 본제와 같이 기본소득의 정당성, 기본소득을 통한 분배 정의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치밀하게 논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부제와 같이 기본소득의 현재성과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인 “기본소득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이유”에서는 기본소득이 우리 모두의 권리임을 존 로크John Locke,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등 당대의 저명한 정치철학자들의 논변구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논증한다. 그리고 플랫폼 자본주의의 성격,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 기본소득의 현재성과 정당성을 확인하며,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이자 새로운 거시경제 조정 방식으로서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2부인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기본소득”에서는 기본소득이 지금까지의 복지국가와 복지제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기본소득이 일자리보장보다 우월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본소득이 젠더 평등과 생태적 전환의 필요조건인 이유, 그리고 젠더 평등과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기본소득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논한다.

1부는 1장 “모두의 것과 각자의 것”, 2장 “모두의 것에서 나오는 모두의 몫”, 3장 “플랫폼 자본주의와 빼앗긴 빅데이터”, 4장 “기본소득,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로 이루어진다.

1장은 공유부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기본소득 지지자들까지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부기금을 조성하거나 주식회사 일반 또는 플랫폼자본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설정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만이 공유부의 분배방식이고 조세기반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의 1장은 조세형 기본소득까지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기본소득은 ‘규범적 공유’ 개념을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사실성의 영역에서는 사적소유권이 유효하더라도 규범성의 영역에서는 공유가 사적소유권에 대해 우선성을 가진다고 전제할 때에만, 조세형 기본소득 제도가 정당성을 얻”으며, 원천적 “공유 개념은 조세형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이룬다(37면). 그런데 저자는 “현재의 법률적 소유관계가 어떠하든지 대지와 자연물은 원래 모두의 것이라는 개념”을 뜻하는 ‘원천적 공유’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공유부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37-38면). 키케로, 후안 루이스 비베스(Juan Luis Vives), 로크 등 페인 이전의 사상가들은 원천적 공유 개념으로부터 기껏해야 부자의 부조 의무 또는 정치공동체의 공공부조 의무만을 이끌어냈을 뿐이며, 페인에 이르러서야 “소유와 부조의 이중구조를 낳을 뿐”인 ‘약한 공유’ 개념을 넘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강한 공유’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38면).

페인이 공유부배당으로서 기본소득 개념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적소유가 성립될 경우 원천적 공유가 사적 소유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로 이중화된다고 하는 페인의 ‘이중적 소유권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의 개념 구분과 양자의 분리불가능성, 가치의 창출과 증식이 사회적 협동의 결과라는 점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적 소유’ 상태에서는 가치가 형성되거나 양화되지 않으며, ‘인공적 소유’ 상태에서의 노동투입으로 인해 비로소 가치가 창출되고 증대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창출되고 증대된 가치가 오롯이 ‘인공적 소유’의 몫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자연적 소유’의 가치 역시 양적으로 표현될 수 있게 한다. 즉 “자연적 소유는 원래 가치를 가지지 않지만 원천적 공유가 인공적 소유로 전환됨으로써 가치를 가지게 된다.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의 두 종류가 하나로 합체된 상태에서는 자연적 소유도 가치를 가지며, 곧 몫이 부여되어야 한다. 인공적 소유를 확립하는 노동은 자연적 소유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85-86면).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자연적 소유’의 가치는 그 스스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에 의존하는 개간 노동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페인이 개간은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는 개간에 의한 가치의 형성과 증대가 사회적 협동의 산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협동의 몫을 페인은 자연적

소유로 개념화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동투입에 의한 가치증대량을 제외한 부분, 즉 특정 요소로 환원 가능한 증대량을 제외한 모든 부분, 곧 페인이 ‘사회의 효과’라고 부른 외부적 효과의 총합은 자연적 소유의 몫”이라 할 수 있다(86면).

2장에서는 공동소유와 공유부배당의 관계를 따진다. 여기서 국가의 배타적 소유를 의미하는 공공소유와 공동소유는 엄연히 다르며, 공동소유 형태를 띠다 하더라도 기본소득이 반드시 연역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엘리너 오스트롬 Elinor Ostrom의 ‘공유재산 체제 common property regime’의 경우에는 특정 공유지에 속한 ‘내부자’의 ‘용익권’ 체제일 뿐(용익권이 외부자에게까지 확장되지 않을뿐더러 내부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용익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공유지로부터 소득을 얻을 수 없음), ‘내부자’와 ‘외부자’ 모두를 위한 공유부의 평등한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은 결코 도출되지 않는다. 또한 ‘노동자 공산주의’와 ‘노동주의’와 같이 (임)노동을 신성시하거나 의무화하는 전통을 고수하는 한, 한 사회 내에서 공동소유의 형태가 아무리 확장된다 하더라도 기본소득이 들어설 공간은 전혀 없게 된다. 따라서 공유지 용익권 개념에 선차적인 ‘원천적 공유’ 개념에 입각할 때에만, 그리고 노동주의에서 벗어나 가치의 창출과 증대에서 공유부가 담당하는 기여 및 효과에 대해 승인할 때에만 기본소득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3장은 플랫폼 자본주의하에서 공동소유형 사회배당 제도와 공유지분권 모델의 현재성을 검토한다. 닉 스르니첵 Nick Srnicek(2020)이 강조했듯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데이터의 중심성 centrality of data 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자본은 개별 생산수단을 광범하게 소유하지 않고서도 플랫폼 알고리즘의 소유를 통해 데이터를 특정 방식으로 기록, 저장, 생산, 가공, 활용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함은 물론 전체 사회를 실제로 지배한다. 디지털 전환은 비단 플랫폼 자본의 눈에 띄는 부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고, 저숙련,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와 플랫폼 노동을 증가시키며, 우리의 전체 삶과 활동을 실질적으로 포섭하고, 생산성, 고용, 임금 간의 거대한 탈동조화를 낳는다는 점에서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도전과제가 되고 있으며 기존의 노동보호와 사회보장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디지털 전환이 탈자본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기술낙관주의적인 시각으로 경계해야 한다.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는 “빅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가 중요한 물음이 되며, 빅데이터의 주인이 사회구성원 모두라는 것의 의미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수익을 평등하게 나눠 갖는 것에만 결코 머무르지 않으며 독립적이고 투명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방향, 데이터 주도 혁신의 방향을 좀 더 생태적이고, 좀 더 젠더가 평등하고, 좀 더 분배평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를 포괄한다(181면). 즉 공유지분권 모델에 입각한 기본소득은 “자동화를 촉진하면서도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182면).

4장에서는 기본소득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논한다. 먼저 ‘시민권의 원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자리매김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18세기 말의 사상가인 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 Thomas Spence는 보통선거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유부 배당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둘 모두 보통선거권보다 공유부 배당권이 규범적으로 우선된다고 사고했음을 강조한다. 기본소득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경제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공유부 배당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공유자 민주주의 commoner

democracy'라 개념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롤스와 미드가 주장한 '재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를 넘어서고자 하는 기획이라 할 수 있다. 공유자 민주주의에서 "정치공동체는 기본소득 규모를 정함으로써 조건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질 비시장적 소득 분배의 규모와 양을 사전에 확정하지만, 구체적인 자원분배는 시장을 거쳐서 이루어"지며, "기본소득이 실현된 공유자 민주주의"는 공유부 배당 몫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사전적 조정을 수행"한다(185면).

2부는 5장 "기본소득, 기존 복지와 어떻게 다를까", 6장 "일자리 보장이 가난을 해결해줄까", 7장 "시간은 어떻게 여성을 억압하는가", 8장 "녹색 기본소득은 가능한가"로 구성된다.

5장에서는 사회적 위험이나 욕구에 대한 식별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기존 사회복지제도(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등)와는 달리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의 정당한 몫, 권리에 기반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선분배'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조세형 기본소득 역시도 공동소유형 기본소득, 공유지분권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공유부 배당'이라는 점에서 원리적으로는 '재분배'가 아니라 '선분배'임을 명확히 밝힌다. 기본소득은 시장소득을 분배하기에 앞서서 사회적 공통유산의 수익을 공유하는 배분임을 강조한 조지 더글러스 하워드 콜(G. D. H. Cole)의 논의가 소개된다.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에 기초한 기존 복지국가의 생산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공유부 분배패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이 강조되며, 기본소득의 지급수준에 따라 기본소득과 함께하는 새로운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는지도 논의된다.

6장부터 8장까지는 노동, 젠더, 생태 면에서 해방을 지향하는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논한다. 6장은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을 임금, 노동유인, 노동의 강제적/자발적 성격, 고용 등에 미치는 노동시장 효과와 물가안정, 경기조정적 자동안정화 기능 등의 거시경제 효과를 중심으로 상세히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본소득과는 달리 일자리보장은 우리 시대의 대안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낸다.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의 설계 준칙이라 할 수 있는 '고정가격/노동공급량 변동의 규칙(fixed price/floating quantity rule)'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없을 것임을 논증하는 부분과 사회 전체에서 유급노동과 무관한 분배의 크기를 사전에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경제에 대한 사전적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서술이 특히나 인상적이다. 7장에서는 젠더 평등을 성별 임금 격차나 성별 노동시간 격차의 문제로 협소화하지 않고 사회적 시간 분배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로 바라보면서, 젠더 평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가 말하는 '보편적 양육자 모델'을 명시적으로 추구하고 기본소득, 노동시간 단축, 사회서비스 공공화를 함께 추진해야 함을 역설한다. 8장은 빈곤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해법인 생산주의, 성장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때에만 긴박한 생태 위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분배를 평등하게 하는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을 위한 필요조건, 핵심구성요소 중 하나임을 탁월하게 논증한다. 아울러 탄소세를 비롯한 생태세와 생태배당을 결합하는 정책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술의 상대가격을 높임으로써 가격기제(시장기제)를 이용하여 생태적 전환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독자적인 생태효과를 낳음을 강조한다.

향후 토론을 위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점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공유부와 기본소득이 가치의 경제학과 부의 경제학에 주는 함의에 관한 것이다.

놀랍게도, 주류경제학과 전통적인 맑스경제학은 가치(가격)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공유하는 지점이 있다.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주류경제학의 한계생산력설은 자본과 노동이라는 생산요소가 있으며 이들이 각자 기여한 몫이 이윤과 임금의 형태로 분배된다고 설명한다. 전통적인 맑스경제학은 노동과 노동력을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원료라는 유동자본과 기계와 같은 고정자본은 자신의 가치를 생산과정(가치증식과정)에 그대로 이전시킬 뿐이며(이러한 의미에서 둘 모두 ‘불변자본’임), 노동력이 생산과정(가치증식과정)에 투입됨으로써 노동력의 가치(재생산비용)보다 더 큰 가치를 노동력의 사용가치(발휘)를 통해 창출한다는 사실에서 잉여가치(이윤)의 비밀을 밝힌다. 아울러 기계, 원료 등의 ‘불변자본’ 역시 과거의 ‘산 노동’으로서의 ‘가변자본’의 산물이므로 과거로 무한 소급하게 되면 결국 모두 ‘산 노동’으로서의 ‘가변자본’으로 환원된다(이러한 이유로 불변자본은 ‘죽은 노동’으로도 불린다). 주류경제학은 한계생산력설을 통해 현재와 같은 형태의 분배가 정당하다는 함의를 도출하는 반면, 전통적인 맑스경제학은 노동자들은 자신이 가져야 할 정당한 몫만큼 얻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착취당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거나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개입과 운동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이끌어낸다. 그런데 여기서 양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본과 노동(력)만이 생산요소로서 가치창출(가치 증식)에 기여한다는 사고이다. (칼 맑스 *Karl Marx* 역시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2007)에서 개별 자본가들이 생산과 노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협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을 독차지한다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 ‘자본의 생산력 *Produktivkraft des Kapital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맑스가 ‘자본의 생산력’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의 일부가 개별 자본에 고용된 노동자 전체를 넘어서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향유되어야 한다는 관점까지로 (잠재적으로라도) 나아가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토지’가 생산요소에서 빠져 있다는 점은 일찍이 헨리 조지와 조지스트들에 의해서 잘 지적되어 왔는바, 여기서 더 나아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강남훈 이사장은 자연적, 사회적 ‘공유부’ 역시도 생산요소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강남훈, 2019; 류승연, 이승훈, 2020. 6. 22). 이는 전체 사회의 가치 증대의 일정 몫은 ‘사회의 효과’, ‘외부적 효과’이며 ‘사회적 협동의 산물’로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정당하다는 저자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 특히나 “노동투입 없는 생산의 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가치의 경제학에서 부의 경제학으로의 전환”이 더더욱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117면). 물론 노동의 미래에 대한 특정한 가정이나 전망에 기대지 않고 일반론적으로 말하더라도 ‘공유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기존 ‘가치의 경제학’을 쇄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하겠다.

‘공유부’를 명시적으로 감안하는 것이 가치의 경제학과 부의 경제학에서 중요성을 띠는 이유는 현재의 생태위기와도 밀접히 연관된다. 생산요소로서 ‘공유부’에 속하는 자연(제임스 오코너 *James O'Connor* (1988) 식으로 말하자면 ‘생산조건 *conditions of production*’)을 체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현대의 경제학은 마치 자연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인 양 취급해왔다. 이는 ‘이윤의 무한 추구’라는 자본의 논리와 결합함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오늘날의 생태위기를 낳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경제위기’는 파괴적이기는 하지만 위기 이후에 회복 국면이 도래한다는 점에서 순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생태위기’는 임계점을 넘어설 경우 회복이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비가역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생태위기’가 ‘경제위기’보다 더 근본적이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자연을 비롯한 ‘공유부’를 생산요소로서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공유부 배당으로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부 자체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재생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을 위한 필요조건,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를 이루며 생태세와 생태배당을 결합하는 정책은 고유한 생태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공유부와 기본소득, 생태적 전환의 지속가능한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한다.

둘째, 공유부 배당의 ‘정당한’ 크기와 관련된 것이다. “개별적인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공통부의 크기가 GDP의 10%라면 10%를, 90%라면 90%를 모두에게 동등하게 배당해야만 공통부 분배정의가 실현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224-225면), 우리가 그 크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가 제시되었다면 더욱 좋았을 듯싶다. 물론 이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말끔히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정하에서 만든 인공지능 게임에서 새플리 가치로 계산한 기본소득의 크기는 허버트 사이먼이 제안한 70%가 아니라 제임스 미드가 제안한 50% 정도”라는 강남훈의 연구(2016: 31) 정도가 눈에 띄는 뿐이다. 기본소득의 지급수준을 ‘정치’의 영역에서 결정할 문제로 열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그러할 경우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철학을 인정한다는 가정하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노동자(노동계급)에 대한 착취를 낳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다. 향후 이 이슈에 대한 연구가 진전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충분한 기본소득이 도입된 사회에서의 사회보험의 비중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완전기본소득이 도입된 사회에서도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올바르게 말한다(241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공통부 분배패러다임이 완전히 정착된 상태에 대해서도 여전히 복지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복지체계는 현금복지인 기본소득과 현물복지인 공공서비스의 두 종류로 대별되게 될 것이고 고용중심의 사회보험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다(241면). 기본소득 지급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회에서의 사회보험의 중요성은 현재의 그것에 비해서 분명히 낮아질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다소 강한 전망이 아닐까 싶다.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기본소득의 지급 수준 등에 따라 사회보험이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언급이었다면 무난하지 않았을까 한다.

* * *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세상에 던지고자 한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지금 바로 기본소득의 형태로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분배하라.”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장기적인 시간 계획과 함께 그 구체적인 형태를 어떻게 채워나가고 변화시켜 나가야 할지, 그리고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돌려주는 다른 방식들, 예를 들면 공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의 접근(성)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재구성하고 확장시켜나가야 할지 등 일 것이다. (물론 기본소득은 이러한 민주적이고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좋은 사회’로 향하는 데 분명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소득이 분배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긴급하게 요청되는 사회적·생태적 전환을 추동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논증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 책은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의 귀중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이 길에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이다.

참고

- 강남훈(2016).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마르크스의 지대이론과 새플리 가치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연구》 13(4). pp.12~34.
- 강남훈(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 박종철출판사.
- 류승연, 이승훈(2020. 6. 22). “기본소득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지름길,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기본소득 논쟁 ① 찬성] 10년 전부터 ‘기본소득주의자’ 강남훈 한신대 교수”.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1123 [2020년 6월 23일 최종접속]
- 마르크스, 카를(2007).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1』,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2』,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3』. 김호균 역. 그린비.
- 스르니체, 닉(2020). 『플랫폼 자본주의』. 심성보 역. 킹콩북.
- O'Connor, James (1988). “Capitalism, Nature, Socialism: A Theoretical Introduction”. Capitalism, Nature, Socialism: A Journal of Socialist Ecology 1(1). pp.11~38.

스코틀랜드 기본소득 실험 계획의 주요 내용

이건민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이 글에서는 스코틀랜드 시민기본소득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위원회(Citizens' Basic Income Feasibility Study Steering Group)가 2020년 6월 발간한 스코틀랜드 기본소득 실험 최종보고서(Hearty et al., 2020)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기본소득 (관련) 실험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기본소득 실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한다.

우선 스코틀랜드 기본소득 실험 계획이 수립되어온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빈곤, 불안정노동, 경제적 불안정, 노동의 성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해온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7년 8월에 파이프Fife, 글래스고Glasgow, 노스 에어셔North Ayrshire, 에든버러Edinburgh의 기본소득 실험을 위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McFarland, 2017. 10. 19). 2017년 11월에는 스코틀랜드 기본소득 파일럿 운영위원회(Scottish Basic Income Pilot Steering Group)가 만들어졌으며, 2018년 5월 10일에는 스코틀랜드 의회Holyrood를 대표하는 다섯 정당 중 세 정당(스코틀랜드 국민당, 녹색당, 노동당)의 하원의원 7명이 Cross Party Group on Basic Income을 창설했다(Bollain et al., 2019). 스코틀랜드 기본소득 파일럿 운영위원회 회원들은 핀란드 탐페레에서 개최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참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1월 보고서를 출간했다(Barclay, McLachlan and Paterson, 2019). 스코틀랜드 시민기본소득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2019년 10월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Citizens' Basic Income Feasibility Study Steering

Group, 2019)를, 2020년 6월에 최종보고서(Final Report)(Hearty et al., 2020)를 발간했다.

아래는 최종보고서 내용 중에서 기본소득 파일럿 모델과 관련한 핵심 권고사항(Executive Summary, 운영위원회에서 선호하는 모델의 요약 표(Appendix 2: Summary Table of Preferred Model, 주요 성과변수와 기본소득 지급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표본의 크기를 계산한 표(Table 11)를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소개하는 자료가 기본소득 실험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토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¹⁾

1. 기본소득 파일럿 모델과 관련한 핵심 권고사항(Executive Summary)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소득 파일럿 모델과 관련하여 권고한 핵심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① 기본소득의 지급수준이 상이한 두 개의 포화장소(saturation site; 특정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를 포함한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을 할 것: 한 곳에는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다른 한 곳에는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함

②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지급이라는 기본소득의 5대 원칙에 부합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할 것

③ 최소소득기준(Minimum Income Standard; MIS)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과 기존의 복지급여 수준에 상당하는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할 것

④ 실험과 관계없는 개인들과 비교했을 때 실험 참가자들이 더 열악해지거나 더 취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⑤ 기본소득과 현존 사회보장제도의 상호작용(예를 들어, 사회부조를 비롯한 기존 복지급여의 수급 판정과 수급액 산정 시 기본소득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될 경우,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기존 복지급여를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재정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음)으로 인해 기본소득 실험 참가자들이 이전보다 더 열악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 기술, 전달 측면에서의 복잡한 변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것

2. 운영위원회에서 선호하는 모델의 요약 표

<표1> 운영위원회에서 선호하는 모델의 요약 표

기준/고려사항	선호 모델
파일럿 기간	1년의 준비기간 후 3년간의 파일럿 실험
실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지역을 포화장소로 삼는다. 지역 내 모든 거주자는 실험에 참여할 수 있다. · 통제집단은 파일럿 커뮤니티들과 동일한 표집(sampling) 틀로부터 추출한 인구의 층화된 무작위 표본(stratified random sample)으로 구성된다. · 포화장소 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 포화장소로 들어온 전입자들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자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 포화장소를 떠난 사람들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시간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 만약 파일럿이 진행될 경우 실험에 대한 강제 참여를 고려하는 것이 권고되지만, 스코틀랜드 정부는 또한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절차적 근거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1) 스코틀랜드 기본소득 실험 계획에 대한 더 상세한 소개와 이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평가는 다른 지면을 통해 제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급 유형 및 정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 이체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지급된 기본소득· 정기 급여(매주, 2주에 한 번, 또는 매달 지급되는 방안이 선호됨)· 사전 지급
보편성	소득, 연령, 개인적 특성들에 의해 제한됨 없이 (포화장소 내의) 모든 사람에게 지급됨
조건성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않으며, 기본소득은 권리로서 주어지는 것임
개별성	<p>성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에 대한 급여는 주 양육부모/후견인(대개는 어머니)에게 지급됨·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에게 지급됨
지급 수준 ¹	<p>두 개의 지급수준을 포함하는 기본소득 실험이 선호됨</p> <p><u>높은 수준 기본소득(주당):</u></p> <p>0~15세: £ 120.48(주 부양자/양육부모에게 지급됨)</p> <p>16세부터 연금수급연령까지: £ 213.59</p> <p>연금수급연령: £ 195.90</p> <p><u>낮은 수준 기본소득(주당):</u></p> <p>0~15세: £ 84.54(주 부양자/양육부모에게 지급됨)</p> <p>16~19세: £ 84.54</p> <p>20~24세: £ 57.90</p> <p>25세부터 연금수급연령까지: £ 73.10</p> <p>연금수급연령: £ 168.60</p>
조세제도와와의 상호작용	기본소득은 과세를 목적으로 한 소득 계산에 포함된다. 주의: 기본소득은 참여자의 총 과세대상소득이 소득세 인적 공제Personal Income Tax Allowance 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전달 수단	<p>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기본소득 파일럿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전달 수준은 현재 없다. 가능한 전달 수단은 아래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정부에 의한 전달· 1998년 스코틀랜드법Scotland Act 1998의 예외규정 5Exception 5 또는 예외규정 10Exception 10을 적용하여 스코틀랜드 정부가 전달하는 방안· 지방당국을 활용하는 방안: i) 웰빙 향상을 위한 법적 권한, 또는 ii)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권한· 비정부기구를 통한 전달: 자선신탁/사기업Charitable Trust/Private Company을 이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에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복지급여(노동연금부DWP, 국세청HMRC, 스코틀랜드 정부 또는 지방당국이 제공하는 복지급여를 포함)는 파일럿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본소득과 함께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연금수급연령 참가자에 대한 추가 의견은 아래에서 제시된다.· 운영위원회는 연금수급연령 참여자가 기본소득 파일럿에 포함된다는 정책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금수급자를 포함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을 고수하고 파일럿 내에 포화장소를 갖기를 원하는 현재 접근방식과 일치한다.· 연금수급자를 위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새로운 기초연금state pension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제안한다(£ 168.60). 운영위원회는 기본소득의 다양한 기초연금 수급권과의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인식하며, 연금수급자 참가자들은 현존하는 다양한 복지급여들, 프리미엄들과 보충급여들top-ups을 받게 될 것이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기초연금 지급액수를 초과하는 급여를 받는 참가자가 계속해서 이 금액과 자격을 갖춘 모든 수급권들any passported entitlements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기를 원한다.· 실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다음 복지급여들을 받는 파일럿 참여자들은 기본소득과 함께 이러한 복지급여들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 장애, 제한된 노동능력, 주거 및 육아 지원과 관련한 모든 복지급여들, 프리미엄들과 요소들· 파일럿 참가자들(특히 복지급여 제도와 관계된 사람들)은 실험 기간 동안 또는 이후에 재정적으로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 파일럿 참여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취약한 개인들의 재정적 손해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기본소득은 보유하고 있는 소득/자산 조사 기반 복지급여들의 계산에서 완전히 무시할 것을 제안한다.· 장기적인 재정적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일시 중단된 복지급여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어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에서의 공백이 발생하는 참가자들에게는 실험 기간 동안 1종 국민보험class 1 National Insurance 기여금 크레딧이 부여되어야 한다.

<p>다른 복지급여와의 상호작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호되는 모델은 실험 기간 동안 참여자의 아래와 같은 복지급여 수급권들에 대한 접근을 중단하는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지원Income Support(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 - 소득 기반 구직자수당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 - 소득 연계형 고용지원수당Income-related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 -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가족 요소 더하기 아동 요소Family Element plus Child Element) - 기초연금State Pension - 아동수당Child Benefit - 돌봄자수당Carer's Allowance(기본급여와 스코틀랜드 추가급여Basic Rate and Scottish Supplement) -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단신인 사람을 위한 표준수당Standard allowance for Single person) -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첫 번째 자녀/후속 자녀 급여First child / subsequent child payments · 일반적으로 돌봄자수당Carer's Allowance 내에서 기본적인 수급자격을 갖춘 파일럿 참가자들의 경우 파일럿 기간 동안 이것이 유지되어야 한다. · 실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내에서 지급된 항목과 연금 크레딧 및 legacy benefits 내에서 프리미엄들 및 추가금을 받게 되는 파일럿 참여자들은 기본소득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 제한된 노동능력, 주거, 육아 및 돌봄과 관련된 것들은 특히나 그러하다.
<p>예상되는 표본의 크기/ 실험장소의 수</p>	<p><u>표본의 크기</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가지 수준의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것이 선호된다. · 주요 성과변수(빈곤, 아동빈곤, 실업)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평가가 충분히 힘을 가지려면(예컨대, 실제로 성과변수 면에서 효과가 발생할 경우 그러한 효과를 통계적으로 식별하는 힘을 의미하는 검정력power이 양측 검정two-tailed test에서 8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표본크기는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에서는 약 800,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에서는 약 7,300이 되어야 한다.² 남성과 여성에 대해 서로 다른 효과들을 개별적으로 포착할 수 있으려면,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의 경우 최소표본크기를 800의 두 배인 1,600(또는 커뮤니티 크기를 '지역간'interzones'에 기반할 경우 최소 2,500)으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의 경우 7,300의 두 배인 14,600으로 늘려야 한다. ·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기본소득의 경우, 14,600 정도의 표본크기가 필요하다. · 무응답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표본 크기는 더 증가시켜야 한다. · 통제집단에도 이와 유사한 숫자가 필요하다. <p><u>실험장소의 수</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는 두 개의 지급수준(낮은 수준의 기본소득과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한다. 이것은 두 개의 실험장소들(한 장소에서는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다른 한 장소에서는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함)을 필요로 한다. · 운영위원회는 주요 성과변수들 면에서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커뮤니티들에서 각 수준(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실험하기를 권고한다. · 두 실험장소 모두는 공동체효과를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³

출처: Hearty et al. (2020: Appendix 2)

주:

- 1)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액수는 조셉라운트리재단(Joseph Rowntree Foundation)에서 측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영국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소소득기준(Minimum Income Standards: MIS)을,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액수는 스코틀랜드의 현존 복지급여 수급권을 반영한 것이다.
- 2) 최소표본크기 면에서 양 집단이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지급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지급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 수의 표본에서도 기본소득의 다양한 효과가 식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기본소득의 지급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표본의 수가 적음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통계적으로 식별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동일한 수준의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실험에서 기본소득의 지급수준이 낮을수록 표본의 크기는 더 커져야 한다(아래의 <표 2> 참조).
- 3) 공동체효과는 직접적인 개인 수준의 효과들을 넘어서는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결과들을 말한다. 이러한 효과는 특정 지역 내 모든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체 수준 효과들은 자원봉사활동의 증가, 비공식 돌봄 네트워크들의 창출, 새로운 사회적 기업, 사업, 동호회의 설립을 포함한다. 공동체효과들이 발생하기 위해서 커뮤니티가 얼마나 커야 하는지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지만, 가장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들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3. 주요 성과변수와 기본소득 지급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표본의 크기

<표 2> 주요 성과변수와 기본소득 지급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표본의 크기

	성과변수	스코틀랜드 평균 발생률	포착해야 할 퍼센트 포인트 변화	각 집단에서 요구되는 표본의 크기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아동빈곤	26%	2%	7,340
	빈곤	20%	2%	6,494
	실업	3.3%	3%	792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	아동빈곤	26%	13%	142
	빈곤	20%	10%	196
	실업	3.3%	3%	792

출처: Hearty et al. (2020: Table 11)

주 :

- 1) 검정력 계산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크기가 동일하고 80%의 검정력(즉 실제 효과를 포착할 확률 80%)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성과변수들에서의 증가와 감소 모두를 포착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가정한다(즉 양측검정).
- 2)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려면 이러한 표본의 크기를 두 배로 늘려야 한다.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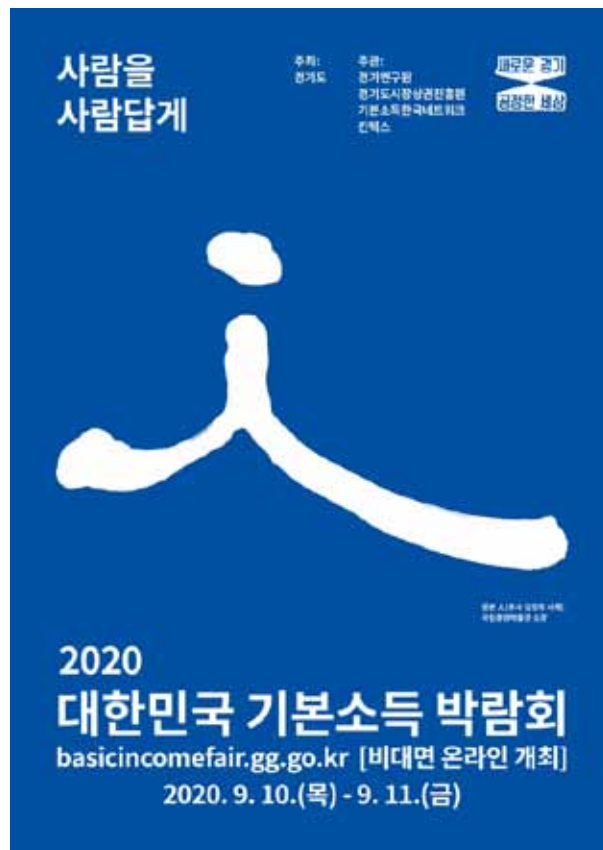
Barclay, Coryn, Julie McLachlan and Mhairi Paterson (2019). Exploring the Practicalities of a Basic Income Pilot. Insights from around the Globe: An International Learning Report from BIEN 2018 Congress. Carnegie UK Trust.

Bollain, Julien, Loek Groot, Annie Miller, Enno Schmidt, Enkeleida Tahiraj, Timo Verlaet and Gunmin Yi (2019). “A Variety of Experiments”. In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 (pp.407-435), Cham: Palgrave Macmillan.

Citizens’ Basic Income Feasibility Study Steering Group (2019). Assessing the Feasibility of Citizens’ Basic Income Pilots in Scotland: An Interim Report. Prepared by the Citizens’ Basic Income Feasibility Study Steering Group. [October 2019]

Hearty, Wendy, Gerry McCartney, Mhairi Paterson, Chris Adams, Coryn Barclay, Neil Craig, Nicola Elliot, Andrew McGuire, Julie McLachlan, Fiona Myers, Paul Vaughan and Andy White (2020). Assessing the Feasibility of Citizens’ Basic Income Pilots in Scotland: Final Report. Prepared by the Citizens’ Basic Income Feasibility Study Steering Group. [June 2020]

McFarland, Kate. (2017. 10. 19). “Overview of Current Basic Income Related Experiments (October 2017)”. Basic Income News. Basic Income Earth Network.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 국제 콘퍼런스를 중심으로

이관형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계간《기본소득》편집위원

경기도가 주최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이 주관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9월10일(목)과 11일(금), 양일에 걸쳐 개최됐다. 원래 박람회는 2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박람회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빚겨갈 수는 없었다. 가을로 연기 됐으며 방식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취하게 됐다. 지역화폐관을 비롯한 각종 전시관과 전시행사도 온라인상에서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9월 10일 박람회 개막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행사는 2부 행사, 즉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이었다. 경기도가 가장 많지만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등의 시군구가 참여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 밖에 3부에서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김찬휘 부소장이 주도의 기본소득 토크쇼 등이 진행됐다.

2019 박람회는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축제의 장이었다. 앰프에서 터져 나오는 음악소리에 귀가 아플 지경이었으며 각종 전시물은 눈길을 유혹했다. 이번 박람회의 온라인 전시행사는 이런 익숙한 풍경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다.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시관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기본소득박람회’라는 아이콘이 생성된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전시관으로 입장하게 된다. 물론 모바일에서도 관람 가능하다. 주제관, 역사관, 세계관 등 17개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상 체험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그래도 가상체험과 실감(?) 사이의 간극이 메워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회 준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수고를 덜 수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개최 자체가 모험인 상황에서 변화한 여건에 맞춰 대회를 준비하는 것도 만만한 작업은 아니었을 것이다.

박람회의 작년 슬로건은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였다. 올해는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이 대동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첩경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싶다. 주최 측의 설명에 의하면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성과에 기반을 둔, 기본소득의 대중화 공론화가 올해 박람회의 주제이자 목표라고 한다.

박람회 전체와는 구분되는, ‘기본소득 국제 콘퍼런스’의 올해 주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이다. 작년의 주제는 “협력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이었다. 콘퍼런스는 9월



11일 하루 동안 MBC 일산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국내 참가자들만 스튜디오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연결된 해외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시대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 등에 대해 소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여기서 이재명 표 혹은 경기도형 기본소득 지급방식(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큰 효과를 나타냈으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침 및 지급방식을 견인해 냈음을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청년 기본소득 정책에 이어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도입방침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콘퍼런스의 사실상의 오프닝 행사는 9월 10일 밤 11시 50분부터 진행된 MBC 100분 토론이라고 할 수 있다. 콘퍼런스 밖의 콘퍼런스라고나 할까. 출연자는 이재명 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노동의 종말’로 유명한 제레미 리프킨이었다.

제레미 리프킨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사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는 팬데믹의 원인을 기후변화와 야생 생태계의 소멸에서 찾는다. 이런 현실에서 탈피하기 위해 그는 무공해 녹색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요청한다.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는 많아질 것이며, 이런 일자리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성격을 띠 것으로 본다. 아울러 로봇으로 대표되는 자동화와 AI는 많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었고 상위 8명의 부자가 인류의 반인 35억 명의 재산에 필적하는 재산을 소유한, 어마어마한 빈부격차를 결과했다. 이런 현실을 시정하고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지사는 자본주의 경제 전반의 문제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진단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특유의 명쾌한 논리로 풀어나갔다. 한계비용이 제로 수준에 달할 정도로 고도화된 생산성으로 인해 재화의 공급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반면 노동투여의 필요성은 크게 감소됨으로써 일자리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일자리의 질의 악화를 초래한다. 이는 곧 재화를 소비할 여력, 즉 수

요의 급속한 감퇴로 이어진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으면 자본주의 경제구조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시행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충격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효과여하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원희룡 지사는 ‘국민의 힘’이 단순히 부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그는 이런 전제하에 가난한 이들에 대해 두터운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선별복지를 해야 한다는 기초에서 논의를 이어나갔다.

9월 11일 기본소득 국제 콘퍼런스는 오전에 2개, 오후에 3개, 총 5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진다.

세션1은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 지자체(경기도) 모형사례”이다. 에두아르두 수플리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명예 공동의장이 좌장을,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이 발표를, 스테판 누네즈 미국 Jain 가족연구소 센터장, 최영준 LAB2050 이사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자였던 마크 폴 미국 플로리다 뉴컬리지대 교수는 사정이 생겨 참여하지 못했다.

김재용 수석은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사례로서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을 소개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삶에 만족감과 긍정적 변화를 증대시켰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과 이것이 촉발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활동과 상심한 민심에도 매우 고무적인 효과를 주었다. OECD 국가 중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를 기록 중이다. 또한 경제 취약계층의 행복지수도 뚜렷하게 증가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스테판 누네즈 센터장은 캘리포니아 스톡턴시를 비롯한 미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연구성과를 소개했다. LAB 2050 최영준 이사장은 기본소득과 관련한 여러 의문들을 소개하고 이를 돌파해나가기 위한 도정에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세션2는 “기본소득 재원조달 전략”이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좌장을,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 발표를 맡았다. 이밖에 폴 로스 호주 시민배당조직위원회 창립자, 이노우에 도모히로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남기업 소장은 국토보유세가 기본소득재원으로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한다. 토지는 불평등과 경제비효율의 주범이므로 여기에 대해 과세하여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불평등과 경제효율제 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비례세로 0.8%(시가대비로는 0.5%)의 법정세율을 과세하면 1인당 연 6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폴 로스 창립자는 소비세(GST상품용역세-VAT부가가치세와 대동소이), 노동시장 규제완화, 세제



<세션 1> 수플리시, 누네즈, 최영준, 김재용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세션 2> 로스, 이노우에, 금민, 남기엽, 이한주, 유영성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세션 3> 주스트, 토리, 다움, 안효상, 강남훈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효율성 강화, 수당 대체 등을 기본소득 자금조달(financing)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노우에 교수는 현대화폐 이론(MMT)에 바탕을 둔, 정부지출확대를 주장했다. 일본을 예로 삼아보면, 정부부채가 증가하더라도 매월 10만엔을 코로나 위기가 수렴될 때까지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금민 소장은 남기업 소장의 안에 동의를 표한다. 국토보유세 세수를 기본소득에 사용함으로써 국민대다수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국토보유세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것이며 분배정의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유영성 단장은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으로의 지급은 토지 소유자들이 지닌 세상에 대한 부채를 청산하는 장치로서 사회구성원 전체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될 것이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굳건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세션3은 “현대자본주의, 삶의 질, 기본소득”이라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제하에서 진행됐다. 좌장은 카렌 주스트 남아공 전 국회의원이, 발표는 말콤 토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단장이 맡았다. 강남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 안효상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과 더불어 티모 다움 독일 WZB 베를린 사회과학 센터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말콤 토리는 ‘현대자본주의의 삶과 그에 대한 기본소득의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그는 기본소득의 원칙들을 다시 환기하고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제도(scheme)를 구분한다.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감소시킬 것이다. 기본소득에 의한 공공(사회)서비스 대체에 대해 불가함을 표명한다. 기본소득에 의한 임금하락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자본으로부터 자유가 가능해진다. 자본주의와 기본소득이 서로 양립불가능한 대척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티모 다움은 독일의 상황을 소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무조건적 일시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청원이 반향을 일으키고 120명에게 3년간 12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계획에 3일 만에 100만 명이 지원 신청하여 시스템이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보편기본소득이 해방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금지불만이 아니라 교육, 보건, 교통, 주거에 대한 무료 공공 서비스를 포함하는 ‘보편적 기본 결과보장(outcome)’을 주장한다.

강남훈 위원장은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선별소득보장에 대해 기본소득이 지니는 우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안효상 부소장은 위기의 어원이 ‘결정’과 관계가 있으며, 기후위기의 시대에 기본소득은 여러 사람이 결정과 관련하여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나아가 자본주의와 기본소득의 긍정적 양립가능성을 넘어 기본소득이 생태적·패더라임적 전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세션4는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리기”이다. 양준호 인천대 교수가 좌장을, 스페인 RE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수사나 마틴 벨몬테가 발표를 맡았다. 독일의 화폐 다양성을 위한 네트워크인 모네타의 팀장 레안더 빈데발트, 인태연 대통령 자영업비서관실 비서관, 이흥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병조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수사나 벨몬테 이코노미스트는 바르셀로나 베소스 지역에서 ‘REC 바르셀로나’라는 지역화폐 유



<세션 4> 빈데발트, 마틴 벨몬테, 김병조, 인태연, 양준호, 이홍우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통 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지역화폐 사용이 포함된, 빈곤과 불평등 해소·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적 책공동생산 프로젝트인 MedTOWN을 소개한다. 이 두 사례에서 보완화폐시스템(지역화폐)은 금융위기에 의한 비효율성과 소득불배의 불평등과 같은 금융시스템으로 인한 재앙을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REC 바르셀로나는 공공지출의 지역적 승수효과를 1년에 54% 상승시켰다. 또한 보완화폐시스템은 MedTOWN프로젝트에서와 같이 공공정책의 공동생산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레안더 빈데발트 팀장은 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을 내놓는다. 통화발행은행, 가상화폐, 지역화폐, B2B 화폐 등을 비교·설명한다. 아울러 보완화폐발행을 통한 기본소득 제공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인태연 비서관은 지역화폐의 개념, 효과를 소개하고 한국의 지역화폐 역사, 특징, 발행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홍우 원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정의, 필요성, 유형, 혜택 등을 소개하고 경기도지역화폐 정책의 추진현황 및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REC 바르셀로나-MedTOWN프로젝트의 문제의식이 경기도의 기본소득-지역화폐 정책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지역내 상거래 촉진, 역외유출 방지, 지역의 네트워크 강화가 그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지역화폐가 큰 역할을 수행했음을 지적한다.

세션5는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이다. 애니 밀러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의장이 좌장을, 헤르만 오비에 핀란드 투르쿠 대학 선임연구원이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이승윤 중앙대 교수와 서정희 군산대 교수,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부의장이 참여했다.

헤르만 오비에 “UBI가 생산가능 인구가 떠날을, 급증하는 사회보장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는 보편기본소득이 진보적인 해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노동운동을 통한 노동보호, 세금/재정 개혁 등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세션 5> 밀러, 오비에, 다발라, 서정희, 이승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토론에서 이승윤 교수는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상황재편으로 기존의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의 부정합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통적 복지국가의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논의의 확대와 구체화를 주문했다. 서정희 교수는 이제 실험이 아니라 제한적 범위에서라도 정책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실험’이라는 방식이 가진 한계로 인해 기본소득이 지닌 해방적 속성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라트 다발라 부의장은 베버리지식 복지국가 모델이 위기에 처했음을 지적하고 기본소득시스템이 미래를 위한 최적의 복지모델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스케치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행사 축소로 인해 필자는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런데 비대면, 언택트, 온라인 방식이었으니 ‘현장’은 과연 어디였을까? 하여간 여러 가지로 모호한 시절이다.



유럽시민 이니셔티브ECI의 기본소득 서명운동

이지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

이번 호에서는 UBIEUnconditional Basic Income Europe이라는 국제 활동가 네트워크와 유럽시민 이니셔티브European Citizens' Initiative: ECI¹⁾에 의해 시작된 기본소득 서명운동을 소개하고자 한다.²⁾ 세계에서 가장 큰 기본소득 캠페인인 이 운동의 슬로건은 “유럽연합EU를 통해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시작하자Start Unconditional Basic Incomes throughout the EU”이다. 지지서명은 올해 9월 25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1년 간 실시한다.

9월 25일, 27개의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하 UBI) 도입을 위한 지지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유럽시민 이니셔티브(이하 ECI)의 목표는 ‘모든 사람의 물질적 존재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UBI를 EU 전역에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EU의 경제·사회·영토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격차를 줄일 수 있는 UBI안을 유럽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EC에 촉구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에서 UBI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이니셔티브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해당 기관에 UBI 도입안을, 조약에 의해 EU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제출

1) ECI는 2012년 4월에 리스본 조약과 함께, 시민에게 의제설정 수단을 주자는 취지로 공식 도입되었다. 2017년 유럽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ECI 개혁을 제안했고, 2020년 1월 1일부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ECI가 시작된 이래로 집행위원회는 총 74개의 시민 이니셔티브를 등록하고 26개를 거부하였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유럽시민 이니셔티브’는 2020년 4월 15일에 등록하여, 집행위원회는 5월 15일에 등록에 동의하였다.

2) BIEN News에 게시된 기사를 중심으로 번역한 내용이다(2020년 10월 12일 접속).

할 것을 촉구한다. 서명자들은 UBI 도입 착수만을 지지하며, 구체적인 UBI의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유럽집행위원회^{EC}에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유럽시민 이니셔티브^{ECI}가 1년 동안 최소 100만 건의 지지 서명을 받고, 7개 이상의 EU국가에서 서명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 유럽집행위원회^{EC}는 이 제안을 실행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만 한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 CoEU}에 회원국과 연합의 경제정책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UBI 관련 초안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유럽이사회^{the European Council: EC}에 보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유럽이사회^{EC}의 결정에 따라, 유럽연합이사회^{CoEU}는 이러한 지침을 제시한 권고안을 채택할 수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7%가 참여할 수 있는 ECI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본소득 캠페인이다. 이 행사는 27개 EU 회원국에서 개최하며, 24개의 다른 공식 언어(60개 이상 토착어 포함)로 약 4억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운동은 UBI에 대한 두 번째 유럽시민 이니셔티브이다. 2013년~2014년에 처음 시작된 서명운동은 285,000개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당시 100만 건의 지지서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벨기에,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등 6개 국가에서 서명할당량에 도달했다.

ECI 문서의 부록과 EU 기본권헌장 및 기타 조약에서는 UBI의 기본 원칙인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충분성을 명시하고 있다(아래 「전문」 참조). 구체적으로 UBI는 ‘복지국가를 대체하지 않을 것’, ‘인간 및 법적 권리’로서 ‘자산조사 없이 모두에게 무조건적 지급’하며, ‘UBI 순지급액은 EU 기준에 따라 최소한 빈곤수준 이상(중위소득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 서명운동이 2021년 9월 25일까지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이후 자금조달방식과 UBI의 세부 실행안에 대해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2020년 10월 14일 현재, EU 전체 회원국에서 약 3.6%의 지지서명이 완료되었다.

ECI 문서의 부록은, 지난 9월 ‘기본소득 제정법’이 발의된 한국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므로 <전문>을 함께 읽는다.

[유럽시민 이니셔티브(ECI 부록 전문)¹⁾ (밑줄: 필자)]

◆ 무조건적 기본소득 UBI 정의

UBI는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적^{compensatory} 복지국가에서 해방적^{emancipatory} 복지국가로 전환하고 완성하고자 함이다.

UBI는 다음 네 가지 기준으로 정의된다.

보편적: UBI는 자산조사 없이 모두에게 지급된다. 소득, 저축 또는 자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령, 혈통, 시민권, 거주지, 직업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EU 전역에 UBI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개인에게: 모든 사람(모든 여성과 모든 남성, 그리고 모든 어린이)은 개별적으로 UBI를 지급 받

1) https://europa.eu/citizens-initiative/initiatives/details/2020/000003_en 참조

을 권리가 있다. 기본소득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다른 사람의 통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UBI는 결혼 상태, 동거 또는 가구 구성, 다른 가구 또는 가족구성원의 소득 또는 재산과는 무관하게 지급된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무조건적: UBI는 인간 및 법적 권리로서 여타 조건을 수반하지 않는다. 즉, 유급고용에 대한 의무, 근로의지 입증, 지역사회 참여, 또는 성역할에 따른 행동과 같은 전제조건을 수반하지 않는다.

충분히 높은 수준: 지급수준은 괜찮은(decent)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정도로 지급되어야 한다. 해당 국가에서 사회/문화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기본소득은 물질적 빈곤을 예방하고 사회 참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UBI의 순지급액이 EU 기준에 따라 최소한 빈곤 위험 수준(at-risk-of-poverty level)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순) 균등화 중위소득의 60% 수준에 상응한다. 대다수의 사람이 소득이 낮아 중위소득이 낮은 국가에서는, 기본소득의 지급수준을 삶의 존엄과 물질적 보장, 사회에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다른 지표가 활용될 수 있다.

UBI는 유럽연합의 주요 문서에 배치되며, 인간존엄성, 자유 및 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조치이다.

◆ 유럽연합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제2조) “연합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의 지배 및 소수자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존중의 가치 위에 설립되었다. 이 가치들은 다원주의, 비차별, 관용, 정의, 연대 및 여남평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 있어 회원국에 공통하는 것이다.”

네 가지 기준으로 정의된 UBI는 위에 나열된 모든 가치들을 실현한다. UBI는 모든 개인의 평등하게 조건 없이 지급되며, 물질적 보장과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제공한다.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

제1장 제1조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은 침해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의 존엄성은 사회에서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해야 한다. UBI는 실존적/행정적 제약과 사회적 삶으로부터의 배제를 제거함으로써, 개인에게 자유와 책임을 부여한다. UBI는 시민들이 유럽연합과 동일시하고,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돕는다. 이는 기본권의 실현을 지원한다. “인간의 존엄은 그 자체로 기본권일 뿐 만 아니라 기본권의 실질적 토대를 구성한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1조에 대한 공식 설명).

모든 사람들을 위한 UBI는 유럽연합이 “품위 있는 존재(a decent existence)”에 대한 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다.

제1장 제5조 (노예 및 강제노동의 금지) “2. 누구든지 강제노역 또는 의무노역(forced or

compulsory labour을 요구받아서 안 된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강제노역 또는 의무노역은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ILO, 강제노동협약, 1930, No.29).

현재의 많은 최저소득 보장제도와 사회복지제도에서, 급여들은 특정 조건 하에서 철회될 수 있다. UBI는 조건부 복지workfare의 수급자가 복지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거부했을 것인 일을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관행을 철폐한다.

제1장 제6조 (자유와 안전의 권리) “모든 인간은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갖는다.”

UBI는 개인 삶의 양식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 그들의 사회적 관계 배열, 그리고 사회/경제적 교류에 참여할지 혹은 하지 않을지의 선택을 지지한다. 이러한 자유와 함께, 다른 사람에 대한 복지well-being에 대한 책임감이 발생해야 한다. 현재의 사회복지 제도가 제공하는 보호protection와 함께, UBI는 실업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훌륭한 재정적 보장의 수단이다.

제1장 제15조 (직업의 자유와 근로할 권리) “1. 모든 인간은 근로할 권리와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할 권리를 갖는다.”

UBI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적어도 받아들이 만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현재의 많은 복지제도에서,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한 행정적 제약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받아들이 수 없는 유급노동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한다.

ECI의 UBI안은 구체적인 자금조달방안과 실행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EU 전역에 UBI 도입을 촉구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정당성을 가치의 측면, 특히 ‘인간의 존엄’에서 찾고 있다. 위 UBI안에서 가히 ‘해방적’이라고 생각되는 측면은 두 가지이다.

첫째, ‘국민국가 단위의 시민권’의 범위를 넘어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영토 밖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에서 ‘시민권’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근대영토국가 단위로 구성된 시민권을 심문하고, 시민의 개념을 지역성으로 구획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사회적 관계(공동체)로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민국가 안으로 시민권이 봉쇄되기 때문에 ‘시민권’을 넘어서는 순간 권리가 박탈되는 현재의 모순적 구조를 감안한다면, 이는 탈-베스트팔렌 프레임¹⁾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공간이 정체성과 사회행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해 본다면, 기본소득은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열고, 장

1) 낸시 프레이저(2016)는 지구화 시대에 정의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의를 구현되어야 하는 단위/틀을 성찰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개념적 자원으로 ‘탈-베스트팔렌적 민주정의론’을 제시하였다. 잘못된 틀 설정misframe으로 동등한 정치 참여가 불가능한 대표 불능misrepresentation과 같은 부정의는 틀짓기의 정치politics of framing를 통해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를 상실^{placeless}하거나 탈장소화된^{dis-placed} 존재들의 정치적 권리를 지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에 따라 ECI의 UBI안에서 기본소득은 국가 단위의 시민권의 범주를 넘어 ‘인간의 권리’로 재위치 지어진다. <전문>에서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제1장)을 검토하며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인간의 존엄’과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이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인간 실존^{existence}에 대한 권리일 뿐 아니라 인간 존엄의 실질적 기초를 구성하는 것이다.²⁾

기본소득을 국민국가 단위의 시민권을 넘어서 ‘인간 존엄’이라는 인권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는 것은 지구화 시대의 사회정의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인간 실존이 터하고 있는 ‘생태적 한계’와 ‘공유부에 대한 분배’의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은 점은 못내 아쉽다. 그럼에도 ECI의 기본소득 서명운동의 성공은 새로운 정치적 국면을 열어놓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우리가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 눈여겨 볼만한 이유이다.

참고

낸시 프레이저. (2016). 글로벌한 세상에서 정의의 틀 새로 짜기. 문현아·박건·이현재 역,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pp.423-450). 서울: 그린비. (원서출판 2008)

박진완. (2007). “유럽연합의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의 보장에 대한 검토.” 《공법연구》, 35, 81-107.

변해철. (2003).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대한 개관.” 《외법논집》, 14, 49-74.

이세주. (2018).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 주요 개별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유럽연합법원(EuGH) 판례에 나타난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 및 구체화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9(4), 71-100.

ECI for UBI 홈페이지 <https://eci-ubi.eu/>

Masternak, A. (2020, May 18). A new European Citizens' Initiative about Basic Income. BIEN News. <https://basicincome.org/news/2020/05/a-new-european-citizens-initiative-about-basic-income/>

Nurmoja, J. (2020, September 13). A new European Citizens' Initiative begins to collect signatures. BIEN News. <https://basicincome.org/news/2020/09/a-new-european-citizens-initiative-begins-to-collect-signatures/>

Pateman, C. (1989). The disorder of women: Democracy, feminism and political the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 캐롤 페이트먼(1989)은 경제력이 부족한 개인은 근대국가의 완전한 시민이 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는다고 지적하면서 기본적인 최저소득이 근대 시민권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나만의 해방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들’의 해방을 위해

양다혜

기본소득당 조직국장

어느덧 하늘이 높아지고 바람이 시원해지는 9월이 되었다. 벌써 반 이상 넘 어간 달력을 새로 넘기자, 빨간 글씨로 쓰여있는 추석연휴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가족과 연을 끊고 지내는 나에게 추석연휴는 마음을 무겁게 가라앉게 하는 단 어였다. 몇 년 전 가을, 내가 도망쳐 나온 그 아파트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엄마가 떠오르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딸들이 그러하듯 나 역시 부모님의 갈등을 마주하며 유년기를 보 냈다. 우리 집은 가난했고 가난의 현실은 부모님으로 하여금 서로를 미워하게 만 드는 순간이 많았다. 우리 집은 맛벌이었고 엄마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 김치 찌개 가게에서 하루 종일 함께 일했다. 아침 열시에 집 밖으로 나서는 부모님은 보통 밤 열시가 다 되어 집에 들어왔고, 때때로 그 밤에 서로에게 소리 질렀고 접 시가 날아다니기도 했으며, 화가 삭혀지지 않는 날엔 서로에게 손찌검하기도 했 다. 우리 집은 너무나 작아서, 그렇게 부모님이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울 때마다 나 와 동생은 그 공간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9시 뉴스에서 봤던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고가 우리집에서 일어나면 어찌지”라는 걱정과 함께 두 살 터울의 동생과 숨을 죽이며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 애썼다.

싸움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엄마는 우리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출근 을 하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화가 난 아빠가 몇 번이고 문과 창문을 부술 듯이 두들기다가 술을 먹고 제 뺨에 지쳐 잠들면 그제야 살그머니 그 문고리 가 열렸다. 엄마가 방문을 열면 오 갈 곳 없이 거실에 서 있었던 나와 동생이 있었 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우리에게 다가와 울면서 미안하다며 너희만 보면서 산다 고, 몇 번이고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의 품안에서 어깨가 젖어드는 것을 느낄 때

마다 나는 제멋대로인 아버지를 미워했고 엄마를 불쌍히 여기며 “언젠가 어른이 돼서 돈을 많이 모으면 엄마랑 나가서 살아야지”라고 매번 다짐했다.

그 때의 엄마에게는 엄마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을 커가면서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엄마가 할머니의 구박과 제멋대로인 아버지의 갈등에 부딪혀 문을 잠그고 울 때마다 방문 밖의 나는 그녀가 이혼을 하길 바랐으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 어떤 현실적인 조연도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았다. 아무리 울며불며 소리 지르고 싸워도, 출근하지 않겠다고 시위해도 결국 엄마는 다음날 가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네 식구가 먹고 살 돈은 그 작은 가게의 수입에서 나왔고, 할머니는 엄마에게 시모이자 고용주이기도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던 엄마는 그 지리멸렬한 반복 속에서 나를 키워냈고 삶을 살아냈다.

어느덧 시간이 흘렀고, 나는 어릴 적 소망했던 ‘어른’이 되었지만 엄마를 구하기는커녕, 나의 삶을 이어가기에도 급급한 스물 셋을 보내고 있었다. 오히려 “어른이 되면 엄마를 구출해야지”라는 당찬 다짐은 불가능했던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중이었다.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기 바빴던 스물 세 살의 가을, 그 어떤 현실보다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일이 나에게 찾아왔다. 추석연휴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었던 날의 새벽으로 기억한다. 여느 때처럼 술을 반 병 마시고 신세한탄을 하며 새벽을 보내던 아버지는 나와 동생의 방으로 무작정 들어와 나에게 성추행을 했다. 잠든 척 숨을 죽였던 나는 아버지가 방을 나간 후 ‘이건 아니다’라는 직감 속에서 울면서 동생을 깨워 무작정 집을 나왔다. 더 이상 아버지 얼굴을 보고 살 수 없다는 결심 아래 20여 년 간 살아왔던 집을 하루아침에 나오는 모험을 감행했지만, 집을 나오고 마주한 세상은 망망대해같이 막막하기만 했다. 대학생이던 내 통장에는 겨우 20만원 남짓만 남아있었고 새벽에 급급하게 꾸린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나와 동생이 가진 것의 전부였다. 가족에게 성폭력 사건을 겪고 난 이후였지만 나의 치유보다는 삶을 건사하는 것에 마음이 가빠지기도 했다. 다행히 답도 없이 무작정 집을 나왔던 스물 세 살의 나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선뜻 도움을 건네주었던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 아마 그 당시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선뜻 집 한 칸을 내어주고 도움을 건넨 이들이 없었다면 나는 독립된 삶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악몽같은 일이 벌어졌던 그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 아버지랑 여전히 살을 부대끼며 살았을 것이다. 집에서 폭력을 겪었던 많은 여성들이 그러했

듯이.

그러나 삶을 자리 잡아나가는 와중에도 마음은 종종 무겁고 답답했다. 집을 나오고 나서 엄마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 만나는 사람이라곤 가족과 시어머니 밖에 없었던 엄마. 친정을 가려면 아빠차로 다섯시간은 달려가야 갈 수 있었던 엄마. 그래서 늘 자신을 지켜야할 순간에는 문을 잠그고 방에 틀어박히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엄마. 친구도 없고 술도 잘 마시지 않아 밤마다 책을 읽으며 혼자 시간을 보냈던 엄마. 어느 곳도 도망칠 곳이 없었던 엄마를 생각하다보면 그저 나는 운 좋게 집을 나오면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해방이 그저 '행운'이었다는 자각은 이상한 죄책감을 불러왔고 우리 자매가 집을 나간 후, 엄마는 집을 나간 나를 비난했지만 그런 그를 선뜻 미워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편을 들며 나에게 곧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저주했지만, 나는 여전히 어느 새벽 어린 두 딸을 안고 울었던 그녀의 모습이 눈에 밟혔다.

집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날이 추워졌고 돈이 없었던 나는 겨울옷을 가지러 부모님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몰래 집에 다녀왔다. 엄마의 생일이 다가오던 계절이었고, 문득 엄마에게 선물을 건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몰래 집에서 겨울옷을 훔쳐 나오는 처지였으면서 집을 가는 길에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돈을 털어 엄마의 새 패딩을 사갔다. 겨울 옷가지를 챙기고 나서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짧은 편지와 함께 그 새 패딩을 집에 두고 왔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겨울옷을 가져오는 것보다, 그 선물을 두고 오는 것이 나에게서는 더 중요했던 것 같다. 그게 내가 엄마에게 가족으로서 건넬 수 있었던 마지막 호의였기 때문이었다.

그 패딩 한 벌로 죄책감이 조금 덜어졌던 것일까, 그 이후 몇 년간은 생존과 독립에 급급한 삶을 살아내기 바빠서 엄마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지냈다. '안정'이 나에게 최우선의 목표가 되었고 집을 구하고 돈을 버는, 처음 하는 일들을 겪어내며 나의 삶을 건사하기에도 바쁜 나날들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이 시행되었고 운 좋게도 시행된 첫 해에 만 24살이 되었던 나는 약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었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초년생에게 마냥 가혹하게 느껴졌던 세상에서 처음으로 받아보았던 복지혜택이었다.

100만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을 생계가 아닌 다른 것, 오롯이 나를 위한 일에 쓴다는 것은 생경한 감각이었다.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미뤄만 두었던 운동을 시작해보기로 했고, 그 길로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했다. 내 돈이었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이지만, 청년기본소득으로는 선뜻 할 수 있었다. “꾸준히 다치지 못하면 어찌지”라는 걱정도 잠시 일주일에 4-5시간, 필라테스를 했던 시간은 나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땀을 흘리고 난 후의 개운함, 내가 몰랐던 근육을 쓸 때의 뿌듯함, 점점 더 붙고 있는 힘과 근육에 대한 감각은 새로 알게 된 기쁨이었다. 근육통 때문에 매번 고생하면서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운동을 다녔고, 덕분에 일상을 꾸준히 잘 이어나갈 힘을 얻기도 했다. 이 작은 변화가 늘 생존에만 급급했던 나에게 더 나은 일상,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감각’은 나에게 미뤄왔던 엄마에 대한 마음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 문득 어린 시절 방문을 걸어 잠그던 엄마에게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했다. 그랬다면 엄마는 방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설 수 있는 삶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청년기본소득을 오롯이 나를 위해 사용했던 것처럼, 엄마도 버티는 삶을 넘어서서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시간에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버티며 살아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꿈꿀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기본소득이 있었다고 해서 엄마가 집을 나왔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집을 나왔을지, 혹은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살아갔을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을 것이라는 사실, 도망칠 곳 없었던 삶에 다른 변화가능성이 생겼을 것이라는 사실 그 자체다.

8년 전 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준다’는 말이 낯설고 황당한 이야기로 들렸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삶을 경과하며 기본소득 지지자가 되었고 기본소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 엄마에게 겨울옷을 건넸던 그 마음이 나를 여기로 오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에게 또는 나처럼 집을 나와 새로운 삶을 선택한 이들에게 그리고 나의 엄마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누구든 두려움 없이 삶을 위한 모험을 선택하고 몸을 던질 수 있는 자유가 있기를 바란다. 기본소득은 우리의 해방이 ‘행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나는 엄마에게 겨울옷이 아니라 오롯이 스스로의 삶을 위해 선택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건네고 싶다.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관계와 방식을 고민하고 싶다. 나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이 나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에게 당당하게 엄마를 위해 이혼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건네고 싶다. 나만의 해방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들'의 해방을 위해 기본소득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의 어느 가을날, 방문 밖 세상에서 엄마와 마주 앉아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

기본소득 함께 요구할 동료 시민을 찾아서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기본소득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다. 21살이었던 2007년이였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의 안전망을 갖게 할 의무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본소득 줄 수 있다는 것을 대통령 후보를 통해 알게 됐다. 해방감이 들었다. 제일 좋았던 점은 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안전망, 우리나라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자원활동 하면서 배워가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애가 성인이 되면 더 걱정이예요.’ 자원활동 하며 자주 만난 엄마는 자주 말했다. 그의 자녀는 발달장애가 있었다. 그가 가장 걱정하는 건 사각지대였다. 자녀는 성인이 되고, 자신은 더 나이 들어 돈 벌기도 힘들고 자녀 돌보기도 힘들어지는 순간 기댈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애가 성인이 되면 친권을 포기해야 할까요.’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만 떠맡기고 있는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시스템 입구에 들어가기 위해 가족 관계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었다. 사회문제는 보이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지 막막할 때 만난 것이 기본소득이었다.

기본소득에 관한 상상은 과거와 미래로 뻗어나갔다.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과거를 돌이키는 질문에는 가난하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개인 중심의 복지가 튼튼했다면 가난하다는 증거를 들고 ‘구걸’하듯 급식이나 장학금을 요구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기본소득이 있다면?’ 미래를 향한 질문에는 내 삶에서 이루고 싶은 욕망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답변으로 나왔다. 악기 하나쯤은 잘 다루고 싶은 욕망, 돈 버는 데 내 시간을 쏟기보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을 가리켰

다. 각자도생하면서 오늘 생존하기 급급해서 내일을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낯선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다른 사회를 상상하게 하는 힘을 주고 있다.

기본소득당 창당 과정 역시 그랬다. ‘그런 당명으로 창당이 된다고?’ 불가능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당을 만들려면 6개월 안에 5개 광역시도에 1,000명 이상 당원을 모아 최소 5,000명 당원이 필요하다. 정당에 대한 불신이 깊고 ‘당원이 된다’라는 것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 당원 모으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창당 성공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게다가 창당에 힘을 모으고 있는 청년들이 5,000명 지인이 있을 리 만무했다. 기본소득 연구가 더 깊어지고, 지역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부분적으로 실행되는 이때, 기본소득을 앞당길 다른 행동이 필요한 시기였다. 우리에게 기본소득 실현을 앞당길 동료가 필요했고, 아주 구체적인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기로 했다. ‘당신이 누구든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이 조건 없이 생기는 미래를.

불안정한 일자리, 기술변화로 줄어드는 일자리, 끊임없이 발견되는 복지 사각지대, 몇 년 주기로 반복되는 감염병 등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기본소득이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바꿀 새로운 미래로 기본소득이 떠오르게 된 데는 지난 10년 동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창립하고 기본소득 연구를 지속해 온 분들 덕분이다. 10년이 넘는 기본소득 운동 과정에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라 언급했던 것은 기본소득 운동을 이끌어갈 주체였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과 연계된 보편적 의제인 만큼, 누가 운동의 당사자로서 기본소득 실현을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쉽게 내진 못했다.

기본소득당 창당 성공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시사점이 크다. 기본소득을 욕망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당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 기본소득 운동을 함께 할 동료 시민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이다. 녹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때론 여성을 차별하는 구조를 바꾸고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료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고자 한다. 정치 기획을 하고, 법을 바꾸고 만들며, 기본소득 정치운동을 통해서 기필코 기본소득 도입을 한국 사회에 이뤄내는 것. 이를 함께 할 동료 시민들이 늘어갈 때, 기본소득 있는 미래를 단지 꿈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을 수 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 그저 유토피아를 위한 상상에 그치지 않고 정치를 통해 실현시키려는 걸음이다. 기본소득을 욕망하고,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의 대안이라 생각하는 수많은 동료 시민들과 기필코 기본소득 실현을 이뤄낼 것이다.

김교성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Q 기본소득과 사회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A

(A) 최근 기본소득의 가시성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정책 혹은 제안이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범주형 기본소득이나 참여소득을 이미 실행하고 있으며, 최저소득보장이나 일시적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정당들도 존재합니다. 아동과 청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수당의 실현을 공약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과 사회수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개념의 차이는 대상의 보편성 측면에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소득의 범위를 ‘범주형’^{categorical} 기본소득까지 확대하면, 사회수당과의 차이는 다소 모호해 질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인구학적 기준에 따라 ‘특정 인구집단’의 ‘개인’을 대상으로 대체로 ‘낮은 수준’의 현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수당과 범주형 기본소득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철학적 기반과 이념적 지향점이 다른 제도입니다. 사회수당은 복지국가의 틀 안에서 형성된 보충적이고 보완적 제도이며, 기본소득은 복지국가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 혹은 변혁적 복지 패러다임

의 구상 중 하나입니다. 사회수당은 유급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인구집단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는 ‘보완적’ 급여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범주형 기본소득은 대상의 범위가 일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소득이 내포하고 있는 이념적 지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부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공유 권리에 기초하여 진정한 시민권적 ‘권리’를 강조합니다. 동시에 자본주의의 문제에 대한 접근과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변혁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상이한 점은 실행 목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수당은 인구특성별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의 복리, 모성 보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저출산 극복 등의 다양한 목적을 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제도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거나, 목적 달성여부 혹은 관련 행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내용이 쉽게 변형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아동을 위한 기본소득은 아동 개인의 복지와 권리 증진이라는 매우 단순하고 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실행됩니다. 제도의 확산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강력한 철학적 토대와 강한 대중적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에 대한 개념적 논란은 범주형 기본소득을 완전 기본소득으로 이행하기 위한 ‘경로’^{path}나 단계적 ‘실행방안’ 혹은 ‘압박 전략’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에서 비롯됩니다. 선별적 복지국가를 선호하는 일부 학자는 범주형 기본소득과 사회수당은 동일한 제도인데 새로운 이름으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반문합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전략적 담론으로 기본소득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사회수당을 함께 도입하자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기본소득의 철학적 기반과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단지 보편적 현금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의미입니다.

복지국가의 틀 안에서 새로운 인구집단을 위한 사회수당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면, 기존의 사회보장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철학적 토대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낮지만 점증적인 기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수당이 기본소득의 이념적 지향을 내재하고 완전 기본소득의 이행 경로에 위치한다면 ‘전환적’^{transitional} 기본소득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담론은 새로운 언어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중국에 추구하는 지향점에 따라 사회수당보다는 ‘기본소득’으로 명명하는 것이 제도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묵시록과 대안의 변증법,

혹은 재난 극복의 길

류보선

문학평론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1.

웃음과 증오 ; 양우석 감독의 <강철비2>

양우석 감독의 <강철비2>을 봤다. 제법, 괜찮은 영화였다. 네 가지가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양우석 감독 작품다웠다. <변호인> <강철비>로 한국영화사에 그만의 계보를 등재해 가고 있는 감독의 작품답게 <강철비2> 역시 양우석 감독 특유의 역사철학과 미학을 구현하고 있었다. 양우석 장르가 완성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었다. 가령, 양우석 감독의 영화는, 거칠게 표현하면, 내놓고 혹은 내놓고 정치적이다. 제대로 정치적이라는 말이 적절할 수도 있겠다. 하여간 양우석의 영화엔 살고 싶은 세상, 가고 싶은 나라가 분명하다. 그의 영화는 헛웃음일지라도 웃음이 넘치는 세상을 꿈꾼다. 모두가 웃는 세상, 모두가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세상을 간절하게 원한다. 웃음이 넘치는 세상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의 영화는 그것을 불가능하

게 하는 부조리한 현실, 현실의 모순과 격렬하게 충돌한다. 그의 영화가 주목하는 부조리한 현실은 지금 이곳을 예외상태적 상황 혹은 내전적 상황으로 몰아넣는 분단 현실이기도 하고, 사회구성원들 각자의 자유, 생존, 자존, 권리, 고유성, 욕망을 원초적으로 억압하는 통치성의 원리 전반이기도 하다. 양우석의 영화는 웃음 속에서 가능한 그것, 웃으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것, 그러니까 신경림 시의 표현을 빌자면,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흥겨’운 세상을 꿈꾸고, 그 꿈을 억압하는 상징질서와 맞선다. 물론 맞선다고 해서 미리 긴장한 필요는 없다. 그의 영화는 서스펜스가 목적도 아니고 스릴이 기본 정동도 아니다. 그렇다고 서스펜스나 스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들은 곧 웃음과 부딪쳐 명멸한다. 양우석의 영화는 상징질서의 엄혹함 혹은 엄혹한 상징질서를 끊임없이 웃음과 대비시킨다. 그 대비를 통해 그의 영화는 짹짹한 상징질서 그것을 순식간에 과잉의 억압으로, 구조적 폭력으로 무력화시키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보기만 해도 웃음을 나누는 새로운 공통체를 꿈꾸게 한다. 이것이 양우석 감독 영화의 특이성이라면, <강철비2>는 그러한 양우석 감독의 특이성이 제대로 구현된 영화였다. 아니, <강철비2>로 하여 비로소 양우석 감독 영화의 특이성을 드디어 개념화, 맥락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양우석 영화의 특이성이 보다 완성된 형태로 집약된 영화였다.

게다가 <강철비2>는 믿고 보는 배우 정우성이 나오는 영화였다. 정우성이 누군가. <비트> 때 이미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배우지만, 그는 ‘싸수’에 그치지 않고 편편마다 진화하고 있는 배우 아닌가. 타고난 것이 많은 이 배우는 그 타고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배역에 대한 해석의 깊이를 더하면서 새로 찍는 영화마다 ‘인생작’이 되는 그런 이로 매번 거듭나고 있다는 느낌이다. 아마도 이 일신우일신의 진화 덕분일 것이다. 정우성이 ‘나 보니까 흔들려요?’ ‘패션에 얼굴이 전부는 아니지만 또 그만한 게 없죠’ ‘비주얼로 보여드릴게요’ ‘평생 비주얼로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비주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등등의 뻔뻔한(?) 대사를 쏟아내는 광고를 잇달아 찍어도 미움받지 않는 것은. 우리 영화계도 한 명의 맏데이먼이나 디카프리오, 혹은 탐 크루즈라는 자산을 갖게 된 느낌이었을까. 하여간 <강철비2>에서도 정우성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더 깊어졌다고나 할까.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과함과 모자람도 없는 연기였다. 적당했고 적절했다. 광도원, 유연석, 그리고 <강철비2>로 새로 발견한 신정근과의 앙상블이 좋았다. 서사의 중심에 있는 정우성이 조금만 과하거나 조금만 아우라를 잃으면 균형과 긴장이 흔들릴 영화였다. 하지만 정우성은 조용한 아우라로 서사의 중심을 견고하게 유지했고 <강철비2>는 과정의 총체성과 운동의 총체성을 절묘하게 결합한 긴장감 넘치는 영화로 완성되었다. <강철비2>의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그 어떤 거부감도 없이 내 가슴 속에 옮겨 앉으며 내 몸의 일부가 된 것은 영화의 전체적 맥락에 맞게 자신의 배역을 충실하게 소화해낸 정우성의 연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강철비2>가 제법 괜찮은 영화로 다가왔던 또 하나의 이유는 <강철비2>가 선보인 놀라운 잠수함 전투 장면 덕분이다. <강철비2>는 중반부 이후 그 중심이 잠수함 전투 장면으로 옮겨가는데, 그런데, 하, 이 잠수함 전투 장면이 장난이 아니다.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긴장감이 넘친다. 잠수함에 대해서, 그 잠수함 간의 전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잠수함 전투가 벌어지는 해저 지형에 관해서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존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성한 디테일들은 마치 관객 자신들이 전투를 치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할 정도로 핏진하다. 물론 잠수함 전투의 특성상 요란하고 화려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 대만 맞으면 잠수함 안의 모든 사람이 죽는 절박한 상황 탓에 오히려 긴박감이 더 넘친다. 어떤 예고도 없이 달려드는 어뢰와 그것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생사를 건 판단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긴장과 이완, 죽음의 공포와 삶의 환희의 변증법은 보는 이의 손에 땀이 차게 할 정도로 역동적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강철비2>의 잠수함 전투신만은 한국영화사에서 오랜 기간 기억되고 기록될 만한 명장면이라 하기에 충분하다.

<강철비2>가 제법 괜찮은 영화로 다가온 마지막 이유는 이 영화가 선택한 지연과 지체의 전략이다. <강철비2>에서 정우성이 분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여기, 북한, 미국, 중국, 일본이 있고 그 사이에 남한이 끼어 있다. 이 나라들의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전략은 선이 크고 단호하다.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안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려 대결하고 일본은 두 강대국 사이를 이용하며 자국의 입지를 극대화하고 북한은 체제 안정을 도모하려 한다. 이 네 나라의 이익이 그대로 관철되면, 한반도는 곧 핵전쟁에 접어든다. 네 나라의 자국만을 위한 세계 전략 때문에 순식간에 최악의 전쟁터로 바뀔 가능성이 농후한 이곳의 평화와 안전을 끝까지 관철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짐을 떠안은 나라가 있으니,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강력하게 내세우는 주변국들을 조정하고 조절하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그것은 죄르지 루카치가 역사소설의 주인공의 특성으로 제시한 존재, 그러니까 완벽한 중간자적 인물로 빙의하는 것이다. 네 나라 사이를 오가며 각 나라의 이익과 입장을 조율하고 절충하는 것.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무슨 저주처럼 네 나라의 군사적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각 나라의 대의명분과 실리의 변증법을 이해하기 위해 각국에서 쏟아내는 말을 귀를 세워 듣고 각 나라의 위험한 행동을 유예시키기 위한 말을 어렵게 어렵게 골라 전달하곤 한다. 전략적 인내랄까 인내의 전략 이랄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놓인 자리와 그가 좌고우면 속에서 취하는 실천은 바로 그것이다. 중간자적 존재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그를 위해 각국의 대표 사이에서 허허실실하며 위험을 막는 것, 그 위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좋게 보자면 외유내강하고 나쁘게 보자면 비겁하고 비굴하게 타협하는 것, 그리고 결과를 얻고

나서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질서정연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결과를 얻을 때 까지는 자신의 목소리를 아끼는 것. 한마디로 <강철비2>는 현재 한반도의 일촉즉발의 내전적 상황을 한편으로는 냉전체제의 흑독한 잔여물로, 다른 한편으로는 신냉전체제의 예측이 쉽지 않은 출발점으로 파악하고, 그 위험 속에서 내전적 상황을 종식하고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진지하게 모색한 영화이다. 현재 한반도의 둘러싼 위기적 상황을 근대 이후 세계체제의 역사 속에서 정밀하게 읽어낸 역사적 통찰이 돋보이는 영화이자 동시에 한반도의 위기적 상황을 넘어서 수 있는 의미 있는 길을 제시한 영화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법 괜찮은 영화 <강철비2>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화 자체가 내장한 잠재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스크린에서 내려오고 말았다. 양우석 감독의 전작 <변호인> <강철비>에 비하면 관객도 많이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평적 관심도 크게 받지 못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물론 코로나 상황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요인은 소위 ‘색깔논쟁’이라고 해야 하리라. <강철비2>에 가해진 ‘색깔논쟁’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내전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를 미화하고 대신 미국의 대통령을 희화화했다며 가해진 비난과 혐오, 그리고 저주는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적 지형 속에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기에 충분했다. <강철비2>라는 제법 괜찮은 영화가 ‘색깔논쟁’에 휩싸이자 그 영화의 역사철학적 잠재성과 미학적 성과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저주에 가까운 ‘색깔입히기’만이 횡행했고, 그런 소란 속에 <강철비2>는 어?, 하는 사이에 역사의 저편으로 묻히고 말았다. 이에 대해 감독 자신은 어느 자리에서 <강철비2>가 ‘색깔논쟁’ 혹은 ‘평점 공격’ 혹은 ‘닷컴 테러’를 돌파하는 힘을 가졌어야 했다고 처연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 깃든 질은 아쉬움까지를 감출 수는 없었다. 아쉽게도 무엇을 해볼 틈도 없었고, 무엇을 해볼 틈도 없이 오로지 악의에 의해 명멸해버렸기에 더욱 안타까웠으며, 그렇다면 <강철비2> 이후로 우리의 정치적 현실을 통 크게 다루는 과감한 영화적 시도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암울했다.

혹시 이런 명명이 가능하다면 ‘<강철비2> 사태’는 우리에게, 특히 우리가 놓인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대안을 찾는 이들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데올로기적 지형으로 볼 때 여전히 우리는 모든 것을 적이나 내 편으로 가르고 적대시하는 내전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그러므로 어떤 정치적 대안이 제시될 때 그 대안은 그것이 가지는 역사철학적 가치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적의 테러로 받아들여져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이데올로기적 테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 해서 우리에게는 정책적 대안의 바람직성과 정밀함뿐만 아니라 내전적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범함, 그리고 ‘간지적 이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이성의 간지’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는 것.

톨스토이식으로 말하자면 그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 대안에 찬동하는

사람은 거의 같은 이유로 환호하지만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제각각의 연유로 반대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제각각의 연유들을 싸워 돌파할 수 있는 이론의 정교함과 그 천양지차의 반대와 싸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또 때로는 논리 자체가 없는 제 각각의 적대적 행위를 견뎌 이겨내는 끈기일지도 모른다. 제법 괜찮은 영화 <강철비2>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이런 톨스토이식 교훈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2.

한국문학의 두 전위; 김훈의 『달 너머로 달리는 말』과 황석영의 『철도원삼대』

일반인들의 관심사에서 조금 멀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최근 한국문학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바야흐로 한국문학이 또 한 차례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황석영, 김훈, 박범신, 윤홍길 등 대가들이 여전히 밀도 높은 작품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윤, 이병천, 성석제, 신경숙, 은희경, 김인숙, 김영하, 김연수, 김중혁, 이기호, 김경욱, 손흥규, 편혜영, 윤성희, 이장욱, 이승우, 한강, 권여선, 조해진, 황정은, 백수린, 김애란, 장유정, 김연수, 천명관, 박민규 등 중진들의 약진이 여전하며, 여기에 손보미, 박솔뫼, 정지돈, 최은영, 최은미, 김금희, 박민정, 김봉곤, 김초엽, 강화길, 장류진, 이현석, 정세랑, 박상영, 이상우, 김희진, 천희란, 금희, 임현, 이주란, 이미상, 정영수, 김희선, 임성순, 김세희, 최정나, 최진영, 임솔아, 조남주 등 놀라운 신예들의 출현이 지속되고 있다.

뜻밖에 다시 도래한 한국문학의 전성기는 이전의 한국문학의 발흥기 혹은 부흥기와 비교하면 좀 이채로운 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전 몇 차례 한국문학이 누렸던 사회 혹은 문화의 전위로서의 권위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존재하던 ‘문학의 시대’에 자연스럽게 얻어진 그것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문학의 또 한 차례의 전성기는 분명 이전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하나는 최근의 ‘한국문학의 르네상스’가 흔히 ‘문학의 시대 이후’라고 일컬어지는 시대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영상 표현물을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옮겨 나눌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오늘날 문화의 핵심은 영상매체로 옮겨간 것이 사실이다. 영상매체가 급부상하자 당연히 문학의 위상은 축소되었다. 여기에 디지털 문명과 더불어 도래한 니체적 의미의 ‘최후의 인간’의 양산 체제와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고, 따라서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는 포스트모던적 인식론의 확대는 문학의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회의로 이어졌다. 이는 ‘근대문학의 종언’ 선언을 거쳐 ‘작가의



죽음’ 또는 ‘문학의 죽음’의 선언으로까지 이어졌고 그렇게 한국문학은 장렬한 최후를 맞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도 자란다’는 휠덜린의 말처럼 한국문학은 위기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감동적인 장관을 연출해내고 있다. 아마도 발언권 없는 존재들, 혹은 말할 수 없는 하위주체들, 또는 쓸모없는 실존으로 격화된 존재들의 말을 들어주고 대신 말해주는 문학의 속성 때문일 것이다. 디지털 문명과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역시, 아니 디지털 문명과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자 더욱 더 말할 수 없는 하위주체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그 결과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대신 말해주는 무언가가 더욱 절실해진 것이리라. 이 세상의 어둠을 전례 없는 문학의 위기에 목이 뻗뻗해지고 눈에 핏발이 설 정도로 정신없이 좌고우면하던 한국의 작가들이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포착한 것이리라. 그 과정이 어떠하건 ‘문학의 시대 이후’라는 악조건 속에서 한국문학은 세상의 묵시록적 징후와 그곳에서 피어나는 구원의 힘을 그 어떤 영역보다도 먼저 읽어내기 시작했고, 전적으로 그 처절한 응시 덕분에 현재 한국문학은 또 한 차례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 한국문학이 누리고 있는 또 한 차례의 전성기가 예전의 그것과 구분되는 또 하나의 대목은 바로 한국문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다. 세계 전역에서 최근 일고 있는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가히 최고조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김영하의 『검은 꽃』, 『살인자의 기억법』, 한강의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황석영의 『해질 무렵』, 『수인』, 편혜영의 『식물 애호』, 『홀』 등 다수의 한국문학 작품이 미국과 유럽은 물론 일본을 위시한 동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전역에 소개되어 저곳 독자들의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조남주, 김연수, 김애란, 김종혁, 김연수, 최은영 등의 소설도 속속 한강 등의 뒤를 잇고 있는 중이다. 한국문학은 한국어라는 언어적 제약을 뚫고 세계적으로 약진하고 있으며, 이 세계적 약진이야말로 최근 한국문학의 르네상스의 실질적 내용이라 할 만하다.

최근의 한국문학의 르네상스를 말할 때 경탄할 만한 것이 하나 더 있다. 현재 한국문학의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는 앞선에 김훈, 황석영 등이 당당히 얼굴을 내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축적해온 업적만으로도 충분히 한국문학의 ‘거인의 어깨’인데, 이 노대가들이 머물지 않고 자신들이 한껏 높여놓은 그 어깨를 다시 딛고 한국문학의 미답의 실재들을 새롭게 개척해가고 있다. 놀랍다는 말밖에 다른 말을 찾기 힘들다. 이런 와중에 말로만 한국문학의 전위부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듯, 두 대가가 한국문학의 미답지를 개척한 또 다른 묵직한 작품을 들고 왔다. 『달 너머로 달리는 말』(김훈)과 『철도원삼대』(황석영)가 그것이다.

김훈의 『달 너머로 달리는 말』은 김훈 소설의 평생 화두를 이어가고 있는 소설이다. 김훈 소설은 뒤늦은 등단작인 『빗살무늬토기의 추억』부터 줄곧 ‘그토록 오래된 무섭고 더러운 통치성’에 대한 비판과 그 통치성으로부터의 탈존 혹은 탈

주 가능성을 모색해오고 있다. ‘애초에 내가 도모했던 것은 언어와 삶 사이의 전면전이었다. 나는 그 전면전의 전리품으로써, 그 양쪽을 모두 무장해제시킴으로써 순결한 시원의 평화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 시원의 언덕으로부터 새로운 말과 삶이 돌아나기를 기원했다.’라는 지점이 빗살무늬토기의 추억의 출발점이었던 바, 이곳이 바로 김훈 소설이 항상 되돌아가는 자리, 그러니까 원점에 해당한다. 김훈 소설은 인간의 불행의 원천으로 인간의 삶으로부터 자립해 있는 ‘허망하고 무내용한’ 장치들을 지목한다. 김훈 소설에 따르면 이 땅의 존재들에겐 ‘허망하고 무내용한 통치성’에 짓눌려 도대체가 개별자로서의 자유로운 삶은 물론 고유한 죽음마저도 허여되지 않는다. 당연히 김훈 소설은 그 장치 혹은 통치성이 인간을 얼마나 처절하게 생존하게 하고 또 비참하게 죽게 하는지를 정밀하게 묘사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김훈 소설의 아포리아가 발생한다. 그것을 묘사하는 언어 역시 통치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으로부터 멀어져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박남수가 이미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그 순수를 겨냥하지만,/매양 쏘는 것은/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새1』)라는 말로 적절하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언어 역시 상징질서의 그것이어서 언어화되는 순간 생동하는 실재는 그 흔적만 있을 뿐 날아가 버린다. 한마디로 김훈의 소설은 조금은 덜 훼손된 상징언어로 보다 더 ‘허망하고 무내용한 장치들’과 싸우는 이율배반에 직면에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래도, 김훈 소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살아 돌아오지 않을 마음으로 밀고 나간다. 그 ‘전면전’을 통해 김훈 소설은 한편으로는 보다 고차의 상징적 질서가 구현되기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 자체가 유아기의 언어처럼 실재에 가까운 그것이 되기를 희망한다. 김훈 소설은 ‘인간의 삶으로부터 멀어진 허망하고 무내용한 장치’와 힘겹게 싸워나간 인물들, 그러니까 ‘보았으므로 안다’는 정언명령에 따르는 혹은 본 것만을 앞으로 한정하는 존재들을 끊임없이 귀환시킨다. 그 인물들은 ‘보았으므로 아는 것’을 무기로 ‘허망하고 무내용한 장치’와 전면전을 벌이지만 그 싸움은 언제나 비극적으로 끝난다. 그렇게 김훈 소설은 『빗살무늬토기의 추억』에서부터 『칼의 노래』, 『현의 노래』, 『남한산성』, 『흑산』, 『공터에서』 등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죽음의 개별성마저 무화시키는 통치성과 보다 장렬하게 실패하는 싸움을 계속한다. 그리고 그 거듭되는 패퇴를 통해 인간 모두가 얼마나 통치성에 견고한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탈-존하는 길이란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아프게 환기시킨다.

앞서 말했듯 이번에 발간된 『달 너머로 달리는 말』은 이전 김훈 소설의 문제 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언어와 삶 사이의 전면전’의 색조는 훨씬 더 격렬해졌고 그 결과는 더욱 어두워졌다. 비유하자면 그간 내내 김훈 소설을 희미하게 비추던 한 줄기 반딧불의 불빛마저 여위어가는 형국이라고나 할까. 『달 너머로 달리는 말』은 구체적인 시공간을 초월해 오늘날 인간 문명이 형성된 지점으로

직접해 들어가 거기서 오늘날 통치성의 발생 과정을 추적한다. 여기, 태초의 인류 문명을 대표하는 두 나라가 있다. 초와 단. 초는 유목민의 국가이고 단은 농경민의 국가이다. 그 두 나라는 화해가 불가능하고 양립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다른 상징질서를 지니고 있다. 그런 까닭에 당연히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폭력을 쓴다. 즉 전쟁을 벌인다. 전쟁 상황인 만큼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잔인하게 죽인다. 전혀 다른 타자로 인해 자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때문에 소중한 생명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간다. 『달 너머로 달리는 말』에 따르면 인간이란 문명 이전부터 자기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폭력을 쓰는’ 폭력적 존재이자 전쟁-기계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폭력적인 존재들이 폭력을 독점하고 합법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 법과 질서, 그러니까 문명이다. 그러므로 문명의 역사란 프로이트식으로 말하자면 억압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폭력의 역사, 전쟁의 역사, 살육의 역사이다. 물론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폭력을 쓰는’ 극단적인 정치행위인 전쟁이 멈춘 순간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잠시만의 정적마저도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고 경계하는 준-전시 상황이고 내전적 상황이다.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폭력’은 멈추지 않고 그 과정에서 소명한 생명들이 술하게 죽어나가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달 너머로 달리는 말』은 인류 문명 혹은 통치성의 발생론적 기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인간 존재와 인류 문명에 대한 가장 암울한 정의에 도달한다. 『달 너머로 달리는 말』에 따르면 인간 존재는 타나토스적 충동에 속박된 전쟁 기계이고, 인류의 문명사란 전쟁 기계인 인간이 자기성을 위협하는 타자는 물론 지구상의 모든 소중한 생명체의 생명을 짓밟아온 전쟁의 역사에 다름아니다.

『달 너머로 달리는 말』에 이르러 김훈 소설이 이토록 어두워진 것은 지금 이 땅의 다음과 같은 현실을 ‘보았으므로 안’ 까닭일 것이다.

이웃에 사는 젊은 후배가 지난 11월21일자 《경향신문》을 가져와서 보라고 내밀었다. 신문 1면에는 2018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천2백 명의 명단이 실려 있었다. 하단 광고를 들어낸 그 넓은 지면은 별다른 편집적 장치나 해석이 없이 깨알 같은 활자만을 깔아놓고 있었다. 거칠고 메마른 지면이 눈앞에 절벽을 들이대고 있었는데, 강력한 편집자는 멀리 숨어서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종이신문 제작에 종사했지만 이처럼 무서운 지면을 본 적이 없다. ‘김○○(53·떨어짐)’처럼 활자 7~8개로 한 인생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1천2백번을 이어나갔다. 이 죽음들은 한 개별적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나락으로 밀려 넣어지는 익명의 흐름처럼 보였다. 떨어짐, 끼임, 깔림, 뒤집힘이 꼬리를 물면서 한없이 반복되었다.

과장 없이 말하겠다. 이것은 약육강식하는 식인사회의 킬링필드이다.

제도화된 약육강식이 아니라면, 이처럼 단순하고 원시적이며 동일한 유형의 사고에 의한 폐죽음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방치되고 외면될 수는 없다.

11월21일자 《경향신문》 1면에서는 퍽, 퍽, 퍽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는 추락, 매몰, 압착, 붕괴, 충돌로 노동자의 몸이 터지고 부서지는 소리다. 노동자들의 간과 뇌가 쏟아져서 땅 위로 흩어지고 가족들이 통곡하고, 다음날 또다시 퍽 퍽 퍽 소리 나는 그 자리로 밥벌이하러 나간다.(중략).....

이 뿌리 깊은 야만은 이제 일상화되어 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폐죽음하는 이 킬링필드에서 이윤의 집중과 책임의 소멸이 구성되고 작동되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수많은 일류 논객들이 명석한 분석력과 날선 문장으로 그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서 더 이상의 언설은 이미 필요 없어 보인다.

늘 그렇지만 빛나는 말이 모자라서 세상이 이 지경인 것은 아니다. 말은 늘 넘치고 넘친다. 이 시대의 말은 짧은 목줄을 차고 이쪽저쪽의 말뚝에 바싹 묶여 있다. 말이 저 자신의 목에 목줄을 채운다. 말들은 양쪽으로 묶여서 서로 마주보며 짚어대는데 그 사이의 현실의 땅바닥으로 사람들의 몸이 떨어져서 으깨진다. 말은 들끓고 세상은 요지부동이다. 노동현장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자원이나 고난도의 기술이나 정의로운 말이 필요하지 않다. 돈이 없고 기술이 없고 말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넘치되, 그 능력을 작동시킬 능력이 없으니 능력은 있으나 마나다. 능력을 작동시킬 능력이 마비되는 까닭은, 이 마비가 구조화되고 제도화되고, 경영논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깔끔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십 년 동안, 퍽 퍽 퍽은 계속된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프다.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 더욱 참담하다. 노동자들이 몸이 터져서 죽으면 사업체 대표나 담당관리들이 빈소에 와서 ‘명복을 빈다’는 화환을 들이민다. 나는 ‘명복을 빈다’라는 말에 분노를 느낀다.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명복을 빈다니, 노동자들은 명복을 누리려고 고공 작업장으로 올라가는가. 명복은 없다.

《경향신문》 1면을 들여다보면, 그 1천2백 위의 원혼들이 아직도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청와대나 정부청사, 국회의사당이나 사고가 난 작업장 근처의 어느 허름한 여인숙에 묵으면서 밤마다 거리에서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 분하고 억울해서 못 가는 것이다.

내 무력한 글로 지껄이고 따지느니보다 저 여인숙의 원혼들과 끌어안고 함께 통곡하는 편이 더 사람다울 것이다.

나는 대통령님, 총리님, 장관님, 국회의장님, 대법원장님, 검찰총장님
의 소맷자락을 잡고 운다. 나는 재벌 회장님, 전무님, 상무님, 추기경님, 종
정님, 진보논객님, 보수논객님들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운다. 땅을 치며
울고, 땀을 흘리며 운다. 아이고아이고.

박○○ 아이고 서러운 살 아이고
OECD 아이고 삼만 불 아이고
내년에도 펑펑 후년에도 펑펑
대한민국 아이고 공정사회 아이고

- 김훈, “죽음의 자리로 또 밥벌러 간다”, 《경향신문》, 2019.11.25.

인용이 길었다. 거의 전문을 옮겼다. 『달 너머로 달리는 말』의 작가 김훈의 역
사철학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징질서에 가려 보이지 않는 오늘날 우리의
실재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이다. 위의 인용에 따르면 이곳은 하루
에도 몇 명씩 ‘추락, 매몰, 압착, 붕괴, 충돌로 노동자의 몸이 터지고 부서지’며 죽
어가는 ‘킬링 필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집단적인 인지부조화다. 우
리는 이곳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죽음의 행군을 뵈기 보면서도, 그리고
이러한 치명적인 증상은 우리가 순종하는 상징질서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우
리 모두 같이 풀어가야 한다고 거의 모두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매일
반복된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연상시키기에 충분
하다. 자신이 행하는 기계적인 행위가 수많은 존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하던 일을 반복하고, 누군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곧 외면하고, 때론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 바꾸자’고 외치고서도 태연하게 예
전의 나로 돌아가는 존재들, 그 존재들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착
각하는 악마들이 바로 우리다. 이러한 집단적 오인은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우
리 사회의 폭력적 구조를 오히려 진화한 문명이라 착각하며 그대로 순응하는 까
닭일 터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본성 자체가 누군가를 호모 사케르로 전락시
키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폭력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여
튼 위의 인용에 따르면 현존재들은 지금 인간의 얼굴을 한, 그리고 스스로 인간적
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악마들인 셈이다. 이런 상황을 보고 알았으므로 미래에 대
한 전망을 갖는 것도, 과거를 유쾌하게 기록하는 것도 불가능함은 물론이다. 묵시
록적일 수밖에.

『달 너머로 달리는 말』이 과거에 대한 묵시록적 기록, 혹은 묵시록적 과거의
재구성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해 보인다. 동의하기가 힘들 뿐, 사실 간
단하다. 들뢰즈 식으로 말하자면 ‘말이 되자는 것.’ 더 이상 인간이려 하지 말자는
것.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고, 따라서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라고 말한 라캉식으로 변환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아닌 곳에서 인간일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인간적일 수 있다'라는 말이 될 터이다. 한마디로 『달 너머로 달리는 말』은 문명의 발전이라는 말에 스스로 취했을 뿐 인류 역사는 한 번도 '세계의 밤'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이며, 그걸 인정할 때 진정한 출발이 가능하리라는 것이다. 아프지만 사실이다. 매일 여러 명의 김용균이 죽어가고 있는데 오직 들리는 것은 'K-방역'으로 한국이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환호이니 말이다.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도 이른바 '야심작'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괴테가 오래 전에 증명한 그것을 이번에는 황석영이 보여주었다. 황석영의 신작 『철도원삼대』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 황석영과 마주앉아 잠시 말을 섞어 본 인연이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작품이 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황석영은 이쪽 정부 몰래 북한에 간 적이 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황석영에게 '민족의 재간둥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는 김일성도 만났고, 홍석중도 만났다. 그리고 '그'도 만났다. '철도원삼대'의 모태가 된 그. 황석영은 틈날 때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작품만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곤 했다. 때론 작가로서의 책무라는 거창한 말과 함께, 때론 '죽이지 않나?'라는 장난스러운 말투와 더불어. 그렇다. 바로 그 작품이다. 『철도원삼대』는 작가 황석영이 방북 때 만난 영등포 출신의 삼대에 걸친 철도원 가족을 다룬 소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 철도원삼대는 비유컨대 '소문난 잔치'였지만 기대 이상이었다. 아니 '기대 이상'이라는 말로는 아쉬울 정도다. 『철도원삼대』 다음을 알 수 없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철도원삼대』는 황석영의 소위 '인생작'이라 할 만하다. 황석영이 누군가. 『객지』, 『삼포가는 길』, 『한씨연대기』, 『장사의 꿈』, 『장길산』, 『무기의 그늘』, 『오래된 정원』, 『손님』, 『모랫말 아이들』, 『개밥바라기별』, 『심청』, 『바리데기』, 『낮익은 세상』, 『해질 무렵』의 작가 아닌가. 이런 작품을 쓴 작가인데도 『철도원삼대』는 그의 '인생작'이라 부름직하다. 그만큼 대단하다. 그의 이전까지의 소설적 시도가 최고의 완미한 형태로 한 자리에 종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전의 황석영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혁신적 요소가 이상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적어도 내겐 그랬다.

『철도원삼대』는 우리가 정전 혹은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작품들을 읽을 때의 그 리듬으로 읽힌다. 처음에는 몇몇 대목에서 걸려 잘 읽히지 않다가 작품의 초반부가 지나면 손에 땀을 쥐게 되고 마지막에서는 책장을 덮는 것이 아쉬워 아껴가며 읽게 된다. 앞부분보다는 후반부로 갈수록, 그리고 처음 읽을 때보다 다시 읽을 때 벅찬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도 고전을 읽을 때 느끼는 감동의 진폭과 같다. 그리고 작품을 다 읽으면 다음과 같은 작가의 말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자못 거창하게 느껴지는 그 말에 충분히 수궁하게 되기도 한다.



나는 우리 문학사에서 빠진 산업노동자를 전면에 내세워 그들의 근현대 백여 년에 걸친 삶의 노정을 거쳐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삶의 뿌리를 드러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것은 이지러지고 뒤틀리고 하면서도 풍우의 세월을 견뎌온 한국문학이라는 탐의 한 부분에 돌 하나를 끼워넣는 작업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어떤 이들은 지금 혼란에 접어든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모습을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몰락해가면서 무엇인가 다른 질서로 향하여 가는 이행기의 그것이라고 말한다. 이 고통의 기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오로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방대한 우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던 시대와 삶의 흔적은 몇점 먼지에 지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세상은 느리게 아주 천천히 변화해갈 것이지만 좀 더 나아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싶지 않다(황석영, 「작가의 말」, 『철도원삼대』, 창비, 2020).

작가가 밝힌 그대로다. 『철도원삼대』는 그간 한국문학사에서 보기 힘들었던 산업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 백여 년의 삶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물론 제목에서 암시받을 수 있듯 철도원들의 삶이 서사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철도원삼대』가 철도원들의 실존 형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철도원삼대』는 ‘철도원삼대’의 연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지역 거의 모두, 그리고 한국근현대사 거의 전체를 포괄한다. 특히 ‘철도원삼대’가 살았던 거주지 영등포의 변천사는 현장감과 생동감이 넘치며, 이들의 움직임을 축으로 하는 당시 인천 지역의 처참한 노동현장과 그 노동조건을 혁신하는 한편 나라를 되찾으려는 노동운동에 대한 묘사 역시 핏진성이 넘친다.

이것만 해도 긴장감과 역동성이 넘치는데 『철도원삼대』에는 이 기본적인 서사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또 하나의 서사가 긴밀하게 작동한다. 아버지들의 노동(운동)의 역사가 핵심 서사로 소설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 딱딱한 뼈대에 활기와 온기를 불어넣는 서사로 어머니들의 보살핌의 역사가 이어진다. 이중 『철도원삼대』를 더욱 소설답게 만드는 것은 이 어머니들의 세계사다. 이 어머니들의 역사는 아버지들이, 그리고 민중들이 곤경에 빠질 때마다 유령처럼 출몰하여 민중들의 고통을 위무하고 다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한다. 이처럼 『철도원삼대』는 아버지들의 역사와 어머니들의 역사의 절묘한 결합 혹은 대문자의 역사와 소문자의 역사의 생동감 넘치는 병존을 통해 한국근현대사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우리가 『철도원삼대』가 황석영의 ‘인생작’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황석영이 이제까지 시도했던 모든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병존시켜 새로운 지양 형식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총체적이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한국의 역사상을 환상적으로 구현했기 때

문이다.

어느 자리에선가 지젝은 “역설적이지만 재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재난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다”고 “예방행동(‘선제공격’)의 발상을 과감하게 복원해야 한다”(슬라보예 지젝, 『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새겨들을 만한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재난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때에만 예방행동의 발상이 과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청할 만한 이 지젝의 표현에 따르자면, 김훈과 황석영은 파국을 막는 것은 물론 살 만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지젝의 역설을 나누어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김훈의 『달 너머로 달리는 말』이 재난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충격적으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황석영의 『철도원삼대』는 재난을 넘어 역사를 전회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팽팽한 문제의식으로 한국문학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는 두 대가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으면 경외감에 자연스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문득 이런 문학동네의 일원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뿌듯함과 함께.

3.

신자유주의적 복지 정책과 분배정의의 실현으로서의 기본소득 ;

양재진의 『복지의 원리』와 권정임 · 광노환 · 강남훈의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이 리뷰 자리를 빌어 여러 차례 반복한 말이지만, 내 보기엔, 우리 앞에 들이닥친 재난적, 파국적 상황을 넘어서서 모든 생명체가 공생할 수 있는 지구를 만들 가장 현실적인 유토피아 플랜은 현재로서는 기본소득 말고는 없다. 여기서 출발해야 하고 여기서 뛰어야 한다. 그때 길이 생긴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현존재들의 실존형식과 그 실존형식이 만들어낸 현재 우리의 상징질서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나치게 역행적이거나 지나치게 윤리적이다. ‘생산의 공공성과 소유의 사적 성격’이라는 오랜 통치성의 원리에 비추어 보자면 기본소득 그것은 우리의 오랜 실존형식으로부터 탈-존해야 하고 우리의 오랜 상징질서로부터 탈주해야 한다. 그러니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은 당연하다. 오히려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필연성,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논란은 뜨거워질 것이고,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그 반론은 다양하고 다층적일 것이며, 집요할 것이다. <강철비2>를 둘러싼 논란에서 볼 수 있듯 노골적인 이념 전쟁의 형태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또 현재의 상징질서가 도달한 정련된 논의로 기본소득 논의의 결여와 과잉을 파고들 것이다. 아니, 본격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가져온 ‘재난기본소득’을 계기로



기본소득을 둘러싼 전쟁의 총성은 이미 울렸다고 보아야 하리라.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묵직한 두 책이 나와 주목된다. 하나는 양재진의 『복지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권정임 · 곽노완 · 강남훈의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이다. 두 책에 대해 말하기 전에 잠깐 고백할 것이 있다. 이렇게 제멋대로 맥락을 바꾸면 성현께 전혀 도리도 아닐뿐더러 내 무식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인 줄도 잘 알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다. 스스로 자립한 것도 아니고 아직 하늘의 뜻을 받은 것도 아니건만 나는 어느 때부터가 불혹의 상태다. 내가 말하는 불혹의 상태는 자신의 뜻이 확고해 세상의 온갖 풍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는 공자님이 말하는 그 불혹의 상태가 아니다. 나의 불혹은 나의 좁은 생각과 닫힌 사고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만한 사건과 조우하거나 아니면 ‘진리의 빛’이 담겨 있는 책을 읽어도 견고하게 나를 지키려 할 뿐 거의 아무런 사상적 지진을 경험하지 않는/못하는 그런 종류의 불혹이다. 솔직히 세상의 흐름과 관계없이 고집스럽게 나를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그러느라 바쁘다. 진정한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 지레 쓸데없는 번뇌에 빠진다. 고뇌에 빠진 척하기 위해. 그런데 이 두 책은 모처럼 나에게 꽤 강렬한 영감을 주었다. 모처럼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다.

먼저 양재진의 『복지의 원리』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맥락화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세상을 무어라 불러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내가 원하는 세상은 모든 세계인이 충분한 기본소득을 받는 세상이다. 나는 이러한 세상은 나 홀로 기본소득 세상이라 칭했는데, 동어반복이어서 마음에 들지도 않았을 뿐더러 역사철학적으로 맥락을 잡기도 힘들었다. 그런데 『복지의 원리』를 읽다 보니 여러 가지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었다. 우선 내가 꿈꾸는 세상이 이상적인 복지국가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실에 존재하는 가장 선진적인 복지국가의 경우도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복지)국가 상에 비추어 보자면 방향이 많이 달랐으며, 그러나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복지국가들을 이정표 삼고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복지의 원리와 복지를 둘러싼 여러 다양한 구성요소와 역사에 대해, 그리고 현재 복지국가들이 서 있는 자리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준 『복지의 원리』덕분이다.

하지만 『복지의 원리』에는 내가 선뜻 동의하기 힘든 구절들도 있었다. 아니, 많았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대목.

개인은 태어나 아무 문제없이 행복할 때도 있지만,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여 삶을 살아간다. 아프기도 하고, 직장을 잘 다니다가 실업에 빠지기도 하며, 당장 먹고 살기 바빠 별다른 준비도 해놓은 것이 없이 나이 들어 은퇴하기도 한다. 살길이 막막할 때도 있다. 과거에는 이 모든 어려움을 개인과 가족이 극복해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가 각종 사

회보장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보호해준다. 복지국가 시대가 열린 것이다(양재진, 『복지의 원리』의 일절).

복지국가를 로빈 후드Robin Hood 모형과 돼지저금통piggy bank 모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로빈 후드 모형은 의적 로빈 후드가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눠주듯이, 고소득층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층에게 복지를 나눠주자는 것이다. 돼지저금통 모형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기보다는, 사회적 위험이 있는 곳에 함께 모은 저금통을 열어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필자는 돼지저금통 모형에 입각해 한국 복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했다. 돼지도 크게 키우기를 바란다. 그래야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튼튼한 한국경제, 목직한 돼지저금통을 기대한다(같은 책의 일절).

양재진의 『복지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복지국가 시대’에 진입한 까닭에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간혹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국가가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을 보호해주는 시대를 살고 있다. 물론 국가의 보호가 충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 개선을 통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혹 이 보완을 통한 지속가능성 대신에 로빈 후드식 복지국가를 꿈꾸는 이들이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한 이상주의 원리주의에 빠지면 복지국가의 토대가 무너진다. 사회보장제도의 설계는 냉철한 이성의 눈에 의거, ‘사회공학의 차원에서 복지국가라는 건축물을 진단하고 보수하고 증축해야 한다.’ 오로지 그것이어야만 하며, 그래야만 이상적인 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이상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인 과잉의 감정으로 인해 복지국가라는 틀 자체가 해체되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 튼튼한 한국경제(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복지국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춧돌이므로.

이상이 양재진의 『복지의 원리』를 관통하는 복지국가의 상이자 그 복지국가에 대한 역사철학이다. 제대로 된 복지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내건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내가 예상했던 몇 가지가 없었다. 우선, 이곳에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에 봉착’한 이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었다. 노력해도 노력해도, 아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개선되지 않는 생활에 대한 그들의 공포와 불안, 분노는 물론 공공부조의 대상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유형 무형의 편협의 시선에 대한 모멸감 등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은커녕 아예 안중에 없는 것처럼 보였다. 『복지의 원리』에는 여전히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은 물론 건강과 몸과 영혼을 팔아야 하는 하위주체들의 생존위기가 없다. 대신 잘 살다가 아프기도 하고 실직을 하는, 그러니까 어쩌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는 중산층이 있을 뿐이다. 『복지의 원리』

는 바로 이런 현실인식의 토대 위에서 복지정책을 설계하며, 그런 까닭에 현재의 복지정책을 약간씩만 수정해가면 된다.

이런 현실인식에 기초해 있으므로 『복지의 원리』에는 당연 ‘복지의 역설’이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복지정책은 역설적이어야 한다. 아니면 서로 충돌하는 이중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대라고 표현해도 좋겠다. 복지정책은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들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촘촘하면서도 따뜻하게 짜여져야 하지만 곧 자기완결성을 지녀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필요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 복지정책이 필요하지 않도록 자멸적인 요소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의 소외된 존재들을 감싸안으면서도 이 사회에 소외된 존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전체를 바꿔나가는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쓸모 없는 실존으로 격하된다는 것, 혹은 모더니티의 추방자가 된다는 것은, 그 이후에 사회가 아무리 따스한 손길을 뻗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이다. 그러므로 복지정책에는 최종적으로는 복지가 필요없도록 하는 사회적 대안에 대한 모색이 같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복지의 원리에는 이런 고민이 없다. 사회로부터 쓸모없는 실존으로, 혹은 업적선으로 추방된 하위주체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복지의 원리』에는 최근으로 접어들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 혹은 불평등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다. 흔히 하는 말로 아직 본격화되기도 전인데 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동의 위기를 넘어 노동의 종말 시대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해지면서,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사라지고 대신 대부분의 존재가 프레카리아트가 되고 있다. 여기에 그 불안정 노동의 형태도 점점 더 불안정해져 이제 초단기 고용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복지의 원리』에 이러한 위기의식이 없다. 오히려 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더 많은 직종이 생겨날 것이고 그러면 노동의 위기는 곧 해소될 것이라 전망한다. 『복지의 원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의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조시켜 그것을 기반으로 ‘과잉의 복지’(대표적으로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그것은 복지국가의 주춧돌인 튼튼한 한국경제를 근간에서 뒤흔드는 실책이 될 것이라고 경계한다. 『복지의 원리』에 따르자면 한국경제는 계속 튼튼할 것이고 그러면 거의 자동적으로 복지정책은 개선될 것이니 이를 믿고 우리 모두는 로빈후드가 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 복지정책이 개선되면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이 좋아져 사회적 위험을 대비한 큰 돼지저금통을 키울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각 개인이 위험에 처할 땐 큰 몫의 선택적 보상이 주어지고……그러면 되고…… 있을 수 있는 발상이다. 아니 흔한 발상이라고 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복지정책이 바로 이런 발상에 기초해 있으므로. 하지만 이 발상에는 괄호쳐져 있는 것이 많다. 자신의 위험을 미리 대비할 수 없는 존

재들, 핀셋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소외된 존재들, 자동차보험을 들고 싶어도 보험은커녕 자동차를 꿈꿀 수조차 없는 이들, 아니만 주변의 편협의 시선 때문에 죽음을 고민하거나 그 시선을 피해 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숨어드는 존재들, …존재들, …존재들.

이러한 하위주체가 고려되지 않은 복지정책을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이라 이름할 수 있으리라. 아니, 그렇게 이름할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야 하리라. 이러한 규정에 저자는 반문할 수 있으리라. 스웨덴식 사민주의를 꿈꾸는 나에게 신자유주의자라니! 하고 말이다. 한때 저자가 사민주의를 꿈꾸었다는 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출발선을 유지하려면 세상이 변하는 만큼 자신도 변해야 한다. 세상은 이미-재난적 상황인데 이미 지나 버린 고공 성장시대에나 가능할 법한, 사실은 그러한 시대에도 하위주체들에게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복지를 기획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는 사민주의자이지만 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인 그것이 나오는 수밖에 없다. 초발심을 잊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걸면서도 결국은 휘절하는 것은, 오히려 초발심을 잊지 말자고 주문을 거는 사람들이 더 변질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별한 일이 아니다. 흔한 일이다.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이라는 책을 접했을 때 퍼뜩 떠오른 사상이 있었다. 가라타니 고진. 가라타니 고진은 트랜스 크리티크 이후 아주 획시기적인 사상적 전도顛倒 혹은 전도의 사상사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세계사의 구조 이후부터 자연과 인간 제국의 구조 철학의 기원 등을 통해 세계사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세계사의 구조 등은 이제까지의 세계사의 변화와 구조를 ‘생산양식’이 아닌 ‘교환양식’이라는 관점으로 전혀 새로 서술한다. 논의의 초점만 바뀌었을 뿐인데 전혀 새로운 세계(사)상의 펼쳐지는 대목이 흥미로웠다. 뿐만 아니었다. ‘생산양식’의 관점으로 볼 때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파국 대신에 ‘교환양식’의 관점에서 보자, 그 ‘교환양식’ 중에서도 ‘증여와 호수성’의 잠재성에 주목하자 현재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도 했다. 놀라운 경험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발상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었다. 결과적으로 인류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구 전체의 생명을 파국에 처하게 만든 현재의 통치성을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그와 다른 기준점으로 세상을 읽는 것. 그럴 때만이 그간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파멸의 문명에 스스로 가속 페달을 밟아왔는지가 명확해지고 그 파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힘겹게 그 존재를 드러낸다는 걸 세계사의 구조 등은 알려주고 있었다.

그러던 차 ‘분배정의’를 전면에 내건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이라는 책을 만났다. ‘분배정의’라니! 이거, 전혀, 새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정의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엿볼 수 있겠다 싶었다.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가 어떤 정의에 기초해 있었는데 그 정의를 좇다 보니 지구 전체가 지금과 같은 한계상황에 직면했고, 그러니 그 대신 분배정의를 정의의 중핵으로 삼아 현



재의 시스템을 재구성하면 그간 잘못 설정된 정의 관념 때문에 누적된 모순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그 분배정의를 구현하고자 할 때 가장 최적화된 제도는 무엇인가 하는 논의가 차례대로 펼쳐지겠구나 기대했다.

하지만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은 내 기대와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기대와 달라 의아했지만 책을 훑어가면서(사실 꼼꼼히 읽고자 애를 썼다. 하지만 내 수준에서 꼼꼼히 읽었다고 해야 훑는 수준밖에 될 수 없었다.) 생각이 달라졌다. 이 책의 서술 방식도 훌륭하다 싶었다. 크게 세 가지 점이 눈에 띄었다.

우선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일차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는 특정한 소득을 모두가 분배받는 것이 정의로운가 차원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전제대로 기본소득을 분배정의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한다는 점.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은 ‘특정한 소득을 모두가 분배받는 것’을 정의론의 관점에서 ‘분배정의’라고 이름하고, 이 ‘분배정의’야말로 ‘사회정의’ 혹은 ‘사회적 정의’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통로라고 명시한다. 즉 ‘분배정의’를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기본소득이 제도화되면, 또는 기본소득을 통해 ‘분배정의’를 실현하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충족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사회적 정의’ 혹은 ‘사회정의’가 구현된 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목표점이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나 빈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다음으로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이제까지 제출된 다양한 ‘분배정의’ 논의 중 가장 바람직한 ‘분배정의’의 개념을 확정하고 그 분배정의를 실현하는데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와 제도가 가장 유효한 방안임을 촘촘하게 증명한다는 것이다.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은 ‘공동체의 근본가치를 실질적으로 평등한 기회와 이에 기초하는 실질적 자유로 구체화하고, 이 근본가치에 기초하여 분배정의의 원칙을 추론’하는데,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이 제시하는 ‘분배정의원칙’은 바로 ‘기여에 따른 분배와 공유부에 대한 평등한 배당’이다.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에 따르면 이제까지의 정의론 대부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분배정의의 원칙이 ‘기여에 따른 분배’만이어서는 안 된다. ‘기여에 따른 분배’ 원칙은 ‘공유지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공유권만이 아니라 공유지의 생산·재생산에 대한 직간접적 기여’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실질적으로 평등한 기회와 실질적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여에 따른 배분과 공유부에 대한 평등한 배당’이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 즉 전 지구에 전면적인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의 도입에 따른 분배시스템의 획시기적 전환, 이것만이 분배정의의 원칙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 전체의 숨통을 죄고 있는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의 도입을 통한 분배 방식의 전환만이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경제

적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 초단기 고용 등의 문제는 물론 파멸 직전의 생태 위기적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은 현재의 지구생태계에 비추어 가장 바람직한 분배정의의 원칙을 정립하고 더 나아가 가장 바람직한 분배정의 원칙의 가장 바람직한 현실적 제도로 기본소득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정의론의 관점에서 왜 기본소득이어야 하는지를 그 어떤 논의보다도 명확히 한 셈이다. 아직도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필연성에 무심하거나 기본소득을 제각각의 이유로 거부하는 이들을 논박하고 설득해야 하는 바로 그때에 왜 다른 것이 아닌 기본소득이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소중한 책이 나온 것이다.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에서 흥미로웠던 또 하나의 지점은 이 책에서 행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定義)이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현물소득이다.’ 이 책의 첫 문장이다. 그러니까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은 분배정의 원칙에 의거, 기존의 기본소득의 논의에 또 다른 문제를 외삽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기본소득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만 분배정의 원칙에서 볼 때 기본소득의 정의(定義) 혹은 기본소득이라는 정의(正義)에 부합하며, 더 나아가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이 시도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또 다른 정의와 그에 따른 기본소득 범위의 확대는 느닷 없다는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기본소득 논의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듯하다. 기본소득을 제도화하고 입법화할 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총체적이고도 전면적인 관계 재설정=필수적 일터, 그 문제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촉구로 읽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에 포함시켜 현금소득이 아닌 현물소득으로 지급하자고 한 영역은 ‘교육·보육·돌봄·의료 등의 사회서비스’이며,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기본소득이 도입·실현될 경우, 기존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사회서비스는 현물기본소득으로 통합되어 더 강화되어 가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4.

‘예전처럼 한다는 것’의 무책임성 ; 『오늘부터의 세계』의 경우

여전히 혼돈이다. 특정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전환기, 식민지 시기의 비평가 임화의 표현을 빌자면 “신시대의 탄생이나 구시대의 사멸이 모두 가능적이었을 때” 즉 “양자의 승패가 아직 확정적이지 아닐 때”

라고 받아들이며 혼란 속에서 산다지만, 오늘날이야말로 전환기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이런 혼돈을 경과하고 있는 만큼 어쩔 수 없이 소위 세계의 석학이라는 이들이 오늘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게 된다. 학식이 많고 깊은 사람들 아닌가. 세계 전체 역사에 대한 통시론적 성찰과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공시론적 통찰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들이니,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확실한 나침반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소위 세계적인 석학들에 대한 기대를 나만 갖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세계적인 석학들의 오늘날에 대한 진단을 모은 책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책들 중 내가 집어든 책은 ‘세계 석학 7인에게 코로나 이후 인류 미래를 묻다’라는 부제가 붙은 『오늘부터의 세계』(제러미 리프킨 외 인터뷰, 안희경 지음, 메디치, 2020)이다.

『오늘부터의 세계』에는 제러미 리프킨, 원테젠, 장하준, 마사 누스바움, 케이트 피켓, 닉 보스트롬, 반다나 시바와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내로라하는 학자들인 만큼 들을 말이 많다. 가령 이런 것이다. 제러미 리프킨은 지금은 제3차혁명(제러미 리프킨의 규정: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생물지역 거버넌스를 주요 방향으로 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인터넷 혁명, 에너지 분야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이동 분야의 전기 및 연료전지 차량으로의 대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삶의 패러다임을 지칭함)의 시대이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의 과정에서 그린 뉴딜 분야에 ‘30년 동안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측한다.

중국의 문명학자인 원테젠은 중국을 비롯 동아시아가 코로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국가들에 아직 남아 있는 마을공동체적 문화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것에서 볼 수 있듯 불합리하게 진행해온 세계 자본화 흐름을 되돌려 공동체기반 농업 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지금 지구 사회를 ‘혐오사회’로 규정하는 마사 누스바움은 코로나19 위기와 그에 대응하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회의 잠복된 몇 가지 혐오를 다시금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위기적 상황이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들에게도 동정심을 갖게 만드는 그 어려운 일을 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연히 누스바움은 이 위기적 상황에서 되살아난 연민과 자비 등의 사랑의 감정을 더욱 고양시켜 우리 사회의 일상화된 혐오를 극복하기를 희망하는 바, 그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품격을 누리는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것, 예컨대 사회안전망(의료 시스템 강화, 최저임금 보장,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줄면 혐오도 줄 것이라고.

한편 영국 요크셔대학의 역학과 교수이자 『평등이 답이다』의 공동저자인 케이트 피켓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다시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 그러니까 경제적 박탈자와 소수자들이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골적으로 노



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미래에 감염병이 팬데믹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막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사회구성원들이 회복 탄력성을 갖추도록 사회 조건을 변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이 우리의 사회생활과 행복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원인이라면 이것도 숨 쉬는 공기만큼 정치인과 대중의 관심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미래 어느 시점, 세상이 무너질 수 있는 발명이나 발견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반무정부 상태에 계속 머무른다면 문명은 몰락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이 책으로 처음 만나게 된 닉 보스트롬이 한 말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같은 대학교 인류미래연구소 소장이라나다. 말 그대로 인류의 미래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가 예측하는 미래는 묵시록적인 듯하다. 인류가 공멸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너무 많은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너무 분산적이라는 것이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중대한 국제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능력’이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19도 초기 동아시아의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지금처럼 어마무시한 재앙의 수준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을 거였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들어 핵무기, 생명공학작 재난, 세계화에 따른 범죄경제(이는 닉 보스트롬 인터뷰 다음에 수록된 반다나 시바의 인터뷰에 나오는 용어)의 확산과 심화 등 중대한 국제 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지구적 재앙이 도래할 거란다.

마지막 인터뷰는 반다나 시바가 장식했다. 반다나 시바는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현 지구의 경제 전반이 ‘자연을 죽이고 사람들의 삶을 빼앗는’ 범죄 경제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반다나 시바는 지금의 지구적 현실을 ‘한줌의 남자들이 나머지 사람들에 맞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단지 임대료를 걷는 구조에 기대어 모두의 가치를 끌어갔어요. 예전에는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걷었지만 이제는 디지털 수수료라는 임대료를 걷습니다. ……탐욕으로 꽉 찬 다섯 남자들(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구글(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을 지칭함-인용자)이 우리들을 휘두르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가슴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음을 기울여,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어머니 자연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겁니다. ‘어머니 자연이여, 그동안 당신을 폭력적으로 대했습니다. 우리가 물러섰을 때 당신은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는 당신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에코페미니스트다운 말이었다.

『오늘로부터의 세계』에 이끌린 건 마사 누스바움과 반다나 시바가 과연 이 혼돈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솔직히 마사 누스바움은 기대와 달리 논의의 밀도가 떨어진다는 인상이었고 반다나 시바의 이야기는 강렬했다. 아마도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논의의 열도에

달라진다는 느낌이었다. 물론 이 차이는 마사 누수바움과 반다나 시바 사이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늘로부터의 세계』의 인터뷰에 응한 이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였다. 코로나19를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사태로 보느냐 아니면 전지구적 위기의 현상 형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누구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반면 또 다른 누구는 문명사적 전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뚜렷한 공통점도 하나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이 재난에 가까운 위기적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할 만한 구원의 길을 모색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닥쳐온 위기 앞에서 당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넘어서려 힘을 찾는 냉정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위기 속에서 더욱 짜랑짜랑해지는 이들의 이 정신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어받아야 할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었다.

눈치챈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오늘로부터의 세계』를 말하면서 말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다. 장하준의 인터뷰이다. 에두르지 않고 말하면, 『오늘로부터의 세계』에 실린 여러 인터뷰 중 내게 제일 와 닿은 인터뷰는 장하준의 그것이었다. 『오늘로부터의 세계』는 내게 ‘장하준의 재발견’으로 기록되고 기억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장하준의 인터뷰는 강렬했고 또 공감되는 바가 많았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다른 인터뷰에는 없는 어떤 부분 때문이었다. 장하준의 인터뷰는 다른 인터뷰에는 없고 그의 인터뷰에만 있는 것이 있었다. 많이들 짐작하고 있을 것, 바로 한국적 현실에 대한 진단이다. 날카로웠고 경청할 바가 있었다. 예컨대 인터뷰 마지막 말인 다음과 같은 것.

이번에 한국 참 자랑스럽죠.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제일 잘 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아직요 창피한 세계 최고 기록이 너무 많아요. 자살률 1위, 간단히 볼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사람 죽는 건 안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 죽는 건 괜찮은가요? 출생률은 거의 세계 최저에, OECD에서 남녀 임금 격차는 최고예요.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이민 가고 싶다는 나라입니다. 잘한 거는 자화자찬이라도 해야 하지만 잘한 걸로 못한 것을 덮을 수는 없어요. 잘 해낸 경험을 계기로 우리가 힘을 모으면 큰일도 할 수 있구나 깨달았을 때 큰 개혁을 해야죠.

복지 제도도 제대로 도입하고, 교육 제도도 최대한 공정하게 개선하고, 세제도 최대한 공평하게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연대도 조성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고, 할 일이 많죠. 코로나19 잘 대처했다고 자축하면서 계속 건전 재정 외치고 예전처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이 위기가 끝나고 5년이 끝난 후에도 자살률 1위, 출생률 최저, 남녀 임금 격차 최고, 그런 한심한 나라가 될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제러

미 리프킨 외 인터뷰, 안희경 지음, 『우리는 왜 마이너스 성장을 두려워하는
가장하준』, 『오늘로부터의 세계』, 메디치,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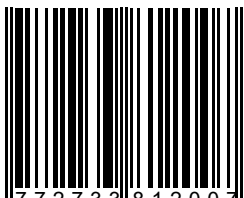
나는 현재 한국 사회가 큰 위기적 상황이라고 보는 편이다. 우선은 코로나19로 조우하게 된 무시무시한 실재적 상황 때문이다. 이 정도로 불평등 사회였다니! 놀라고 있고, 이렇게 증오와 혐오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니! 경악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위기적 상황은 이 위기적 상황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대응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전광훈의 추종자같은 말임미? 하고 되묻는 분이 많을 줄 안다. 우리나라야말로 내로라하는 방역 선진국 아닌가. 하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사회가 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상징되는 위기적 상황에 대한 대응이 영 못마땅하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질병 그것에 대한 대응은 압도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장하준의 말대로 그것에 스스로 취해서 코로나19로 드러난 재앙적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고통받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운 좋은(이 정도면 운이 나쁘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람은 일에 치어서 툭 하면 과로로 죽고 사고로 죽는다. 자살사회, 피로사회, 사고사회라고나 할까, 뿐인가. 매일매일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고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은 무감각하고 무덤덤하다. 일상화된 위험에 대해 그 어떤 위협도, 위기도 느끼지는 않는, 그래서 말 그대로의 위험사회. 그러니까 자살사회, 피로사회, 사고사회, 위험사회 등등, 이것이 이번 코로나19로 우리가 매일 목도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이고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런데, 하, 이러한 자화상을 보고도 우리 사회가 하고 있는 일은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아니 ‘예전처럼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모범적인 대응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이제 선진사회 모범적인 사회이니 해오던 대로 하면 된다는 것. 아니 조금씩만 바뀌어나가면 된다는 것. ‘몇십 년에 다시 찾아온 저 푸른 하늘을 보라! 이동을 약간만 줄이자’라든가, 고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 들고 정작 고용된 사람들도 기업의 약탈적 이윤을 위해 ‘가짜자영업자’로 위장하는 상황인데도 전국민고용보험만 도입하면 된다는가, 수많은 택배노동자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으니 택배료를 인상하자든가 하는 식의 대응이 이 위험천만, 일촉즉발의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내놓고 있는 대책들이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안이하고 태연한 대책, 그러니까 미봉책인가 하는 것은 자세히 따져보지 않아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대책으로는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는커녕 막아세울 수조차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대안의 수립이다. 대안이 아니고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참을 수 없는 경제적 불평등과 참을 수 없어 폭발 직전인 아니 수많은 영역에서 이미 폭발하고 있는 분노와 혐오와 증오의 정동들, 그

리고 과잉과 과소의 불균형에 따른 피로(과로)와 불안들, 현재 지구의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위기 등을 넘어설 수 없다. 다시 말해 소득과 일자리를 고루 나누어 과로와 불안을 줄이고 좀 더 게을러지고 가난해지도록 노력하여 지구의 생명체들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서둘러 현재 제출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혁신적이며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기본소득이라는 상상을 제도화하고 입법화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현재로서는 코로나19라는 실재적 사건 혹은 재앙적 선물이 우리에게 알려준 위기적 상황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너무 자주 반복해 지겨울 줄 안다. 하지만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이 우리가 뛰어야 할 로도스이고 우리가 딛고 설 거인의 어깨다.

기보 20가을 #006
문화도시



9 772733 812007

ISSN 2733-8126

03